不實企業整理制度의 經濟的 分析
南 誠 聰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 比較
李 永 燦

貧困對策의 再照明：協同組合을 통한
脫貧困運動의 活性化를 中心으로
權 純 源

北韓의 投資環境과 對北投資戰略
全 洪 澤

談合規制의 效率化를 위한
競爭政策 方向
申 光 淑

韓國의 經濟成長：Kaldor法則에서
成長樣式分析까지
文 字 植

補正：傳貫의 經濟的 效果와 改善方案
朴 元 峽
金 寬 永
不實企業整理制度의 經濟的 分析 …… 南 逸 聰… 3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 比較 ……………… 李 永 謌… 41

貧困對策의 再照明：協同組合을 통한
脫貧困運動의 活性化를 中心으로 ……… 權 純 源… 65

北韓의 投資環境과 対北投資戰略 …… 全 洪 澤… 89

談合規制의 效率化를 為한
競爭政策方向 ……………………… 申 光 深…121

韓國의 經濟成長：Kaldor 法則에서
成長樣式分析까지 ………………… 文 宇 植…161

補正：傳貨의 經濟的 效果의 改善方案 …… 朴 元 巖…181

——— 編 輯 陣 ———
委員長 朴 俊 卿
幹 事 朴 元 嚴
委 員 金 俊 經 南 逸 聰
盧 基 星 孫 在 英
申 光 深
編 輯 申 東 祎
編輯秘書：編輯委員會（960-8313）
購読秘書：發刊資料相談室（960-3283）
論評 및 書評 寄稿案內

本 季刊誌는 本誌에 發表된 論文과 本院에서 發刊되는 研究叢書 및 其他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専門家들의 論評 혹은 書評을 揭載하고 있습니다.

研究主題 및 其 內容과 相련되는 研究方法論 혹은 國家政策上の 問題을 表出시켜 向後
의 研究課題와 政策方向 設定에 寄與하고，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의도 批評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는 것이 그 趣旨입니다。 이를 謹知하시어 下面와 같은 要領에 의하여 虚
心坦懐한 所感과 批評을 寄稿하여 呈示願 감사하겠습니다。

첫째，寄稿는 200字 原稿紙 基準 30枚 內外로 限定하되 原稿紙에 淨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論評은 該當論文에 담긴 誤謬 혹은 問題을 內容으로 하여 基底的論文이 發刊된
後 3個月 以内로，書評은 該當報告書의 主要內容 紹介，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向後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여 原則의으로 報告書가 發刊된 후 6個月 以内로 作成
하여 寄稿願 바랍니다。

세계，原稿是 郵便 혹은 人便으로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寄稿된 論評과 書評은 本院 所定的 審查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論評은 該當
論文 執筆者의 報答과 함께 揭載하겠습니다。寄稿된 原稿는 原稿料を 支給합니다。
不實企業整理制度의 經濟的 分析

南 逸 聰

不實企業整理의 經濟的 性格은 기업의 존속과 債權-債務的 調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本稿에서 論者는 基礎 존속여부의 결정과 債權-債務的 조정지 사 용될 수 있는 效率性 과 公正性的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過去 및 現行 基礎管理制度와 合理化 措置의 내용을 評價・分析하고, 債務重新安排을 제시하였다. 過去 및 現行 基礎管理制度와 合理化 措置는 企業과 企業主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존속결정과 債權-債務調整가 效率性과 公正性的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本稿에서 제시한 主要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不實企業整理時 基礎존속여부의 결정은 過去에 種親 価值과 基礎資產의 現在価値의 相對性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債權-債務의 조정은 분배의 債務契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債權-債務의 調整은 債權-債務의 交換과 第3者 買受方式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不實企業에 대한 儲蓄금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美國의 "크레이슬러"사의 경우와 같이 株式轉換附 債權-債務形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序論

어느 나라, 어느 경제를 막론하고 모든企業이 成功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不實企業

筆者：本院 研究員

* 草稿을 읽고 유익한 비평을 해 준 本院의 金 偉經 博士과 承元鎬, 劉承勳 博士 등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감사드린다. 또한 自職정리 에 힘써 준 李京美 研究員과 원고작성에 애를 쓴 文永權 研究助員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은 基礎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基礎적으로 不確実성에 기인한다. 購者를 비롯한 企業의 의사결정은 미래의 需要, 費用, 情報 업체의 活動, 정부의 政策 등 의사결정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장래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이며, 이러한 변수들의 변동에 따라 大部分의 기업은 不 實化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不實企業의 整理制度는 자본주의 경제가 상
비해야 할 필요요건이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산업화는 역사적 오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실기업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처리하는 여러 제도 및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정책의 농림수산은 형성한 방법별이나 논란이 대상이 되었으며, 부실기업 정책을 위한 논란은 최근 국가난국사건에 대한 변형관련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부실기업 정책의 중요성과 이 문제 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정책에 대한 의미로는 경제학적 분석이 매우 드물었으며, 따라서 부실기업 정책에 대한 토의도 과상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정책의 경제적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부실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이 지고 있는 징벌적 문제와 기업 자체의 정책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부실화되어 책임의무를 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통상성에 의해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처리가 채권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충분히 있으나 일시적으로 제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수탈시키는 데는 부실기업 정책의 목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부실기업 정책의 목표는 부실기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존속시키는 한편, 채권, 채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 정책의 목표는 사후적으로 평형화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적으로도 자본가, 경영자,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주주일주주에게 저자에게 판단된 부실기업 정책의 운영은 사후적으로 형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주주가 채무의 포기의 위험도가 높은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부실화의 확률을 높이고, 나이가 투자자들의 경감심은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원활한 자본조달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특정인이 의해 자의적으로 기업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납되는 사회에서는 경제체제가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거래의 자본이 이의를에 의해 이용을 추구하고 임의적인 정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광장적'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원이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못하고, 낙태의 현재로 지불되어 경제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2)

따라서 이상적인 
不實企業整理制度는, 첫
째로 사회적 관점에서 效率의 
인 投資行態를 
유도하고, 둘째로 
企業의 收益性 
惡化가 
市場不動의 상태에 빠저 
債権者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갈 위험이 큰 
企業를 事前에 探知하
여 부실화에 따르는 社会적 
비용을 사전적
으로 預防하며, 獲得 
不実화에 따른 문제
가 발생한 이후에는 장래의 
書面性을 기준
으로 하여 
企業 자체의 寫続く부에 대한 결
정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債権者와 
株主간의 分配를 行政에 맞게 調整하는 制度가 될
 것이다. 4) 
위에 열거한 기능 중 첫번째와 두
번째 기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
로 金融産業에서 담당해야 하며, 실제로도
생산국에서는 금융체계와 투자자들이 자본
의 이윤 또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의 일
부로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不実화에 따른
문제가 
표현되고 이해당사자의 일부가 清
算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후적인 처리과제
는 원칙적으로 司法府에 맡겨지는데,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計劃案의 作成에 참여함으로써 處理結
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현실적으로 위에 설명한 이상적인 不實企
業整理制度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情報不均衡(Information asymmetry)과 去
來費用(Transaction cost), 그리고 政府의
失敗에 기인한다. 債権자나 일반주주들은
大株主와 經営陣의 行動을 完璧하게 감시
(Monitor)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財
政状態나 收益性 등에 관하여 大株主나 經
営陣에 비해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大株主와 經営陣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債権者나 一般株主에 비해 우월한
자신의 情報을 慮用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비효율적인 투자가 대출이 발생하고 不実化
를 통제하고자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이러한 道德의 危険(Moral hazard)과
逆選(Adverse selection)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不實企業整理制度를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따르며 이 비용이 높음을 국정
리제도의 效率性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不實企業의 경제과정은 많은 비
용을 수반하며, 이는 整理制度의 
비용을 處理하기고 整理시의 수익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실패한 정부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위에 언급한 理想의 
目標가
배치되는 政策를 실행하는 데 따른 問題點

2) 어떤 사람이 A라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은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A보다 작은 가치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
다.
3) 물론 부실화가 되기 이전에 시장에 100% 담
지할 수는 없으며, 場合에 담지
이 투입되는 비용과 이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
를 사전에 담지할 확률이 最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사법부에 의한 처리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처리를 뜻한다. 이 법의 관행으로는 銀行管理
와 같이 이해당사자간의 私的 契約에 의한 처
리와 행정부의 豈理化措置 등이 있다.
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 가능한 대책의 제도는 가능한 한 거래비용과 징부의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력을 보완할 계약조건에서 이상적인 목표에 근접한 제도가 될 것이다.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나 제도가 부실금품과 정부에 따라 제정적 여건을 체한 제도에 대규모의 자원을 공급하는 것도 부실기업을 처리하므로 불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 중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과거의 정책과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과거의 정책과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본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부실소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과거 및 현행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제3장에서는 부실소 정책을 드러낸 경제적

이슈를 논란의 주를 정리하였다. 제4장들과 제5장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II. 부실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

1. 부실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실기업의 정의는 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채를 계약조건에 따라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이 정의는 귀중하게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의 정책의 정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부실기업을 정리한 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정기적 수익성이란 원칙적으로 정책의 대상기업의 투자, 마케팅, 인력관리, 재무관리 등 주요 운영 사항 전체에 걸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 정책에 의한 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를 계약조건에 따라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이 정의는 귀중하게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정기적 수익성이란 원칙적으로 정책의 대상기업의 투자, 마케팅, 인력관리, 재무관리 등 주요 운영 사항 전체에 걸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 정책에 의한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를 계약조건에 따라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이 정의는 귀중하게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크다면 이 기업은 존속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반대로 경우 이 기업은 청산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자산의 요소와 부관한다. 예컨대 자산가 전부하여 자산과 자본이 일치하고 따라서 자산 및 저정력의 역과 따른
도산의 위험을 없는 기업이라 할더라도 장기이용이 자산의 기회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반면 부채가 자본금의 10배에 달하고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시점에서 제산한 기업의 장기적 수익이 정산시

6) 즉, 企業存續與否에 대한 결정은 부채가 사라졌다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내려야 한다.
7) 즉, 本稿에서의, 청산에 의한 문제에 관한 이는 현행제도를 따르는 것이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미 이 사람의 자본의 기회비용이 고가의
인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평가할 때 이
기업은 경제적 사망으로 판단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기업의 장래의 수익성에 대
하여, 유리와 채권자간의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인
적정화를 불가능하며 위의 구분은 의미가 감
소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들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위의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
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구분
은 불사유적 정리에 대한 기본의 기준으로
서 저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위의 가정
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 대처함에 있어서
용용점이 될 수 있다.

2. 불사유적 정리의 현황

과거에 번병이 사용되었거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사유적 정리제도로는 청산,。
혁명, 정리, 분할, 전트리, 협약화자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운용실적을 요약하고자
한다.

가. 정리

정리는 정책의 불사유적 정리의 영향
는 불사유적 정리의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을 존속시키는 한편 자산들의
채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은행과 기업간
의 공부적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즉 현재
의 기업 경영진에게 기업의 운영을 전적으로
양해를 원할 경우 자신이 제공한 채권의 회
의 정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
는 불사유적 정리에 대하여 주거매매청이 경영에
참여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은행관리에 은행이 기업의 자본과 채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부분의 관리와 기업의 경
영전반을 인수하는 권한의 두 형태가
있다. 1993년 9월 22일 현재 상장기업 설정
관리금의 기업은 17개이며, 대부분이
자본과 채무의 관리로 위주로 한 부분관리
를 받고 있다.

은행관리는 채무자와 채무자간의 협상을
통해 정산서에 비해 채무자와 채무자 모
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파격」을
일반 해결책의 하나이며, 양자간의 개선적으
로 동의할 경우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거 은행관리제도는 이
러한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부의 산업 지원공
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편의적으로
자산의 영업을 정식으로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정부는 1969~71년
기간대 단행한 불사유적 정리의 일환으
로 은행이 불사유적 정리를 관리하도록 정책하였
으며, 이는 1984~88년 기간중 실시된 불사유
적 정리가 정식으로 되돌아되었다. 8)

또한 이성숙·김준경(1993)에 의하면 19
93년 6월 현재 은행관리에 있는 기업의
41%가 1984~88년 기간중 실시된 불사유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관리기간</th>
<th>관리기간</th>
<th>관리기 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급행방직</td>
<td>법정관리</td>
<td>상업운행</td>
<td>91. 7. 19</td>
</tr>
<tr>
<td>협진양행</td>
<td>-</td>
<td>-</td>
<td>91. 10. 7</td>
</tr>
<tr>
<td>한양</td>
<td>직접운행관리</td>
<td>법정관리</td>
<td>84. 12. 9</td>
</tr>
<tr>
<td>진양</td>
<td>법정관리</td>
<td></td>
<td>84. 12. 19</td>
</tr>
<tr>
<td>공영토건</td>
<td>-</td>
<td>-</td>
<td>82. 8. 18</td>
</tr>
<tr>
<td>백산개발</td>
<td>-</td>
<td>-</td>
<td>87. 9. 8</td>
</tr>
<tr>
<td>남선품선</td>
<td>직접운행관리</td>
<td>의환운행</td>
<td>86. 4. 15</td>
</tr>
<tr>
<td>정풍물산</td>
<td>직접운행관리</td>
<td>의환운행</td>
<td>81. 1. 8</td>
</tr>
<tr>
<td>보르네오가구</td>
<td>의환운행</td>
<td></td>
<td>92. 3. 4</td>
</tr>
<tr>
<td>라이프투덕개발</td>
<td>직접운행관리</td>
<td>서울신탁운행</td>
<td>84. 7. 9</td>
</tr>
<tr>
<td>한신공영</td>
<td>-</td>
<td>-</td>
<td>84. 7. 24</td>
</tr>
<tr>
<td>삼익주택</td>
<td>제일운행</td>
<td></td>
<td>85. 11. 21</td>
</tr>
<tr>
<td>동양고속</td>
<td>조호운행</td>
<td></td>
<td>85. 5. 10</td>
</tr>
<tr>
<td>삼호</td>
<td>-</td>
<td>-</td>
<td>84. 2. 10</td>
</tr>
<tr>
<td>진흥기업</td>
<td>-</td>
<td>-</td>
<td>-</td>
</tr>
<tr>
<td>홍아해운</td>
<td>부산운행</td>
<td></td>
<td>84. 5. 15</td>
</tr>
<tr>
<td>태화</td>
<td>조호운행</td>
<td></td>
<td>93. 9. 22</td>
</tr>
</tbody>
</table>

資料：『每日經濟新聞』, 1993년 9월 24일자.

이것은 SILK노의 해석임을 밝혀드립니다. 실제로 회사자동차 관리하는 법원의 해석은 이러한 응답 자체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第4章에 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소상하게 나와 있다.

나. 法定管理

法定管理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不良企業의 清算을 막고 계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法院이 개입하여 債務을 凍結하고, 기업이 원리금 조기 상환의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企業의 價値을 增加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法定管理의 기본 취지는 財政的 不良企業의 清산을 막아 사회경제적으로 效率性을 높이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法定管理는 企業과 財권
지간의 협상에 의한 私的인 問題解決의 基礎이 소진된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마
지막 制度의 救濟装置이며, 일반적으로 不
實企業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이용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제도이다. 

法定管理

를 규제하는 「會社整理法」은 196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수정만 거쳤을

뿐 기본적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會社整理法」 제1조는 法定管理의 목적

을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개정의 가망이 있는 株式會社에 관하여 僚

권, 株主,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整理再建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本

稿의 정의에 따르면 財政的 不實企業이 法

定管理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法定管理의 範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法定管理는 不實企業 자체, 그 株主,

債権者 중 누구나 법원에 開始申請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負債를 整理期間內에 偿

불할 수 없거나, 연계기간내에 偿還할 경우

기업의 계작적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

되는 경우이다. 후자의 예로는 負債를 본래

의 破産조건에 따라 갚기 위해서는 높은 收

益성의 借入れ이 되는 자산을 단기간에 헐값

에 처분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되

며, 거부하는 경우 法定管理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고 해서 法定管理가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며, 최종적인 法定管理計画의 內容

과 그 許可及否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

작될 뿐이다.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管理人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會社財産의 管理與 整理計劃案의 作成이다.

10)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

고 債務不履行을 行為(act)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이 활발해지고 경제실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

해가 증가함에 따라 债務不履行을 행위가 아

닌 狀態(state)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후대

책도 처벌보다는 债務不履行이라는 상태가 이

발생한 상황에서 執事적인 措理방식을 갖

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法定管理制度는 이

러한 인류역사의 진보과정에서 탄생하였다.

11) 우리나라의 「會社整理法」은 1932년에 도입된

미국의 舊破産法(Bankruptcy Law) 제10장

(Chapter 10)을 모방한 日本法을 모방한 것

이다. 美国의 파산법은 1978년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會社整理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

11장(Chapter 11)으로 바뀌었다. 내용면에서

新法의 제11장은 舊法의 제10장에 비해 존속
시 기업의 純資産價值의 개선을 좀 더 합리적

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신법은 먼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증가요인과 수익감소요

인을 자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허용하였다. 이

러한 법 개정의 결과 「아스베스트」의 생산

업체인 「만빌」(Manville)이 현재는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양호한 상태에서 시장에 있을 「아스베스트」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소송에서 폐쇄하여 지배하게 될 재무의

예상액을 破産時에서의 과거자산가치에 반영하

여 법정관리허가를 받았다.

12) 註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許可의

허락이며, 許可의 견해에 의하면 마감한 법

의 해석이다.

13)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매일에 開始申請

許可가 결국 法定管理案의 許可로 이어진다.
일단 수립된 정리계획안이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15) 예컨대 全國投資金融協進會(1993)에 의하면 최근 인가된 실제 사례 중 정리담보권자와 정리 채권자 간의 채권을 6년간은 무리토로, 정리 후 12년간은 합리적으로 분할해결하는 정리 계획안이 있었는데, 이를 약 14%의 금리에 의해 현무채권을 하면 100만원의 부채 45 만원만을 상환하는 것이 동일하다. 이 기업은 당시 부채가 순자산의 2.5배에 달하여 정산시 100만원의 부채가 정금 4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범인 채권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값으로 조치한 경우 62만원의 가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보험의 경우는 일반채권자와 합치지라도 범인의 경우 정리계획은 첨단시 변제를 수 있는 금액에 미달되며, 정리담보권자의 경우 첨단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권자 평균에 비해 총원 높을 것이므로 이 정리계획이 정리담보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擔保權을 수반한 債權總額의 端元وضع의 정리계획이 단순히 期間破産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4 이상, 당보권을 수반하지 않은 채권총액의 2/3 이상, 의결권을 가진 株式總数의 1/2 이상.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할 때 계획안이 합법적이라면 법원은 계획안을 승인하며 法定管理가 시작된다.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해당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이라도 위에 언급한 法定多数에 의해 계획안에 동의되는 경우, 법원은 계획안을 거부한 여타 이해 관계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14)

法定管理가 시작되면 과거의 모든 負債에 대한 변제는 일시 효력을 상실하고 승인된 계획안에 의해 재정정리가 시행된다. 승인된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負債의 辦理期間 延長과 利子의 免除를 포함하며, 과거에는 심지어 負債의 元金을 薪滅해 준 경우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法定管理는 많은 경우 주주, 특히 支配株의 富を 증가시키는 반면 債權者들의 무기 감소되는 분배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의 公正性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5)

法定管理에 들어간 기업은 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자며 기업운영이 정리계획안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안에 따라 法定管理상태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기업운영이 계획안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계
차 계획안을 변경하거나 정리절차를 폐지하
게 된다. 물론 정리계정의 폐지는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더 이상
정리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다. 정리관리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비
교적期間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거래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이용할 가
치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고 株式會社의 수가 적었던 경제성장
初期에는 사용된 예가 드물다. 그러나 기업
의 규모가 커지고 株式會社가 증가함에 따
라 1980년대에 들어서 이 제도의 이용사례
가 증가하였다. 〈표 2〉는「會社整理法」에
의한 不良企業 處理結果가「司法年鑑」에 수
록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의 통계를 요약
하고 있다.

1983~91기간중 法定管理를 신청한 업체
은 총 327개 업체였으며, 이 기간동안 209
개 업체가 法定管理決定을 받았고, 57개 업
체가 收却 決定을 받았다. 한편 이 기간중
62개 업체가 終結処分을 받았으며, 53개 업
체는 결국 경영하지 못하고 廢止処分되어
清算되었다. 따라서 종결된 경우와 폐지된
 경우를 합친 경우 115건 중 약 54%가 종결
되었고 66%가 폐지처분되었다. 국제적인
비교는 자료의 미비로 가능하지 않으나,
66%에 달하는 궁극적인 폐지처분율은 일반
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원
에서 고려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 法定管理
를 쉽게 허용했다는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
다. 경영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 法定管理

<table>
<thead>
<tr>
<th>일</th>
<th>접수</th>
<th>처리</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전년미제</td>
<td>본년</td>
<td>개시결정전</td>
</tr>
<tr>
<td>1983</td>
<td>63</td>
<td>16</td>
<td>55</td>
</tr>
<tr>
<td>1984</td>
<td>77</td>
<td>25</td>
<td>82</td>
</tr>
<tr>
<td>1985</td>
<td>64</td>
<td>24</td>
<td>88</td>
</tr>
<tr>
<td>1986</td>
<td>35</td>
<td>9</td>
<td>104</td>
</tr>
<tr>
<td>1987</td>
<td>41</td>
<td>11</td>
<td>106</td>
</tr>
<tr>
<td>1988</td>
<td>44</td>
<td>18</td>
<td>104</td>
</tr>
<tr>
<td>1989</td>
<td>47</td>
<td>20</td>
<td>112</td>
</tr>
<tr>
<td>1990</td>
<td>29</td>
<td>14</td>
<td>126</td>
</tr>
<tr>
<td>1991</td>
<td>72</td>
<td>8</td>
<td>122</td>
</tr>
<tr>
<td>합계</td>
<td>327</td>
<td>209</td>
<td>57</td>
</tr>
</tbody>
</table>

資料：「韓國經濟新聞」, 1992년 4월 1일자.
다. 產業合理化措置

産業合理化措置란 불황에 빠졌거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産業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 産業내 企業의 統廃合, 資金支援, 競争制限 등의 措置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産業合理化措置는 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行政府의 産業政策의 일부이지만, 한편 그 대상이 결국 不実現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不實企業管理制度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즉 産業合理化措置는 궁극적으로 개별企業과 그 株主, 剰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效率性과 衡平性面에서 갖는 효과의 성격이 統廃合 등 不實企業管理制度와 유사하며, 많은 경우 銀行管理, 統廃合 등 不實企業管理制度의 이용을 수반해 왔다. 따라서 産業合理化措置는 不實企業管理制度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本稿의 분석의 대상이 된다. 〈表 3〉과 〈表 4〉는 1969년 이래 시행된 主要 産業合理化措置를 정리하고 있다.

〈表 3〉에 있는 1986년 이전의 産業合理化 措置와 〈表 4〉의 異同에 위치한 경쟁력 보완문료 4개 産業에 대한 措置는 정부의 産業育成政策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3공화국이 추진한 산업화과정은 기본적으로 行政府의 育成對象産業과 이 産業에 참여한 사람을 선정한 뒤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大規모의 資金을 貸出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國内外 需要에

<table>
<thead>
<tr>
<th>연도</th>
<th>합리화조치의 내용</th>
</tr>
</thead>
</table>
| 1969~71년의 기업합리화조치 | 3차에 걸쳐 시행  
1단계(1969): PVC, 합판, 자동차, 철강, 화섬 등 업종의 30개 부실기업체 정리  
2단계(1970): 56개 기업이 부실기업체로 지정되고 정리  
3단계(1971): 26개 부실기업체 정리  
산업은행의 출자관리, 산업은행·시중은행의 전면관리 및 부분관리,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통해 추진 |
| 1972년의 8·3조치 중 산업합리화조치 | 61개 업종을 산업합리화지원사업으로 지정  
철강, 비철금속, 선박, 전자 등 중공업분야 30개 업종  
PVC, 비료, 석유화학, 화공분야 8개 업종  
섬유 등 경공업분야 10개 업종  
대상업체가 시설적정화, 전문화·계열화, 기업합병, 재무구조개선, 기술개발 등을 도모할 경우 금융과 조세지원을 통해 지원  
산업합리화자금에 의한 금융지원  
합병시의 법인세·취득세 면제, 특별감가상각률 인상, 설비투자에 대한 국고보조 등 |
| 1980년의 중화환투자조사 정 | 대상산업: 발전설비 및 건설중장비, 자동차, 중전기기, 전자교류기, 디자인, 첨단금속  
70년대 집중계발된 중화학부문에서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간 합병 또는 생산전문화 유도 등을 통한 투자조사 정책  
투자조사기간 동안 구체(목표)와 조세보조금 및 특허출원에 대한 조세지원과 82년의 금리인하 등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경감해 주는 등 계속 지원 |
| 1984~85년의 불황산업에 대한 합리화조치 | 대상업종: 해운업, 해외건설업  
해운업과 해외건설업의 부실기업정리의 통폐합 또는 제3자 인수를 통해 진행  
통폐합 또는 인수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여신지원, 자산기본부의 부채에 대한 대출금의 탐감,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 |
| 1985년의 부실기업정리(「공업발전법」에 의거하지 않은 부실기업정리) | 개별부실기업정리와 업종별 합리화조치로 나누어 실시  
개별부실기업정리: 57개(49개는 「조세감면법」에 따라 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되고, 8개는 합리화정신 없이 정리) 기업이 제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  
업종별 합리화조치: 해운·해외건설업합리화의 보완책으로 21개 기업 정비  
정부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지원: 자산조건부채보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원금양상, 이자유예 또는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조세지원: 부동산 및 불용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및 주식인수에 따른 취득세 감면, 인수기업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세 원천징수면제  
부실기업정리관리대책으로 인한 시중은행의 수지악화보전을 위한 한은특용제공 |

<table>
<thead>
<tr>
<th>정책의보완분야</th>
<th>지정기간</th>
<th>임종상황</th>
<th>계획</th>
<th>실적</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차</td>
<td>1986.7~89.6</td>
<td>과다추력비수, 과당경쟁</td>
<td>차종별 생산생산화, 주요기계부품생산</td>
<td>현대, 대우, 기아, 동아자동차로 전문 생산체제 유지, 모기압과 전문업체별로 전문화 정착</td>
</tr>
<tr>
<td>건설중장비</td>
<td>1986.7~89.6</td>
<td>기술개발투자율 매출 액수 특도, 재무구조개선 및 기술 개발투자촉진을 위한 중기지원</td>
<td>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으로 전문생산체계 유지, 4.0%(1986)→5.4%(1987) 삼성중공업 500만원 증가: 양사평균 자기자본비율이 15.3%(1985)에서 17.3%(1987)</td>
<td></td>
</tr>
<tr>
<td>중전기기</td>
<td>1986.7~89.6</td>
<td>과양설비투자, 과당경쟁</td>
<td>기술개발생산생산화, 시설의 신, 중증 역체, 기술개발투자율 매출 액수 2.8% 확대, 효성중공업의 경영장 상화 지원</td>
<td>효성중공업 등 6개 업체로 전문화, 기존시설의 신규종합 없음, 1989년중 2.8% 수준의 달성예상, 1.7%(1985)→2.6%(1988) 한전이 효성중공업기업의 수의계약발 표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누적적자감 451억원(1985)에서 270억원(1987)으로 감소</td>
</tr>
<tr>
<td>정책력실천분야</td>
<td>86.7<del>89.6 89.7</del>92.6</td>
<td>노후시설 경쟁력상실</td>
<td>노후시설 폐기·개체 (3만 4,100대, 1,800억원 지원), 기술개발촉진, 한계기업의 전·폐업 유도, 시설의 신, 중증 제한</td>
<td>구조조정자금 2,530억원(1992.6 현저) 직기자동화전문기술제기술 도입자자기자본화기계개발</td>
</tr>
<tr>
<td>적 본</td>
<td>1986.7~89.6</td>
<td></td>
<td>생산자 제한, 규소형 생산업체 감축 (4개사 → 1개사: 인천 제철)</td>
<td>한복합화공업, 동부산업, 동일전공, 인천제철로 제한, 해당업체별로 생산감축 및 생산품목 전환, 인천제철: 생산중단, 나머지 3개사는 생산시설의 전환완료 또는 전환중, 계획대로 개체중 (5기→3기) 포항은 매년 공급계약을 체결</td>
</tr>
<tr>
<td>합금철</td>
<td>1986.7~89.6</td>
<td>전기로 감축 (5기→2기), 국내생산공단 안정공급</td>
<td>한국합금철칭량, 동부산업, 동일전공, 인천제철로 제한, 해당업체별로 생산감축 및 생산품목 전환중, 인천제철: 생산중단, 나머지 3개사는 생산시설의 전환완료 또는 전환중, 계획대로 개체중 (5기→3기), 포항은 매년 공급계약을 체결</td>
<td></td>
</tr>
<tr>
<td>가용기간</td>
<td>업종상황</td>
<td>계 획</td>
<td>설 적</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색가공업</td>
<td>1987. 1~88. 12</td>
<td>노후시설 경쟁력상실</td>
<td>- 노후시설 개체: 산업구 조조정자금 및 공업발전기금을 이용한 400억원 요구자 - 기술개발촉진: 50억원 요구자 또는 출연</td>
<td>- 1988년 현재 산업구조조정자금 (5% 200억원 지원)</td>
</tr>
<tr>
<td>무기정화학비료</td>
<td>1987. 12~90. 11</td>
<td>노후시설 경쟁력상실</td>
<td>- 비료생산업계의 민영화 지원: 영남화학으로 부적절한 제조기업군에 대한 여건적도 및 기업자협정규정 적용예정</td>
<td>- 동부석유에서 영남화학 인수 (1988. 2)</td>
</tr>
<tr>
<td>신발</td>
<td>1992. 3~95. 2</td>
<td>노후시설 경쟁력상실</td>
<td>- 시설간 충</td>
<td>-시설개선: 공업발전기금 700억원 지원 - 기술개발촉진</td>
</tr>
</tbody>
</table>


비해 너무 많은 기업이 너무 많은 설비를 갖게 되는 과剩投資가 발생하거나, 무능한 기업인이 대규모 자본을 대출받아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과剩投資의 결과 산업내 많은 기업이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의 수익성이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정부가 개입하여 산업내 기업의 수를 줄이거나 정부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들의 긴급수요를 보장해 주는 한편, 기업들이 얻고 있던 기존의 부채를 탕감·유예하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투자의 부담이 기업을 계속 부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17) 무능한 기업인이 운영한 결과 부실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자세한 기록은 구할 수 없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기업인이 소유한 동일桃을 제3자에게 매각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을 위해 과거의 부채를 탕감·유예하거나 신규로 대규모 빚을 청구하는 조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시점의 경제형성화 정책은, 산업개선 정책에 의해 생긴 경제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수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産業合理化措置는 行政政府가 我們
 나라의 産業構造 및 개별 산업내의 産業組織
 그리고 金融産業의 形態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기업에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이익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하였음을 의미한다. 企業을 보면, 個別
合理화 迴報에서 살아남거나, 特히 타기업
을 합병한 기업은 合理化措置에 의해 이익
을 본 반면, 金融機構을 비롯한 債権企業들
은 元利金의 蕩減・減価를 통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個別로 보면, 生業 감소
企業의 株主, 特히 大株主는 合理化措置로 회社
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보았으며,
金融機構의 株主나 一般債権者들은 손실을
보았다. 合理化措置는 또한 기업의 수의 감
소 또는 기업간의 경쟁체제를 수반하여 결
과적으로 産業內 競爭을 低下시켜 集系적인
效率性의 低下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法定管理나 銀行管理 등에는 존재하지
없는 또 다른 문제이다. 18)

合理化措置에는 個別 金融機構이 合理
化 對象企業에 대출해 준 負債의 元利金을
減免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金融機構 등 債権者로부터 合理化對象企業
에게로 막대한 窮가 이전되었다. 19) 1972년
의 8-3措置는 소액사채를 제외한 모든 사채
에 대해 年 16.2%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
환으로 변제조건을 변경시킴으로써 당사의
실제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엄청난
富의 再分配를 초래하였다. 80년대 이후의
合理化措置는 주로 金融機構의 使営에서 이
뤄졌는데, 優げ 1984-85년 기간중 단
행된 海運産業 合理化措置에 의해 약 3兆원
에 달하는 海運業界의 貸出元利金이 20년
만기-10년 거처-연리 3%의 長期 低利 償還
條件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86-88년의
不實企業整理措置는 9,863億원의 原金 損
償, 4兆 1,947億원에 대한 이자감면・유
액, 1兆 6,406億원에 대한 原金相輪유액을
수반하였으며, 이 밖에 10년 거처-10년 分
割償還-연리 10%의 조건으로 4,608億원이
신폐대출되었다. 이러한 債務조건 변경의
결과 金融機構의 不實債権이 크게 증가하였
는데 〈表 5〉는 이를 요약하고 있다. 〈表 5〉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市場異常과 일
반은행의 合理化關聯 貸出金의 85.9%와
85.2%가 債務免除, 利子減免・減価の 條件
変更에 의해 处理되었다. 合理化措置에 관
하여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하나는 정
부가 合理化措置에 따른 金融機構의 손실을
補償해 주기 위하여 韓銀特融을 제공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合理化措置에 따른 富의
再分配過程이 최종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国
民의 使営을 요구하였음을 의미한다.

〈表 4〉한반의 競爭力喪失分野에 대한 合
理化措置는 個別 金融機構와對策으로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되었지만 정부의 개

18) 이 문제에 관한 著作한 논의는 南逸醇・金鍾
19) 이 문단의 통계는 個別 金融機構 (1991)에서
인용하였다.
## III. 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의 性格

不實企業整理制度의 핵심은 기업존속과 재무조정의 결정이며, 不實企業整理制度의 목적은 이 결정이 效率性을 극대화하고 衝突性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후에서는 不實企業整理의 效率性과 衝突性이 드는 바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후에서

---

불 때 자본금이나 과거에 차입한 부채는 모두 감소한 품질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즉, 부실화된 시점에서 기업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리나, 업계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론적 수준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존속 결정이 이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면한 재무구조적 삶 정의된 개념으로 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편리성(fairness)이 오산의 가치판정을 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인의 동의를 얻는 정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기인 한다. 이런 경우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것 은 공정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공정성을 따져보는 것인데, 본간에서는 본래의 계약을 기준으 로 하여, 재무구조적 협의문제를 검토해 보 고자 한다. 먼저, 부실기업을건.Conditions의 수리성을 검토해 보자.

자본금 1조원을 가지고 설립되어 연말 10%의 조건으로 1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부채상태조건에 따라 매년 이자 1조원을 지급하고 2000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과거에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최근 어려 이유로 인하여, 수익성이 향상적으로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매년 10조원의 실업, 수익이 떨어져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정산하는 경우 50조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연 10조원의 영업이익에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조원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부실기업이 되었다. 또한, 준신시키보아도 10조원의 부채는 10조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정산시 부채의 정산은 10조원이므로, 재정적 부실기업이 아닌, 재정적 부실기업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회사가 재산화된 원인이 기업주의 고의적 부실경영이나 회사 가산은 불법의 도피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실자산의 정산은 정산까지는, 재산의 산업과 정산시 부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정산시 부채의 정산은 F이기 때문에, 재산의 부채를 w라 할 때, $w \geq F$인 경우 기업은 정산시 키움으로써 $w - F$의 부채가 일부 발생 하여, 사주와, 논리가 각각 $w$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다. 물론, 부실기업의 존재는 채무의 조건을 수반해야 하는데, 기업존속의 결정이 비교적 단순한 데 비해, 재무구조적 결정문제의 매우 복잡한 것이 일반적이다. 채 무조정문제의 핵심은 정산에 의한 재산의 부채를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있다. 우선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해 이 분배문제를 살펴보자.
1. 不確実성이 없는 경우

본래 E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어느 기업이 不實企業이 되었으며 귀거의 負債元金 및 그동안의 延滞利子의 승이 현시점에서 D이고, 이 기업을 청산할 경우 F의 殘餘価值가 있으며 존속기간 경우 w의 현가에 해당하는資産價格가 있다고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업은 F≥w이며 청산되어야 하고 F<w이며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21) 청산시 殘餘価值의 分配은 F≥D이며 債權者가 D를 갖고 株主가 (F−D)를 갖는 것이고, F>D이며 債權者가 F를 모두 차지하고 株主는 0을 갖는 것이다.

F<w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기업은 존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채무의 조정은 변경된 債務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즉 거치기간, 利息の 利子率, 前後 利息의 변제 스케줄 등에 따라 무한한 수의 調整案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고려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조정안이 債權者와 株主에게 Yield 未来利益의 現価이다. 따라서 채무조정문제는 w의 분배문제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법원 등 정부의 強制의 介入이 불가능하고 채무조정이 당사자들간의 協商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協商게임(bargaining game)으로 모델화할 수 있는데, 이해당사자의 相對의 協商力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22)

株主가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 경우를 다음의 [圖 1]을 통해 보자. 株主는 分配案 (π₁, π₂)을 債권자에게 제안하며 債權자는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한다. 여기에서 π₁는 株主의 몫이며, π₂는 債權者の 몫이다. 債權자가 株主가 제안한 분배 (π₁, π₂)를 수락하면 이 案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며, 債權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업은 청산되어 債權자가 min {F, D}를 갖고 株주가 max {0, F−D}를 갖게 된다. 이 모형에서 株주가 債권자에게 min {F, D}를 주고 자신이 w−min {F, D}를 갖게 되는 조정안 을 제안하며 債權자는 이를 수락하는 것이 唯一한 均衡이다. 즉 株주는 債權자에게 청산시 債權자가 차지할 수 있는 액수만큼 주고 企業存續에 따른 殘餘価值를 전액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債權者가 협상에서 優位를 점한 상황은 위와 유사한 게임에서 채권자가 먼저 제안하는 게임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물론 債權자가 株주에게 그가 청산시 받을 금액 min {0, F−D}만큼 주고 債務者에 따라 증가된 剩餘価值를 모두 자신이 갖는 것이 유일한 균형이 된다. 양자간의 協商力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株
사와 債権者가 동시에 자신이 봉을 제안하고 그 합이 \( w \)에 미달하면 기업의 존속과 함께 제안된 안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며, 그 합이 \( w \)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청산되는 동일성 正常型 게임(simultaneous move normal form game)으로 모형화하능 될 수 있는
데, 이 게임은 \( \pi_+ + \pi_0 = w, \pi_0 \geq \max \{0, F-D\}, \pi_0 \leq \min \{F, D\} \)인 모든 제안 벡터 \((\pi_0, \pi)\)가 균형이다. 한편 이 게임의 「내쉬」협상해
(Nash Bargaining Solution)는,
\[
\pi^* = \frac{1}{2}(w+\max \{0, F-D\}-\min \{0, F-D\})
\]
\[
\pi_0^* = \frac{1}{2}(w+\min \{0, F-D\}-\max \{0, F-D\})
\]
이 될 것이다.\(^{23}\)

사례로 不實企業이 정리되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며 특별히 어떤 모형이
 항상 현실과 부합된다는 것을 순환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모형의 선택과 무관
하게 두가지 사실은 분명해지는데, 첫째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財政的 不實企業은
청산되지 않고 存続되는 것이며,\(^{20}\) 둘째는 어떠한 경우든 주식과 債権者가 청산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봉을 각각 최소한 보장받는 방식으로 債務調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25}\)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不

---

2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내쉬」협상해는 대중 특
별한 이유가 없으면 증가되는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아이디
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필자는 이
것이 공정한 재무조정안이 되지 않는다고 믿
고 있다.

24) 이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적용으
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5) 독자는 그러면서 왜 法定管理制度가 필요하라
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위의
실업화 된 경리과정에서, 주주는 재무증권 회계 및 채권
자에게 정리할 수 있는 각자의 몫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매우 약한 것이며 이 조건만을 요구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불
공정한 조건은 될 수 있다. 채권자는 공동
한 재무조정안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정신을
보존해야 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 즉
공정한 재무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분배방
법: \( \omega \geq D \)인 경우 채권자는 \( D \)를 갖고 주주는
\( (w-D) \)를 차지하며, \( w < D \)이며 채권자
가 \( w \)를 차지하고 주주는 0을 갖는다.

\( F > D \)인 경우 이 거래가 재정의 실용적
이므로 \( w > F > D \)이며, 채권자는 재무
적공정을 상환받게 되고, 채권자는 기업준중에 의
해 파생되는 수익률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 D > w > F \)인 경우 정산시 잔여가치가 재
무에 미달할 뿐 아니라 기업을 존속시키도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재무에 미달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재무공정에 관하여 경쟁 기업준중에 따라 수익률을 독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 w > D > F \)인 경우 정산시
잔여가치는 재무에 미달하지만 준중에 따른
재무공정는 재무와 같이거나 이를 초과한다.
이 경우 준중에 의해 증가된 동반 재무
채권자가 나누어 갖게 된다. 이 기준은 물
론 각 기업과 각각 간에 정산시 그가 받을 몫
이상을 보장하게 된다.

실제로 실용적 거래의 정리과정을 보면 재무
상태분석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원금의 일부
로, 재무상태의 채권자, 채권자의 변이와의
조합(combin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결
정된 상환조건은 현행재 공산하면 위와 같
이 분배문제로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그러
면 위의 조건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루어지
는 재무조건의 공정성을 바꿔보자. 실제
로 보남시간에만 변이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권의 합금이나 낮은 이자
율의 적용은 기업을 존속시켜도 그 재무공
정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정한 재
무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F > D \)인 경우 이 기
업은 재정의 실용적이라면 \( w > F > D \)이므
로 기업은 존속시키고 재무공정의 채권에 따른
의를 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원금을 탕감하거나 원
금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이자율을
을 적용하는 것은 위의 기준에 어긋난다. \( F <
D < w \)인 경우 기업이 정산된다면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없지만 기업이 존속되
는 경우 재무상태의 현장가 재무를 높이하
기 때문에 원금당감이나 낮은 이자율의 적
용은 역시 이 기준에 어긋난다.

\( D > w > F \)인 경우 이 기업의 가치는 전부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기업은 사실상
채권자로부터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기
래에 이 기업이 없을 모든 이익은 전액 채

모항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이다. (주 14)를 참조할 것.
권자에게 지불되며,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이 기업의 fertilizer의 약학 저감어 없을 것이 다. 이러한 경우 원금당기에, 이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한 채권자는 실제로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게 되며, 주주 또한, 재산권의 가치에 의해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6) 채권의 감소는 단지, 회계상의 자산에 불과하며 아무런 실적이 없다. 이 결론은 매우 당연하 며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원금은, '양품에 가까운 감소를 수반한, 부실'이 점차, 대구, '양품과의 위의',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와 사실상 같다. 불확 실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모형은 1절의 모형의 w를 E[v]로 대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양률의 차이에 의한 결론도 동일하다.

부실성에 의한, 정비는 확실성에 서의 정리안과 비교하여 한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를 부실성의, '의정'에 적용되는, 이차수율이다. '부실성'에 의한, 정리안은 부실에 대하여, '의정에 의한 이차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성에 의한, 정비는 동일한 이차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이는, 이, 이용하여 이를 활용 perpetr. 확실성에 의한, 부실의 '부실과의 정비를 동시에 재무성비, 1절에, 처리된 것과는 반대된다. 부실성에 의한 정비가 D(1+r)D의 원금에 r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 받는 것이다. 예컨대, 재무성비가 1기에 한 하는 경우 채권자는 1기후에 (1+r)D를 받게 된다. 불확실성이, '의정'에 의한, 이차수율에 의 해 채권변제를 1기 이후시키는, 존속시 구 현되는 기업의 가치가 1기 (1+r)D 이상으로 대표되는 기업을 상정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 기업존속의 '의정'은, 재무성비의, '의정'에 의한, 에 최대한의, Z를 1기 후에 (1+r)D를 받게 된다.

2. 부실성에 의한 경우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는, '부실'이의 부실 부실에 의한, '부실'이의, '부실과의 정비를 동시에 재무성비, 1절에, 처리된 것과는 반대된다. 부실성에 의한 정비가 D(1+r)D의 원금에 r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 받는 것이다. 예컨대, 재무성비가 1기에 한 하는 경우 채권자는 1기후에 (1+r)D를 받게 된다. 불확실성이, '의정'에 의한, 이차수율에 의 해 채권변제를 1기 이후시키는, 존속시 구 현되는 기업의 가치가 1기 (1+r)D 이상으로 대표되는 기업을 상정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 기업존속의 '의정'은, 재무성비의, '의정'에 의한, 에 최대한의, Z를 1기 후에 (1+r)D를 받게 된다.

이 되지 않을 경우 변제될 원리금의 기대값은 
\((1+r)\)에 미달하게 된다. 즉 존속시 구현될 기업의 가치가 \((1+r)D\)보다 작게 될 확률이 \((+\text{이면 } r\)의 이자율에 의한 부채 유해성은 공정한 조정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E[\text{원리금}] \leq Pr[v \geq (1+r)D](1+r)D + \int_{-\infty}^{(1+r)D} udGv < (1+r)D
\]

첫번째 부등식은 \(v\)가 \((1+r)D\)보다 낮게 주협되는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v\) 이하임에 근거한다. 두번째 부등식은 당연하다.

3. 情報不均衡(information asymmetry)과 負債-株式 交換(debt-equity swa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不実企業整理가
債務紛挾의 변경의 형태를 띄는 경우 변경
된 변제조건에 의해 미래에 지불될 액수의
현가를 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負債의
現費와 존속에 의해 증가되는企業價值의
現費를 비교함으로써 不実企業整理案
을 간단한 分配問題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분배문제는 債務條件의
變更問題을 單純化한 것이다. 채무조건은
변제조건의 변경 이외에도 여러 형태를 취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負債-株式
交換이다. 위에서 살펴본 공정한 채무변경
안은 다음과 같은 負債-株式 交換方式의
채무조건안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w>D\)인 경우 채권자는 기업의 지분
\(D/w\)를 인수하며, 기존주주의 지분은 \(D/w\)
의 비율에 의해 감소된다. \(D>w\)인 경우 채권자는 기업의 지분 전체를 차지하며, 기존
주주의 지분은 0이 된다. 물론 채권자는 이
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채권을 전액 포기한
다. 이 負債-株式 交換方式이 공정한 채무
조건안과 같은 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負債-株式 交換에 의한 不實企業整理는
이 톤의 1절과 2절의 모형에서는 채권변
제조건의 변경에 비해 우월한 점이 전혀 없
다. 따라서 政策의 觀點에서 負債-株式의
교환을 추진할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
는다. 이는 1절과 2절의 분석이 情報均衡의
가정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와 주
주간에 債務不均衡이 존재하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음의 예를 통
해 살펴보자. \(F=10\)억원, \(D=20\)억원, \(w=\)
20억 5천만원인 財政的 不實企業가 있다고
하자. 또한 정리안이 기업을 존속시키려고 동
시에 債務紛挾는 현가로 2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자. 이 정리안은 불
문 공정한 정리안이다. 이 정리안에 의하면
기업의 株主에게 귀속되는 기업의 가치는
현가로 5천만원이다. 즉 이 기업은 향후 얻
는 수익의 대부분을 債務紛挾에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채권조건안이 기업
의 소유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株主들은 여전히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배당금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가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기업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소한 기업의 영영에 들어는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27)

물론, 채권자가 주주나 경영자의 행동과 노력의 수준을 정확히 감시할 수 있고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들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경영자에 비해 기업에 대하여 애초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자의 행동과 노력수준을 정확히 감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선택적도와 도덕적 위험의 결과 기업의 가치는 본래 애상했던 우에 미달할 것이며, 채권 D에 미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문제의 핵심은 1단계 2단계의 분석에서는 기업의 존속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제한조건이 취해질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불균형에 따른 기업가치의 하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존속시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우보다 작아질 것이며, 정리사회에 의해 주주에게 귀속될 후의 크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D의 교환은 통상적인 채무자인 지배주주의 비행을 우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채권-D의 교환은 위에 설명한 불균형에 따르는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관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한 채권-D 교환 방식은 문제의 기업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존속시 우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제수준에 도달하면 채권자 순환하는 조건에 우의 값을 받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매각 우의 값을 받는 1단계 2단계의 조정에 의하면된다. 3단계 매각에 따르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채권-D의 교환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경제의 효과를 갖고 있다.

IV. 法定管理制度의 問題點과
改進方針

우리나라의 法定管理制度의 問題點으로
혼히 지적되는 것은, 첫째로 법원의 程可決
定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있다는 점, 둘째로
管理計画案이 채권자의 利益을 크게 低下시
케는 점, 셋째로 會社 結構事件에 관한 법
원의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法院이 경
생가능성이 없는 企業를 法定管理制度으로

27) 지주-대리인(principal-agent)문제에 대한 방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것
이다. 觀測可能性(observability)이 문제가
되는 경우 수익이 低下되는 것을 알려진 사실이
다. 本稿의 상황에서는 選擇問題의 존재에
따른 추가적인 효율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
허가하였다는 주장은 대체로 과거의 관례에 따라 결정되어 있던 표준 수사로, 불가능한 현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성한 바와 같이 1983년의 기간중, 또 는 폐지된 경우에 관계 없는 기준에 대한 대응이 다소 52개의 66개가 있다. 따라서 최종결과로 난 완행담플을 대상으로 하자면 46%의 확률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물론 매우 높은 매우 높은 수치를 고려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기간중 전체 신청사례 327건 중 209건이 허가를 받아 적발률이 6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저치차계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법원이 운전하기 위험성이 없는 기관의 결정을 허가한다. 결정관리는 또한 대체로 채권의 이익을 대폭 회생시킨 반면, 주주에게는 충분한 양보를 요구하지 않아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정비일정의 금융기관의 채권에 의해 청산시, 변제받을 수 있는 양도에 미달하는 양도의 구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결정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정능력에 대한 비판은 담당 법원의 수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관리는 개시로부터 1년 이상의 시일을 요구하는데, 이에 따라 간사의 상황화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정비계획서의 구성원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법원의 이임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결정관리의 수지는 문제가 된다.

法定管理制度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실질의 문제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비판은 대체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구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였다. 기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정관리의 결정은 벌금과 채무를 따르지 않고, 미래의 수익성에 입각한 채무의 재정적 가치의 재정적 가치와 결정과 상여물 가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준에 의해 존속시키기로 결정된 기업의 채무는 채무-지식의 교환, 3rd, 4th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방향이라 함은 물론 본래의 효율성과 관리에 의한 방향을 의미한다. 그런 데 실제로 경제의 채무 조정이 있는 채무원의 채무, 채무의 장기적 다르던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채무의 공정한 조정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없이 채권의 조정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정 안에 합의가 존재할 경우에 장기적인 채무자 채무의 경제적, 기술적, 장기적인 채무자가 채무의 방해를 제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채무의 비효율적에 비해 변제해야 할 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 채무자 채무의 자금을 대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채무자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누어 가질 채무의 크기가 감소하
는 것을 의미하며, 정리가 효율성을 극 대화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의 추측으로는 46%에 달하는 부수
가 부수적으로는 법인이 경제적 실수
을 존속시키는 판단의 기준을 막는 데에 기
인하였지만 정리계획안이 부채 - 수익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일정기
간에 절히 배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Außerdem, 유일한 방법은 가급적 많은 액수를 가급적 조절
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
업의 성과성과 경제적, 기회성, 경제적
세계에 비해 과도한 경우, 정리가 정리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도 기업에게
탄력적으로 부채를 지수는 것은 일반적
이 기업의 경제적 이용력이 무리하다는
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리의 정리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정리의 정리관리는 주로 국민적, 방적, 좌전, 추적, 중산
의 수단만을 사용하고, 부채 - 수익, 수익, 수익
밖에 손의 분배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28) 이 조항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들은
기업이 부실화된 결과로 인하여 독보적 별도
권력이 부당한 경우에 이는 부당성을 저지

29) 국고, 투자금융협회 (1993), 법적행정처 (1985)
참조.

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소 조정 또한 정
하지 못하였다. 전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조항의 정리가 부채의 감소를 수반
하는 유일한 경우는 장기적, 수익성에 입각
한 정리의 정리대가 부채에 미달하는 점
우리로, 이 경우에 유효한 변동을 수반하
지 않는 정리조정은 실리적 문제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과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다. 정리가 부채를 조정하는 경우, 정리
자는 부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
받는 것이 정리한 정리계획안이 될 것이나
로 채권의 감소는 당연히 불공정한 것이 된
다. 주주의 지분을 2/3 한도내에서 소각
할 수 있다는 ‘법정로부터법’에의 조항은 주
주간의 지분비율을 변경시킬 뿐 정리자와
주주간의 부채 - 수익 - 수익, 수익, 수익의 공
로 정리에 이르는 경우가 1로 또는 1가
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실
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정리 조정은 부채 - 수익, 수익, 수익
의 분배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28) 이 조항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들은
기업이 부실화된 결과로 인하여 독보적 별도
권력이 부당한 경우에 이는 부당성을 저지

29) 국고, 투자금융협회 (1993), 법적행정처 (1985)
참조.
訴追對象이 되거나 민사상 損害賠償請求訴訟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주장과 같이 과거 經済性喪失企業이 法定管理 許可를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그 결과 형평상의 문제 이외에도 經済性喪失企業의 退出이 지연된 非效率이 초래되었고 추측된다.

넷째, 좀더 일반적으로 法定管理 許可決定은 效率性 側面에서 구조적으로 偏倚性 (bias)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會社整理法」第1條에 있는 病患者상의의미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本稿에서 정의한 財政的 不實企業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현행 法定管理制度는 企業의 存續을 長期의 收益性에 영향을 끼치는 企業의 資産價值와 清算時 殘餘價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액수의 채무를 일정기간에 변제하는 정리안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債務解経 執 法定管理對象 企業의 存続이유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企業存續의 결정과 企業價值의 분배의 결정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못한다. 따라서 本稿의 優良企業基準에 의한 경우 존속되어야 할 기업이 청산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法院은 또한 企業의 社會性 등을 고려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法定管理決定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1992년 7월에 발표된 大法院의 會社整理事件處림要領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大法院은 과거 法定管理決定이 너무 판례하게 내려졌다는 비판에 따라 整理事件에 대한 법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정리사전 결정시 법관이 참조할 판단기준으로서「회사 정리사전 처리요령」을 발표하였다. 「요령」은 法院決定要件의 하나로 該企業의 社會的 價值을 인정받은 만한 公益性가 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일부로서 製造業者, 輸出寄與業, 破産時 域経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法院이 會社整理事件에서 실제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本稿의 기준에 의할 때 존속이 바람직한 財政的 不實企業이 청산되거나, 반대로 청산이 바람직한 經済性喪失企業이 존속되는 非效率인 決定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企業의 存続・清算 決定은 外部效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外部效果를 고려하여 가장 優良企業의 資源의 分配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外部效果를 감안한 資源의 分配가 단순히 기업의 존속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本稿의 기준에 따라 經済性喪失企業으로 판정된 輸出業體가 있다 하자. 이 業體는 經済性喪失企業이므로 法定管理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명백을 유지한다. 헤도 輸出補助金 등 政府의 추가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조만간 조업을 중단하게 될 운명에 있다. 따라서 이 企業을 法定管理對象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
적 비효율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그 자체로는 경제적 부진이지만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기업의 존속이 사회 전체적 관심에서는 바람직하여 이를 존속시키는 경우 존속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 기업의 협력이 부담시키는 것은 평판에 어긋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이 밖에 단순한 정부의 문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보완적으로 이 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있다는 점과, 기업의 관리자로서의 기회가 정부의 기호와 정책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팔어하는 것 통용될 수 있다. 정부의 관리자로서의 기회를 제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 보상을 임의의 1기업의 지배의 기대값과 투자 가치의 비교를 개시적 정부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에 의하여 존속되는 기업의 경제적 분배는 본래의 자동적 조건의 정성을 실시하여, 산업과 계약의 교환과 3상의 보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의 관리자로서의 기회를 확보하고 이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필요하다. 기업의 내부에 의한 기회는 경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식의 발전을 억제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V. 合理化措置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Ⅱ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란히合理化措置로 불리는政策은 産業政策의 側面과企業政策的 側面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財閥問題, 金融産業政策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복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과거의 行政에 의한合理化措置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合理化措置 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費用의 基準에 입각했다가보다는 會計上的 費用의 基準에 입각하였던 바가 크며 非效率의 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企業과 企業들로 잘 구별하지 못하여 效率性과 平衡性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金融産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發展潛在力を 低下시켰다.

첫번째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政府가 주도하여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産業內 主要企業이不実化된 경우 政府는 종종 業種專門化, 카 르텔형성 動用, 進入制限 등의 競争制限措置를 취하여 不実化된 企業들의 收益性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도산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措置가 있을 때 항상 거론되는 이론은 過剩投資
- 통상 경쟁론 이었다. 즉 事業初期 너무 많은 企業이 너무 많은 시설투자를 한 결과 투자증보 후 企業들이 통상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방지할 경우 事業内 企業들의 수익성은 모두 약화되어 事業내 企業들의 수익성은 모두 손실을 보게 되며 이는 비효율적인 효과이다. 이로 인해 事業장에서 사용하는 수익성의 개념은 企業들이 초기에 고정자금 등에 투자한 企業들의 자본과 자본과 자본의 빠른 이자 정리 금융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상의 개념이다. 그러나 시설투자가 종료된 이후 事業, 販売 時점에서 불 때, 事業에 이루어진 시설투자는 埋没費用이며 이에 투입된 자본이 자본의 빠른 이자 정리 금융의 기준으로 매몰된 것이다. 따라서 투자가 종료된 시점에서 事業에 이루어진 투자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경제적 의미가 없다. 生産時點에서 적절한 비용의 개념은 短期限 境界費用이며 短期収益이 이를 上極하는 企業은 경제적 의미에서 이윤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事業에 過剩投資가 이루어진 결과 事業내 企業들이 현재 얻고 있는 이윤 이 事業 施設 등에 투입된 資本의 費用에 미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이 유가 되지 못하며 현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되돌릴 도리도 없는 것이다. 事業後의 競争制限은 事業主에게는 이익을 주겠지만 경제 전체적인 效率性의 低下를 가져오며, 機会費用이 매우 낮은 과거에 이루어진 施設投資의 利用度만을 저하시킬 뿐이다.

第3章에서 본 바와 같이 事業은 현 시점에서의 정보에 의해 평가한 經済의 效益性이 清算時 殘餘價值를 초과하면 계속 존속되어야 하고, 반대의 경우는 정산되어야 한다. 事業後의 競争制限은 效率性에 일관한 事業 自身의 存続결정과 무관하며, 事業主의 養老 증가시키는 多가로 消費者와 그 事業의 企業를 中間財로 사용하는 事業의 利益을 興喪시킬 뿐이고, 後者の 被害가 前者の 利益을 상쇄하는 사회적으로 非效率의 인

政策이 될 때문이다.31) 뿐만 아니라 事業이 不実行될 경우 事業의 政府가 競争制限 등을 통하여 效益性을 개선시켜 주는 政策은 事業前の으로 事業들의 過剩投資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국 과잉투자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政府介入에 의한 非效率의 增大의 가능성을 모두 증가시킨다.

不実企業整理가 事業과 事業主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효용과 형평면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위의 事業의 競争制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合理化措置는 또한 중종 債權의 大幅적인 감소를 수반하였는데, 대체로 債務調整이 順平面前에서 문제가 있었고도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다시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본 효율성에 대한 입각해야하고 채권의 조정은 부진한 경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 Ⅲ장에서 정의한 금융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1971년의 8-3 조성이다. 이 조성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모든 기업의 강력성을 기존으로 할 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자금이 모두 기업의 주주들의 이익으로 합수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8-3 조성의 이외에도 누차에 걸쳐 혁신화된 조성은 기존의 금융 수단들에 의한 금융기관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에 의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배정, 보조금, 유료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은 다시금 정책과 효율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합리화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존속, 자원의 변경, 소유 구조의 변경 등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직무나 직관자의 사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의 개입은 자본금이나 법제적으로 일치하는 확법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부실효과가 큰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에 대규모 자본금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기업의 장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 자본금을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하는 경우 빠른 재구성의 초격의 조성은 실적을 받는 보안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효율적이며, 금융시장의 자율화는 재정시장의 경제주체들이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신의 책임에서 하지 않을 대출을 해야 하고 사후의 과정이 부실화되면 수동적으로 정부의 합리화 합성에 따른 채권 위험을 수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신용 개선이 모호할 것을 기대하는 극단이다. 또한 합리화 조성의 결과 발생한 부실채권에 의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배정, 보조금, 유료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은 다시금 정책과 효율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리'나에 대한 미주연방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는 항후 우리나라에서도 활용가치가 큰 제도로 생각된다.

VI. 结論 및 未來의 研究方向

本稿에서 필자는 不實企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주요제도를 정리
하고, 현행 제도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制
度上の 問題點을 파악하며, 問題點을 시정
할 수 있는 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本
稿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不實企業의 整理는 企業存続決定과 債務調
整決定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존속결정은
존속시 企業의 長期的 收益性에 영각한 자
산가치의 기대값과 청산시 잔여가치의 상대
적 크기에만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업존속 결정에 관한 合理的 政策은 자
기자본이나 不債의 額數, 存續에 수반되는
債務變更과 順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不實企業이 이 기준에 의하여 존속되는 경
우 債務의 조정은 본래의 債務契約을 기준
으로 하여 企業의 價値를 株주와 債權者가
공정하게 나누는 方式을 취해야 한다. 이
方式에 의하여 債權者에게 귀속되는 企業의
가치가 株주에게 귀속되는 못보다 현저히
큼 경우 債務조정은 단순한 변제유예의 方
式보다는 不債-株式의 交換이나 第3者 引受
方式이 효율과 형평면에서 우월하므로, 그 이
유는 이 경우 既存株主가 企業의 가치를 극
대화하고 債務를 성실히 이행할 유인이 떨
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法
定管理制度는 企業存続을 경제성 기준에 입
각하여 결정하고 있지 못하며, 債務조정 역
시 不債-株式的 交換이나 第3者 引受方式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非效率의이고 衡平에
어긋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한편
過去의 合理化措置 역시 기업의 존속 문제
와 企業主 및 債權者간의 利害調整問題를
분리하지 못하여 非效率의이고 형평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주요기업이 不實化된 어떤
產業에 대한 진입계한, 카르텔 허용, 업종
전문화 유도 등의 競争制限措置는 과거에
이뤄진 시설투자가 현재는 機遇費用이 낮
은 埋没費用이라는 점을 간과한 措置로서,
競争制限에 의한 效率성의 低下를 가져올
뿐 아니라 消費者와 여타 產業의 被害에
該當企業主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형평상의
問題를 야기하였으며, 不實化되는 경우 政
府의 支援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企業主들
이 形態為主의 방만한 經營戰略을 추구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非效率의인 結果를
조례하였다. 過去의 合理化措置는 또한 行
政府가 態意의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債權
調整이 형평에 어긋나는 예가 빈번했으며
金融市場의 정상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
하였다.

不實企業整理制度의 개선방안으로서 筆
者는 다음과 같은 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실기업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도, 기업의 모미즘, 이해관계자간의 교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과의 조정은 이에 대한 배지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은 本著에서 정의한 적정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의해 기업존속결정과 재무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무자이익의 발생 과정은 제3자 요소의 인과 관계에 의한 방법으로 분석하게 되어야 한다. 셋째, 합리적 조치는 외부효과가 현저히 큰 경 우에 한하여 허가, 자본이용이나, 자본이용률 등의 수단에 한정해야 한다. 넷째, 합리적 조치는 현재의 자본이용률의 영향이 크고 기업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이 큰 경우, 미국의 「크리슬러」의 예와 같이 자본이용의 지분과 정의와 무관하게, 교渉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보에서 다루는 부실기업정리정지는 분석 해야 할 경제학문의 민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本著에서는 정부의 제도, 합리적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실기업문제의 특성을 주로 다루었음을 뿐이며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거나 피상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정부의 제도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방대한 양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사회정리법」의 주요요소에 대한 심도있 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합리적 조치 또한 정부의 제도는 기업과의 조정이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종합적 연구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本著에서
不實企業發生에 관한 不確積性 模型

本文的第III章에서는 일반 企業が 負債를
 본래의 계약에 의해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不實化되었음을 가정하고 효율과 형평면에서 비람적한 재무조정안을 검토하였다. 序論에서 筆者는 不實企業이 생기
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不確積性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附録에서 筆者는 이 주장을 뒷
 받침하고, 事前의 效率과 事後の 效率의 구
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企業의 投資 및
負債借入決定은 本生化한 模型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本 模型에서 企業主는 施設投資時點에서 企業의 需要에 대하여 不確積性에
적절하게 있다. 따라서 施設投資의 決定과 施
設投資에 소요되는 資金의 自己資本/負債
구성是不確積性下에 이루어지게 된다.
投賄終了後 不確積性이 사라진 상태에서 企
業은 近거에 결정된 施設投資에 따라 고정
된 生産容量의 제약조건하에서 利潤極大化
을 하게 된다. 本 模型은 經済性喪失企業과
財政의 不實企業의 차이를 明確하게 해 줄
것이며, 企業為家이 합리적인 投資 및 營業
活動을 하는 경우에도 企業이 不實化될 확
률이 있으며 企業為家이이 確率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 + 1)期에 걸쳐 활동하는 다음과 같은 企業을 생각해 보자. 本 企業은 1期에 施設
投資を 하고 2期부터 (T + 1)期까지 生産
及び 管理を 한다. 1期에 K의 容量(capacity)을 갖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 企
業은 t ≥ 2인 各期에 K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生産 및 販売活動을 할 수 있다.
K의 施設容量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費用을 bK라 하고 이 費用은 투자 이후 埋没
(sunk)된다고 가정하자. t ≥ 2인 各期에서
需要는 p = θ − q의 逆需要函數를 따른다. 彼
기에서 q는 業務이 기업의 生産容量이다. 需
要의 크기를 나타내는 母數 θ의 값은 1期에
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Θ = [θ0, θn]의 区間
에 均一分布(uniform distribution)에 따라
分포되어 있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고, 2期
初에 그 참값이 알려지게 된다.

 따라서 投資時點에서 이 企業은 不確積性에
적절하게 있으며 이 不確積性은 투자終了後
생산개시 이전에 겪게 된다. t ≥ 2인
各期에서 이 企業의 短期費用函數는 平均
收益이내에서는 c > 0의 限界費用=平均費用에
따르다고 하자. 따라서 이 企業의 短期費用
函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q) = cq, q \leq K \text{인 경우} \]
\[ \infty, q > K \text{인 경우} \]

 마지막으로 θ0 < c < θn이며, 이 企業은 期
대립을极大化한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의期待利润极大化 문제는 1기의
불確定性가 있는 산업 결정과 2기 이후의
생산 결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투자 총량이 주어진 상태에
서 2기 이후의 생산비용의 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 기업의 2기 이후의 利潤极大化 生産量
은 다음의 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구현된 
需索量이 매우 낮아 가
객이 
短期費用 미만인 경우 이 기업은 생산
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 \theta \leq \theta \leq c \)인
需索量에서 
是 利潤极大化 生産量이
0이다.

둘째, 需索量이 \( \theta > c \)이며
이용극대화
생산량이 1기에 결정된 총량 \( K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기업의 利潤极大化 生産量은
\[ \max (\theta - c - q)q \]
의 唯一解인 \( \bar{q}(\theta) = \frac{\theta - c}{2} \)
이다.

셋째, 구현된 需索가 施設容量에 비해 커
서 \( \max (\theta - c - q)q \)가 모서리해(corner solution)인
\( K \)를 갖는 경우 이 기업의 利潤极大化
생산량은 총량 \( K \)와 일치하게 된다. 위의
둘째와 셋째 경우를 구분하는 需索状態 \( \hat{\theta} \)
\( (K) \)는 \( \bar{q}(\theta) = K \)의 유일해인 \( \hat{\theta}(K) = 2K + c \)
이다. 따라서 \( K \)의 용량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短期 利潤极大化 问题의 解
\( q^*(K, \theta)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t \geq 2 \)인 各期에 있어서,
\( q^*(K, \theta) = 0, \theta \leq \theta \leq c \)인 경우,
\[ \bar{q}(\theta) = \frac{\theta - c}{2}, \quad c \leq \theta \leq \hat{\theta}(K) \]
인 경우,
\( \hat{\theta}(K) \leq \theta \leq \theta \)인 경우.

最適生産量 \( q^*(K, \theta) \)가 生産容量과 
구현된 需要状態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됨에 따
라, \( t \geq 2 \)인 各期에서의 極大化된 利潤
\( R(K, \theta)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R(K, \theta) = 0, \quad \theta \leq c \]인 경우,
\[ \bar{\pi}(\theta) = \frac{(\theta - c)^2}{4}, \quad c \leq \theta \leq \hat{\theta}(K) \]
인 경우,
\[ \pi(K, \theta) = (\theta - c - K)K, \]
\[ \theta > \hat{\theta}(K) \]인 경우

\( R(K, \theta) \)는 이 기업이 1기에 확보한 시설용량
과 2기와 구현된 需要状態에 따라 \( t \geq 2 \)인 各
期에 이 기업이 얻을 이윤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1기에서 기업의 最適投資問題
을 살펴보자. 1기의 \( K \)의 施設容量을 갖추는
 경우 이 기업의 期待利潤의 現報는,

\[ \int_{\theta}^{1} \frac{1}{r} \left[ 1 - \frac{1}{r(1+r)^2} \right] R(K, \theta) f(\theta) d\theta - bK \]

\( f(\theta) \)가 實際문도이며
\[ \frac{1}{r} \left[ 1 - \frac{1}{(1+r)^2} \right] \]
\( \cdot \frac{1}{r(\theta - \theta)} \)을 \( j(r, T) \)로 표시하면 위의 期待
利潤을 \( j(r, T) \int_{\theta}^{1} R(K, \theta) d\theta - bK \)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이는 極大化하는 1차 조건은

\[ \frac{\partial}{\partial K} \int_{\theta}^{1} \bar{\pi}(\theta) d\theta + \frac{\partial}{\partial K} \int_{\theta}^{1} \pi(K, \theta) d\theta \]

\[ = \frac{b}{j(r, T)} \]
이 식의 좌변은 「라이프니츠」의 法則에 의해
\[ \int_{\theta}^{\theta_c} \frac{2\pi(K, \theta)d\theta}{\partial K} = \frac{1}{2} (\theta_c - c - 2K)^2 \text{이 되므로} \]
期待利潤은 極大化하는 容量은 \( K^* = \frac{1}{2} (\theta_c - c - \frac{2b}{j(r, T)^{1/2}}) \) 가 된다. 그리고
\[ \frac{\partial^2}{\partial K^2} \int_{\theta_c}^{\theta} R(K, \theta)d\theta = -j(r, T) (\theta_c - \theta(K)) \]  
\( K \)의 이으로 위의 \( K^* \)가 극대값임을 알 수 있다.

이 企業의 極大化된 期待利潤은
\[ V(K^*) = j(r, T) \int_{\theta_c}^{\theta} R(K^*, \theta)d\theta - bK^* \]
이며 이는 0보다 크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事前의으로 볼 때 이 企業은 \( K^* \)의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正의 期待利潤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적으로만 성립하는 것이며, 事後의으로는 구현되는 需要狀態에 따라 설비투자에 소요된 費用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선 \( \theta \leq c \)인 需要狀態가 구현되는 경우 이 企業은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利潤極大化에 부합하는데, 이 경우 설비에 투자된 \( bK^* \)는 전혀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企業은 事後의으로 \( bK^* \)의 손실을 보게 된다. \( \theta > c \)인 需要狀態下에서는 이 企業은 \( t \geq 2 \)인 各期에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을 極大化하는 것인데, \( c \)에 가까운 비교적 낮은 需要狀態가 도래하는 경우 短期利潤은 \( \pi(\theta) \)가 될 것이지만 \( \pi(\theta) \)가 \( bK^* \)에 미달하여 결국 投資費用까지 고려할 때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需要狀態 \( \theta \)의 가장 큰 값은 \( \pi(\theta) = bK^* \)의 해가 될 것이며 이 方程式을 求解 결과 \( c + 2\sqrt{bK^*} \)가 된다. 이를 \( \theta_e \)로 표시하자. 즉 \( \theta_e \)는 이론이 事後의으로 0이 되는 損益分岐 稱為 稱為 (break-even state)이다. \( \theta_e \)보다 낮은 需要狀態가 구현되는 경우 企業은 事後의으로 損失을 보 것이며, \( \theta_e \)보다 높은 需要狀態가 구현되면 企業은 事後의으로 利潤을 실현하게 된다.

위의 분석은 企業의 利潤極大化問題을 다룬 것이지만 이를 企業主의 富の極大化 (wealth maximization)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위의 模型에 설명된 프로젝트를 가진 企業主가 自己資本에 의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 bK^* \)의 자본을 투자하여 \( K^* \)의 설비를 갖춘 뒤 구현된 需要狀態에 따라 \( q^*(K^*, \theta) \)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企業主의 期待利潤 및 事後의 利潤은 모두 企業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번에는 企業主가 負債 또는 株式公募에 의하여 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를 김해해 보자. 負債問題을 의미있게 고려하기 위해 企業이 청산되는 경우 \( bK^* \)보다 작은 殘餘價值 \( F \)가 있다고 하자. 따라서 설비투자에 따르는 埋没費用은 \( bK^* - F \)이다. 우선 명백한 것은 設備投資額數が \( bK^*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主의 문제는 \( bK^* \)의 投資費用 중 自己資本, 負債, 株式公募의 비율을 결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이 기업주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는 \( bK^* \) 전액을 출자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도나

{\text{적정한}}株式공개의 여지가 사라진다. 따라서 흥미

{\text{있는 경우는}} 기업주가 \( A < bK^* \)인 자금밖에

{\text{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text{부도 또는}}株式발행에 의하여 조달

{\text{하게 된다.}} 기업주가 이 \( \Delta \)을 먼저 분배

{\text{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귀속된

{\text{는}} \( V(K^*) \)이다. 그러나 이를 \( \text{株式}

{\text{공개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귀

{\text{속되는}} \( \frac{A}{bK^*} V(K^*) < V(K^*) \)가

{\text{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 \text{株式발행보다}

{\text{는}} \( \text{입에 의해} \) \( \text{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text{을 선호한다.}} \)

{\text{업주가}} \( bK^* \)을 먼저 확보한 후에 유의

{\text{하여 추진하거나}} 자본과 주식발행의 조합에

{\text{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부도의 가능성은 0이

{\text{며}} \( \text{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text{나}} bK^* - A를 부채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text{은}} \( \text{도서} \) \( \text{결국되는} \) \( \text{부도} \) 

{\text{이}} \( \text{발생할 수 있다.}} \)

{\text{부도의}} \( \text{可能性을 의미있게 병신하기 위하

{\text{여}} \text{두가지 가능성을 추가하자.}} \text{ 경우는 물론

{\text{1期에}} D = bK^* - A를 부도하는데 기제조건

{\text{은 다음과 같다.}} t \geq 2인 \text{期에 period 이차

{\text{를 지불하며}} (T + 1) \text{期에}} \text{元金} D \text{를 상환

{\text{한다.}} \text{처럼 정산시}} \text{設施投資의}} \text{残存価値}

{\text{を}} \text{負債元金에 미달한다고 하자. 즉}} F < D\text{이}

{\text{다.}} \text{이러한 상황에서}} \text{債権者와}} \text{企業主의

{\text{이론은}} \text{事後의으로 어떠한}} \text{需要狀態가 도래

{\text{하느라가 달라 있으며 다음의 몇가지 경우

{\tex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ext{1) }} \theta \leq c \text{인 경우}

{\text{전술한 바와 같이}} \theta \leq c \text{인}} \text{需要狀態가 도래

{\text{하는 경우}} \text{企業은}} \text{생산을 포기하며,}} \text{生産

{\text{設備은}} \text{全て으로 현금되는}} \text{F의} \text{價值을 갖

{\text{게 된다.}} \text{企業主는}} \text{A의 손실을 보게 되고,}

{\text{債権者는}} \text{債権元金}} \text{D = bK^* - A에 미달하는}

{\text{F만을 변제받게 된다.}} \)

{\text{2) }} c \leq \theta < \theta_r \text{인 경우}

{\text{여기에서}} \theta_r \text{는}} \text{\pi(\theta) = rF의}} \text{解이다.} \theta = \theta_r \text{인}} \text{需要狀態下에서}} \text{企業은}} \text{各期에}} \text{普通의}

{\text{残存価値}} F \text{의 이자에 해당하는}} \text{短期利潤을

{\text{를 얻는다. 따라서}} c \leq \theta < \theta_r \text{의}} \text{需要狀態下에

{\text{서는}} \text{残存価値의}} \text{機會費用을 고려할 때} \text{企

{\text{業은}} \text{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text{이}

{\text{ 경우}} \text{企業主와}} \text{債権者的}} \text{이론은 (1)의 경우

{\text{와 동일하다.}} \)

{\text{3) }} \theta_r \leq \theta < \theta_1 \text{인 경우}

{\text{여기에서}} \theta_1 \text{는}} \text{\pi(\theta) = rD의}} \text{解이다. 즉} \theta_r \text{의}

{\text{需要狀態下에서}} \text{企業は}} \text{各期に}} \text{負債の}

{\text{當期利子에 해당하는}} \text{이론을 얻는다. 따라서

{\text{ 기간의 위기의}} \text{場合}} \text{需要狀態가 도래

{\text{하는 경우}} \text{企業は}} \text{부채に対する}} \text{利子を}

{\text{고할 수 없게 된다.}} \text{債権者の}} \text{要求に} \text{に対し} \text{企業} 

{\text{이}} \text{承認される場合}} \text{債権者が}} \text{F를 받고}} \text{企業主} 

{\text{는}} \text{투자} \text{A}} \text{전액을 얻게 된다. 반면}}
을 존속시키는 경우 채무자는 각기 \( \bar{\pi}(\theta) < rD \)의 감소된 이자를 지급받고 (7+1)기
에 저여리치 통합 할 수를 받게 된다. 위 구간에 위치한 채무자는 \( \theta \leq \theta_D \)으로 큰 범위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중 손실이 적기 때문에 회계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유리하
다. 채무자는 두 경우 모두 투자액 전액을 얻게 된다.

이 상황은 채무 자체의 존속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과거에 차입한 부채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재정의 줄 수 투자 채무상태가 되기 어렵게 된다.

(4) \( \theta_r \leq \theta \leq \theta_D \)

여기에서 \( D \)는 2기 이후 연간 이자 및 연간 이자에 대응하는 잘
가 원금과 이자의 합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
무상태이다. 즉 \( \theta_D = \frac{1}{r}[(1+r)^r-1] \bar{\pi}(\theta) = D - F \)의
계산이다. \( \theta \)가 이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채무자는 \( t \geq 2 \)기의
과자와 채무상태에 대한 당
기자 \( rD \)를 초과하는 이자를 얻게 되며
채무자는 다소 손실을 보게 되며 채무자는 투자액 전액을
상실하게 된다.

(5) \( \theta_D \leq \theta \leq \theta_F \)인 경우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 및 이자를 다 지불
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투자액의 일부를 얻
게 된다. 도출의 위험은 없으며 채무자는 정
상적인 수준을 비치게 된다. 채무자는 투자

\[ \frac{\theta_D - \bar{\theta}_D}{\theta_D - \theta_F} \]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 및 이자를 다 지불
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투자액의 일부를 얻
게 된다. 도출의 위험은 없으며 채무자는 정
상적인 수준을 비치게 된다. 채무자는 투자
参考文献

金俊経,『金融環境變化의 銀行不實債権 整理方案』, 政策研究資料 91-10, 韓國開發研究院, 1991.

南逸聰,『問題産業의 發生原因과 産業政策的 方向』, 研究資料 93-01, 韓國開發研究院, 1993.


범원행정처,『회사정리실무』, 1985계관자료 제28집.


이성욱・김준경,『限界企業의 倒産과 退出 關聯制度의 改善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3.

임재홍,『회사정리법개설』, 고시계, 1989.

全國投資金融協會,『會社整理制度의 衡平性 提高에 관한 研究』, 全國投資金融協會, 1993.

재무부,『부실기업정리내용(업체별)』, 1988.


Newton, Grant, Bankruptcy and Insolvency Accounting, 2nd ed., John Wiley and Sons, 1981.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 比較

李 永 燃

本研究의 目的은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을 商品價格 및 單位費用을 利用해 直接 比較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研究結果에 따르면 北韓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 차이는 현재 北韓이 국제무역에서 등용하고 있는 商業換算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北韓通貨의 購買力를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 다도 현재 北韓에서의 價格 및 貨物이 실제적인 需要・供給線로 반영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北韓通貨의 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公式價格를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明市場価格으로 대체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의 體制轉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北韓通貨의 實際購買力은 현재 商業換算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實證結果는 南韓과 北韓의 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未加工食料品, 住居財, 保健・醫療 등이 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低廉한 반면 加工된食料品, 家具 및 家事用品, 被服・紡織 등은 상대적으로 南韓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南韓과 北韓의 價格構造 差異는 經済成長 및 社會變化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北韓體制에서의 人為的 價格構定에 의한 價格構造의 歪麄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검차된다.

I. 問題의 設定

한 국가의 通貨購買力과 다른 국가의 通貨購買力을 比較하는 방법이 각국 通貨의 購買力를 比較하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最近 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購買力平價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1인당 實質所得은 달러화를 매개로 한 換算이 나타내는 소득
의 1.27배(8,635/6,790=1.27)에 달하고,
중국의 경우는 무려 6.65배(2,460/370=6.6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평면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시계열의 비교로 가나우도를 이용한 통고의 구매력 비교
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간의
환율이 1980년 말부터 85년 말까지 4년동안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의 가치가 2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를 고려해 일본의 실질GNP성장률을 달러화로 표시하면 유로 1.95%에 그치고 있어 현실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성장이 퇴
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南北韓 통고의 구매력은 달러화에 대한 각각의 취급을 매개로 하여 비교할 때도 같
은 문제

이러한 연구들이 남한과 북한간의 통화 구매력을 비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국제법 비교의 방법론 논쟁에서 누차 지적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국제적인 비교를 원용하는 경우 남북한과 관련된 복잡한 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연구 결과를 원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남북한의 특특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자간의 독립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그 렇지만 남북한의 독립적인 연구가 남북한의 사정을 위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지라도 이 연구가 남북한 통화 구매력의 구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가 구매력 차이를 정확히 나타내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 다. 무엇보다도, 특히 북한의 자료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거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지속해 오다 근래에 들어와 다른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통화 구매력 차이에 대한 일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상품가격 및 수입료에 따른 광화의 구매력'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법 및 단위 평가평가법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 을 논하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구매력평가 및 단위 평가평가에 기초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정밀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실험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실험분석결과를 이용해 남한과 북한의

3)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소비수준을 비교한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1968)의 연구가 있다.

4) 국제법 비교의 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자는 Drechsler(1973)를 참조.
II. 購買力 比較 理論

일반적으로 国際間 通貨的 購買力を 비교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購買力平
價에 기초한 방법과 單位費用平價에 기초한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購買力平價
에 기초한 방법은 最終商品価格를 이용한
것으로서 각국 通貨의 購買力を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주로
消費側面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최
종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通貨的 購買力を 비교할 수도 있지만 生産
疊新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최종생산품을
 구성하고 있는 生産要素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通貨의 購買力은 商品購買力뿐만 아니라
生産力を 반영하는 生産要素 購買力を 통해
서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單位費用平價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通貨의 購買力を 비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購買力平價

購買力平價(purchasing power parity: PPP)란 모든 국가에서 通貨의 購買力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通貨의 購
買力이란 주어진 通貨를 가지고 재화 및 음
 역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인 物価와 購買力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
므로 購買力平價는 다시 말해 모든 국가에
서의 물가수준은 同一通貨로 표시하는 경우
같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용한 購買力平價 계산 방법을 설명
하기 위하여 $P$를 어떤 준거상품바스켓(reference commodity basket)의 自國通貨
(SW)표시비용이라고 하고, $P^*$를 동일한
상품바스켓을 구입하기 위한 他國通貨
(NW)표시비용이라고 하자. 또한 $E_{SW/NW}$를
自國通貨로 표시한 他國通貨의 價格의 
단위와 교환되는 自國通貨의 量
이라고 하면 購買力平價 관계는 다음과 같
이 표시될 수 있다.

$$P = E_{SW/NW} \cdot P^* \quad \text{(1)}$$

(1)식을 $E$에 대해 정리하면

$$E_{SW/NW} = \frac{P}{P^*} \quad \text{(2)}$$

와 같이 볼 수 있다. (2)식이 의미하는 바
는 두 국가 通貨간의 購買力平價는 두 국가
간의 物価水準比率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購買力平價를 이용하는 경우 몇가
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각국에
서 물가를 계산할 때 그 경제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농
목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수준은 그 국가 通貨의 購買力を 정확
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구매력평가는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제, 설사 각국의 물가가 그 경제내에 있는
모든 품목을 고려해 계산되었을지라도 각국
마다 존재하는 품목이 다르다고, 또한
존재하는 품목이 동일할지라도 각국마다 물
가계산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
이다.넷째, 구매력평가에서 가장하는 것과
는 달리 현실세계에서는 휘하며 등의 무
해결책을 못한 것의 존재한다. 이른
한 휘해결책은 상품 및 용역의 이동을 제한
할 만큼 크기 때문에 상호 거래가 존재하게
되고 구매력평가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넷
제, 경제학의 측면이 아닌 국
가의 경제에 휘해결책을 모델로 사용하게
되며, 구매력평가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넷
제, 경제학의 측면이 아닌 국
가의 경제에 휘해결책을 모델로 사용하게
되며, 구매력평가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넷
제, 경제학의 측면이 아닌 국
가의 경제에 휘해결책을 모델로 사용하게
되며, 구매력평가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單位費用平價

구매력평가가 각국의 競爭力を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제
시된 것이 單位費用平價(unit cost parity :
UCP)이다. 單位費用에 기초해 通貨의 購
買力を 비교하는 경우 도출된 결과가 각국
의 競争力を 반영한다는 장점에 의도도, 생산
비용은 可変의 利潤部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기적인 변화에 따라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商品價格에 비해 長期價格変化를 잘
반영해 주고 있고, 아울러 一時의 인 物資改變
보다는 永久의 物資改變를 보다 잘 나
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通貨의 相對
的 購買力 차이가 각국의 경제적 경제사
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기초한 購
買力平價보다 要素費用에 기초한 單位費用
平價가 적절할 것이다.

要素費用을 이용한 單位費用平價 계산방
법을 설명하기 위해 $W$를 자국에서의 要素
費用이라고 하고, $W^*$를 타국에서의 要素
費用이라고 하자. 또한 $PR$를 자국에서의 要
素생성이라고 하고, $PR^*$를 동일한 要素
의 타국에서의 生産性이라고 하자. 單位費
用平價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화폐단위로
표시했을 때 양국에서의 單位要素費用が 같
아진다는 것이다. 즉

$$ W/PR = E_{SW/NW} \cdot (W^*/PR^*) \cdots (3) $$

따라서 양국 通貨간의 單位費用平價 $E_{SW/NW}$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E_{SW/NW} = \frac{W/PR}{W^*/PR^*} \cdots \cdots \cdots \cdots \cdots \cdots \cdots \cdots (4) $$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국에서 生産性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타국에 비해 要素費用

5)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購買力平價을 絕對的
구매력평가라고 부른다. 絶對的 購買力平價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絶對의 購買力平
價를 이용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문제점은 동
일하므로 이 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증가하였을 때, 긴기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공통의 가치가 하락하고, 단위費用의 평균 $E_{SW}/NW$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費用의 평균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내수력주요 평균과 같아진다. $MP$를 자국에서의 장소공동생산, $MP^*$를 타국에서의 장소공동생산이라고 하고 이의 가정이 성립한다고 하자:

(i) 농업이 생산費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생산費用이 가의 농업費用으로 표시될 수 있다.

(ii) 국際의 생산費用가 농업에 중앙의 요인인 效率性 요인 $(PR/PR^*)$에 의해지만, 이가 농업과 가로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MP = (PR/PR^*) \cdot MP^*$$  \hspace{1cm} (5)

(iii) 生産要素市場이 완전 경쟁의이다. 따라서

$$W = P \cdot MP$$ \hspace{1cm} (6)

(5)식과 (6)식을 결합하면

$$\frac{P}{P^*} = \frac{W/PR}{W^*/PR^*} = E_{SW}/NW$$  \hspace{1cm} (7)

따라서, (7)식으로부터, 내수력주요와 단위費用의 평균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동일해짐을 알 수 있다. (7)식이 의미하는 바는 效率性 요인의 차이만큼 조정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국제貿易理論에서의要素費用均等화가 總量의水准(aggregate level)에서 성립한다.

III. 實證分析

위에서 소개한 이론들을 南北韓의 買入力으로 비교하는 데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들이資本主義制度
할에서 상품 및 용역의 이동이 자유롭고 성격이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퇴영의 경제체제는 금융경제체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 가공률, 통계 등에 의해 정해져기 때문에이다. 6) 그러나 비록 이들 이론들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공국 통용의 실질구매력을 비교하는 데 가치가 높더라도, 남북 통용 구매력 비교 연구의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이 논문에서 이용된 데이터는 크게 구매력평가 계산을 위한 데이터와 단위기구 평가 계산을 위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가. 商品구매력데이터

구매력평가 계산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는 1984년 한국의 상품구매력, 각목별 구매력 평가, 1984년 4월 기준, 상품구매력, 각목별 구매력 (구매가격)이다. 7) 한국의 데이터는 통계청의 협조로 취득할 수 있었고, 한국의 데이터는 통계원이 수시로 발표한 것을 한국貿易협회에서 1989년 정리 발표한 것이다.

<구매력자료 및 선택>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한국상품을 분류하는 작업과 양국 간 물품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적은이었다. 물품을 분류할 때, 한국의 경우 1984년 393개 품목을 상품구매력 지수 산정에 포함시켰고, 현재는 일부 품목의 다툼 및 신품목의 추가로 470개 품목을 상품구매력 지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대한 정보가 적으나, 그에 의한 품목은 상품구매력 지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대한 정보가 적으나, 그에 의한 품목은 상품구매력 지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제외시켰다. 8) 양국 물품의 품질을 비교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려웠다. 많은 농수산물 등 未加工 1次産業商品은 그래도 비교가 가능한 정도로 품의 차이가 뚜렷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産業商品들은 비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품목의 품질을 조사하기 위해 北한物品 전시전에 가서 일일이 살펴보고 비교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작업은 ICP작업에서의 品質對照作業 과정 중 일부(equivalence in quality 및 equi-

8) 이 논문에서의 品目選擇方法은 ICP에서 이용된 선택방법을 따랐다. ICP에서의 품목선택은, 첫째 最終生産品의 가격으로 하고, 둘째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품목의 최소수를 정하고, 셋째 각 품목의 선정은 충분히 크고 각국에 통통한 것으로 존재하는 품목으로 한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南北韓간의 양국 비교에서는 ICP의 카테고리 분류를 따르는 점으로 보아, 설계된 품목은 반면적인 것으로 소수의 품목만을 남겨 두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경우 많은 품목을 공유하고 있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으로 나타나 있어 30cm 정도의 조기 1마리를 몇 kg으로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비교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얕특 가공의 질 및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거친 후 남은 품목은 132개 품목이었다. 이 중 식료품이 66개, 비식료품이 66개이다. 비식료품 중 대부분은 전구, 카페라 필름, 양문판 등의 제조


11) 이러한 결과를 'own-weight effect'라고 부르며, 식자료의 Gerschenkron effect에 해당한다. 이는 수량과 값간의 역의

者물가수준 산정에 이용되는 품목의加重值

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北韓 品目の

상대적인支出加重值를 이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첫째와 두제 방식에 의한 결과를

 거의 평균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 논문에서는 南韓의加重值만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南韓의加重值만

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소위 ‘country reversal test’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南韓的 物가指數가 下向偏向(downward

biased)되도록 만들었다.11)加重值 부과시

132개 품목의 總加重值가 100이 되도록 조

정하여 상대적인加重值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暗市場価格〉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国家에서의 價格은

通貨의 購買力を 現実적으로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北韓通貨의 購買力を

보다 잘 나타낼 수도 있는 지표를 도입할

必要가 있다. 北韓에서의 暗市場価格は 暗

市場去来에 의해 형성된

価格이므로 暗市場価格가 北韓通貨의 購買

力を 보다 잘 반영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暗市場価格를 이용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北韓에서의 暗市場

価格は 北韓으로부터의 各種 지標 및 北韓에서

채취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關係機関

에서 작성 발표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暗

市場価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품목만

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에 이용된 총품목의
수가 적절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장가격이 가능한 품목은 시장가격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공식가격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시장가격에 대한 자료는 80년대 후반의 가격인데 일부 자료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어 일정한 범위로 나타낸 것이 있다. 이런 경우 최소값을 84년의 시장가격으로 하였다. 12)

나. 고용비용 및 생산데이터

단위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는 남과의 고용생산 및 기여이다. 고용생산은 연간 광물 가격화생산을 사용하는 자료로 나누어 얻어질 수 있는데, 남과의 광물 가격화생산, 산업별 생산 및 산업별 생산(나. 생산) 및 산업별 생산(나. 생산)에 대한 자료는 "한국 통계연감", "한국 통계연감" 및 "한국 통계연감"에서 얻을 수 있었다. 남과의 광물 가격화생산에 관한 1987년 데이터는 "남과의 경제지표"(통계연감)를 참조하였고, 산업별 생산에 관한 1987년 데이터는 황의각(1992)에 발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991년

12) 남과의 산업별 품목의 시장가격은 "표1"을 참조.
13) 단위고용비용은 생산요소의 수용을 비교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 밝혀졌다 고용이 생산요소 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질분석에서는 고용비용의 비교를 통해 단위고용비용을 도출해 내고 있다.

北韓의 總生產 및 產業別 生產에 관한 데이터는 韓國銀行이 개산한 데이터(『北韓의 GNP推計』)를 이용하였다. 北韓의 總就業者數는 『南北韓的經濟指標』 및 Eberstadt and Banister (1990)에 발표된 두가지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產業別 就業者數는 興的각 및 ILO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北韓 労動者的 平均賃金은 統一院이 발간한 『北韓的社會文化指標』에 나타난 수치를 사용했다.

〈單位勞動計算上的問題〉

南韓의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北韓의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봉착하였다. 總生產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할 때는 北韓의 總勞動者, 總生產에 대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했으나, 總生產 平均賃金에 대한 자료가 없어, 一般勞動者로 분류되는 직책의 賃金을 이용하였다. 總生產 單位勞動費用은 별로 문제점이 없었으나, 產業別 單位勞動費用을 계산할 때는 몇가지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首先, 南韓의 產業分類, 基準과 北韓의 產業分類, 基準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의각과 韓國銀行이 분류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둘째, 北韓 労動者的 產業別 賃金에 대한 자료가 출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北韓의 실상에 대한 통계가 수집되지 않으면 불가
능하거나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北韓의 産業別 労動者數를 계산해 보았다:
1) 첫번째로는 자신의 추정방법으로 産業別
就業者數를 구분해 놓고 있는 황의각의 자
료인데 그의 구분이 필자의 구분과 일치하
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2) 두번째로는
Eberstadt and Banister의 자료에 나타난

14) Eberstadt and Banister는 産業別 労動者數
을 소계하지 않고 職業別 労動者數를 소계하
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의 労動者는 國
家労動者(state labor), 事務労動者(office labor), 協同農場 労動者(coop labor), 서비
스労動者(service labor)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職種分類는 産業分類만 일치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조업분야 공장의
事務職 労動者인 경우 産業別 分類에서는製
造業으로 분류되는 반면 職業別 노동력분류에
서는 事務職으로 분류되고 있는 등 분류기준
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Eberstadt and
Banister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産業別 労動
者數로 이용할 수는 없다.
15) 北韓의 統計에 대해서는 출처마다 다른 수치
를 제시하고 있어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87년
總經濟活動人口에 대한 통계만 보더라도統一
院 자료는 897萬 2千名, Eberstadt and Ban-
ister는 842萬 4千名, ILO(1980년대 중반)는
783萬 8千名, FAO(1986)는 934萬 6千名 등
으로 자료에 따라 거의 150만名 정도의 차이
가 있다.
16) 南韓 및 北韓의 主要経済指標는 附表 2에
 나타나 있다.
1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ravis, Heston, and
Summers(1978)를 참조할 것.
18) 북한의 品目別 加重値 $\omega^*$가 가능하다면 다음
과 같은 식을 이용해 購買力平價를 얻을 수
있다.

\[
\sum(P_i/P_i^*)\omega_i^* \tag{10}
\]

19) (9)식에서 이용된 韓國銀行이 추계한 北韓의
GNP는 北韓의 實物生產을 南韓價格으로 평
總經濟活動人口에 황의각이 추계한 産業別
勞動者 比率을 곱해 産業別 勞動者數를 계
산하였다.[14] 3) 세번째로는 総經濟活動人口
는 Eberstadt and Banister의 통계를 이용
하고, 産業別 勞動者 比率은 ILO에서 발표
하는 통계를 이용하였다.[15] 셋째, 貨金에 관
한 데이터도 職業別으로 표시되어 있고 각 職
業從事者數가 표시되지 않아 본 논문의 의
도에 필요한 평균 및 제조업 勞動者의 貨金
을 勞動者로 분류되는 重勞動者, 輕勞動者
및 一般勞動者 貨金的 平均貨金으로 대신하
있다.

北韓의 總生產에 대한 最近의 자료는 韓
國銀行을 통해 1992년까지 가능하지만 北
韓의 産業別 勞動人口에 대한 자료는 1989
년 이후 가능한 것이 없어 1989년의 각 産
業別 勞動人口에 年間 人口成長률만큼 추가
한 수를 1989년 이후의 北韓의 각 産業別
勞動人口로 사용하였다.[16]

다. 購買力平價 및 單位費用平價 計算式

위와 같은 데이터 조정을 거친 후 購買力
平價을 계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은 (2)식의 변형식이다.[17]

\[
E_{sw/nw} = \frac{1}{\sum(P_i/P_i^*)\omega_i} \tag{8}
\]

(南韓的 品目別 加重値를 이용[18]) …(8)

한편 單位費用平價을 통해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を 비교하기 위해 이용한 식은 다음
과 같은 (4)식의 변형식이다.[19]
\[ E_{sw/NW} = \left[ \frac{W / (TP \times N)}{W^* / (TP^* \times N^*)} \right] \quad \ldots (9) \]

(8)식과 (9)식에서 \( P, P^*, \omega, TP \) 및 \( N \)
은 각각 \( i \) 종목의 南韓価格, 北韓価格, 南韓
에서의 加重値, (總)產業生產(實物), (總)
產業就業者數를 나타낸다.

2. 分析結果

가. 商品価格을 利用한 購買力 比較

（表 1）은 商品価格을 利用한 南北韓 通貨
의 購買力을 비교하고 있다. 첫째돌은 北韓
에서 공식발표한 價格(配給価格)資料를 利
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자료에 의한
1984년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平價是 北韓
1원 : 南韓 675.69원으로서 商去來換率에 의
한 南北韓 通貨의 交換比率 1 : 364.71과

비교할 때 北韓通貨의 購買力을 高評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憲章
과 일치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價格이 시장
에서 결정되지 않고 大部分 국가에 의해 결
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용품을 비롯한
大部分의 價格이 시장에서의 均衡條件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配給価格
을 통해 나타난 北韓通貨의 購買力은 實
質購買力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고, 南北韓
通貨간의 購買力平價是 北韓이 일반 거래에
서 이용하고 있는 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
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情報로운 것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北韓의 配給価格을 利用
해 얻은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平價가 商業
換率보다 北韓의 公式換率에 근접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去 北韓의 公式換率이 北
韓通貨를 지나치게 高評가하고 있다는 일반
적 허위에 비추어 볼 때 配給価格을 利用해
얻은 南北韓通貨의 購買力平價가 北韓通貨
의 購買力과 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 준다.

購買力平價를 상품 그룹별로21) 小分類별
 살펴본 결과는 위에서 註明한 것처럼 地
적한 문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北韓
에서 비해 南韓에서 상대적으로 食品類価格이
비싸고 기타 製造業品価格이 싸기 때문에
食品類의 비중을 크게 하는 경우 南韓通貨
의 購買力이 實質購買力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 （表 1）에서 나타나듯이 食品類만
을 고려한 南北韓 通貨의 購買力平價는
16:746.61로서 전체상품을 고려한 것에 비
해 10.5% 정도, 南韓通貨의 購買力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非食料品만을 고려하
는 경우 南韓通貨의 購買力은 전체상품을 고려한 경우보다 14.9% 정도 높게 평가되
고 있다.

〈表 1〉 商品価格を利用한 購買力平価(1984)
(北韓 원 : 南韓 원)

<table>
<thead>
<tr>
<th></th>
<th>公式価格</th>
<th>暗市場価格</th>
</tr>
</thead>
<tbody>
<tr>
<td>塊 상 품</td>
<td>1:675.69</td>
<td>1:135.35</td>
</tr>
<tr>
<td>條 紙 品</td>
<td>1:746.61</td>
<td>1:124.00</td>
</tr>
<tr>
<td>便 紙 品</td>
<td>1:575.15</td>
<td>1:162.76</td>
</tr>
</tbody>
</table>

【註】公式価格는 北韓의 配給価格이며, 暗市場価
格은 北韓으로부터의 優先価 및 南韓을 다녀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價格임.

配給価格이 시장에서의 需給條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北韓通貨의
購買力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
通貨간의 實質購買力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은 社會主義體制의 價格構造에
대한 연구에서 헛상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需給상황을 보다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價格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러한 목적을 위해 暗市場価格을 이용해 보
았다. 〈表 1〉의 둘째열은 暗市場価格의 과
약이 가능한 품목은 暗市場価格을 이용하고
暗市場価格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다른 품목
은 配給価格을 '그대로 이용해 購買力을 비
교해 얻은 것이다. 1984년 暗市場価格가 가
능한 품목은 전체 132개 품목 중 16개밖에
안되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한 결과는
첫째 결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즉 이 경
우 北韓通貨間의 購買力平価는 北韓 1원
:南韓 135.35원으로서 商業換率보다 北韓通
貨의 購買力を 상당히 저평가하고 있음을
남아내 주고 있다. 配給価格를 이용한 결과
와 일부 暗市場価格을 이용한 결과간에 거
의 다섯배(675.69/135.35=4.99)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Kornai가 지적한 대로
北韓経済도 다른 社會主義 국가와 마찬가지
로 '缺乏経済'(shortage economy)로서 낮
게 책정된 配給価格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
고 그보다 절제 높은 價格을 지불해야만 거
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 이후 大部分의 社會主義 국가들이
 경험한 바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체제 개방 이후 舊社會主義 国家들의 通貨
価格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그 국
가들의 상황이 다른 데 따른 요인도 있지
만 그와 아울러 압박되었던 需要가 표출되
면서 商品価格가 상승하고 따라서 通貨의
購買力이 現實化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도 市
場經濟体制를 도입해 상품에 대한 需給狀態
가 정확히 價格에 반영될 수 있다면 配給価
格에 기초한 購買力보다는 暗市場価格에 기
초한 購買力에 근접한 購買力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모든 품목의 價格이
現實化되는 경우 〈表 1〉에서와 같이 일부
품목의 暗市場価格만을 고려해 얻은 결과보
다도 원전 더 北韓通貨의 購買力を 절라서
시키고 南韓通貨의 購買力を 절상시킬 가능성

53
이 있다.  

暗市場価格を利用した購買力平値を消費支出形態別に分類して 보면、配給価格での実験結果では、価格の高い場合には、単位あたりの価格が高くなる傾向を示す。しかし、総合的な相場を比較すると、暗市場価格の購買力平値は、124.00以下である。したがって、購買力平値は暗市場価格に対する価格構造が予測される。また、値上げの程度で、暗市場価格の変動は、常識的な考え方を示す。表1における結果は、北韓の場合、暗市場価格の変動が非市場価格に比して、高い割合を示す。これは、暗市場価格に対する価格の変動が、市場の一定の傾向を示すものである。

3) 

このような結果を踏まえて、暗市場を含む暗市場の取引比率が、価格形成をモニタリング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暗市場の取引比率が高くなると、価格形成の変動は、北韓の市場を含めると、暗市場の変動が、市場の一定の傾向を示すものである。

4) 

南、北、韓で消費する場合、暗市場価格に対する価格の変動が、市場の一定の傾向を示すものである。表2における結果は、暗市場価格の変動が、市場の一定の傾向を示すものである。表2における結果は、暗市場価格の変動が、市場の一定の傾向を示すものである。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일정한 범위로 표시된 것들이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문단에서의 주의는 주로 단위가 표시된 범위를 정의하는 데서 유의해야 한다. 25)

1991년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문단에서의 주의는 주로 단위가 표시된 범위를 정의하는 데에서 유의해야 한다.

北韓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문단에서의 주의는 주로 단위가 표시된 범위를 정의하는 데에서 유의해야 한다.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문단에서의 주의는 주로 단위가 표시된 범위를 정의하는 데에서 유의해야 한다.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문단에서의 주의는 주로 단위가 표시된 범위를 정의하는 데에서 유의해야 한다.
끝행사 이용한 뉴라수용 평가 비교  

<table>
<thead>
<tr>
<th></th>
<th>總産業①</th>
<th>鑄工業①</th>
</tr>
</thead>
<tbody>
<tr>
<td>1987③</td>
<td>1,367.97 〜 1,823.96</td>
<td>1,191.62 〜 1,276.73</td>
</tr>
<tr>
<td>1991④</td>
<td>1,291.22 〜 1,515.78</td>
<td>1,258.08 〜 1,322.60</td>
</tr>
</tbody>
</table>

Eberstadt and Banister 등 왕의각의 인구자료를 이용한 경우⑤:

<table>
<thead>
<tr>
<th></th>
<th>總産業</th>
<th>鑄工業</th>
</tr>
</thead>
<tbody>
<tr>
<td>1987</td>
<td>1,457.58 〜 1,943.44</td>
<td>1,269.67 〜 1,360.37</td>
</tr>
<tr>
<td>1991</td>
<td>1,605.22 〜 1,884.39</td>
<td>1,093.47 〜 1,149.55</td>
</tr>
</tbody>
</table>

Eberstadt and Banister 및 ILO의 인구자료를 이용한 경우⑥:

<table>
<thead>
<tr>
<th></th>
<th>總産業</th>
<th>鑄工業</th>
</tr>
</thead>
<tbody>
<tr>
<td>1987</td>
<td>1,457.58 〜 1,943.44</td>
<td>1,551.68 〜 1,662.51</td>
</tr>
<tr>
<td>1991</td>
<td>1,605.22 〜 1,884.39</td>
<td>1,336.34 〜 1,404.8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h>
<th>總産業</th>
<th>鑄工業</th>
</tr>
</thead>
<tbody>
<tr>
<td>1987</td>
<td>1,427.71 〜 1,903.61</td>
<td>1,337.66 〜 1,433.20</td>
</tr>
<tr>
<td>1991</td>
<td>1,560.55 〜 1,761.52</td>
<td>1,229.30 〜 1,292.34</td>
</tr>
</tbody>
</table>

주: 1) 北樸勞動者的貨金에 대한確保한 자료가 없고 일정한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單位費用平價도 그에 상응해 일정한 범위로 나타났음. 
2) 異同算된 北樸의 總經活動人口과 왕의각이 추계한 異同別人口比率을 이용해 北樸에서의 異同別勞動者數를 구했음. 
3) 1984年北樸的 異同別生產은 왕의각에 제시된 異同別生產比率을 이용해 구했음. 
4) 1991年北樸의 異同別生產은 韓國銀行의 『北樸의 GNP 推計』를 이용하였음. 
5) Eberstadt and Banister가 추계한 總經活動人口과 왕의각이 추계한 異同別人口比率을 이용해 北樸에서의 異同別勞動者數를 구했음. 
6) Eberstadt and Banister가 추계한 總經活動人口과 ILO 등계에 나타난 異同別人口比率을 이용해 北樸에서의 異同別勞動者數를 구했음.
해 서비스에서의 금이 급상승한 사실을 감안하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기존의 문제를 이용한 결과가 북한 통로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단위 노동비용에 기초한 결과도 실질적인 북한 통로의 구매력을 나타내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에서는 금이 상당한 수준이라 두 개념으로 저지되고 있는지 의미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1992년 2월 13일) 북한 중앙 금융위치 사회로서 근로자들의 평균 생활비는 43.4% 이상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금는 보상구매를 이용한 단위 노동비용을 계산해 보면 1857.25 ~ 901,21로 북한 통로의 가치가 환산 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만일 북한의 금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생산성을 반영해 주고 현실화된다면 북한 통로의 가치가 지금보다 월등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지정한 대로 북한의 금은 북한에서의 금의 구조가 다른 한편에 남한의 금은 동일한 사용 개념으로서의 금으로 조정해야만 한다. 즉 북한의 금이 실제 충전용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북한의 금을 구조해 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중국의 경우와 비추어 북한의 금의 구조를 조정해 비교해 보면 이미 지정한 대로 북한 통로의 가치가 (표 2)에 나타난 수준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통로의 교환 비율 결정에 따른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환비율 결정의 방법을 도출해 볼 수도 있다. 독일에서의 통로를 비교해 고령기의 동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시에 소멸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단위 노동비용이 작아도 남한의 단위 노동비용, 좀더 나아가서는 주변 경쟁국들,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혹은 동남아 국가들의 단위 노동비용보다 작아지도록 교환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단위 노동비용과 같아지도록 하는 북한 통로의 교환비율을 북한 통로의 가치의 최소한수로 삼을 수 있다.

**IV. 북한의 가격구조 분석**

이 장에서는 (표 1)의 결과를 이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의 가격구조가 남한의 가격구조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격서열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폭먹이 상대적으로 고령기 및 저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북한은 어떤 폭은 간접적으로 사용도를 통해 금을 주고 어떤 폭에 가격을 정해 추로 볼 수 있다. 이는 환연을 통한 통로의 구매가 비교해서는 할
수 없는 분석인데, 그 이유는 만일 두 경제의
가격구조가 동일하다면, 북일물품의 가격에
환율을 곱하는 경우 동일한 남한물품의
가격과 같아져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구매
가능평가와 환율이 같아지지만 가격구조가 다
른 경우 구매가능평가와 환율간의 차이는 품
목마다 서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가격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예를
고려했던 132개 품목을 통계학의 구분에
따라 특정별로 분류한 후, 남한의 가구비가
북한의 가구비 상대적으로 얼마나만큼 고
평가 및 저평가되었는지를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표$q$을 만들었다:

\[ q = \sum q_i / n, \]  
\[ q_i = (P^* \cdot E_{SW/SM} - P_i) / P_i, \]  

(11) 및 (12)식에서 $q$, $n_i$는 각 그룹내
에서 $i$품목의 상대적 가격차이 및 그룹에
속하는 품목수를 각각 의미하는 변수이고,
$P^*$ 및 $P$는 각 그룹내 $i$품목의 북한가격 및
남한가격을 나타내며, $E_{SW/SM}$는南北韓
가구의 구매가능평가(여기서는 판의상
북한의
배상가격을 이용해 얻은 1:675.69를 이용)
를 나타낸 준다. 만일 南北韓간의 가격구조가
그룹단위별로 비교해 동일하다면 $q$값은
모든 그룹에서 0이 될 것이나 가격구조가
다르다면 $q$값은 0과 달라지게 된다. 北한에
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취급되는 그룹에서는
$q$값이 陽数로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렴
하게 평가되는 그룹에서는陰数로 될 것이
다. $q$의 절대값이 0에서 멀어날수록 南北韓가
北韓간의 가격구조에 더욱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表 3)에 나타난 $q$값에 따르면 우선 첫번
째, 食料品 그룹 전체는 南北韓의 동일 그룹과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한 바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유심히 살
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總食料品 66
개 중 北韓에서 높은 價格으로 평가되고 있
는 것은 1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9개 품목
은 南北韓에 비해 낮은 價格이 매겨져 있다.
그런데 總平均이 거의 0에 가깝게 나온 것
은 객차, 고구마 및 김 등의 일부 품목이
지나치게 높은 價格으로 매겨져 있어26) 채
소 및 해조 그룹의 $q$값이 큰 값의 陽數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北
한에서는 農産物價格を 南北韓에서보다 상대
적으로 낮게 매기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北한经济體制에서 그들의 주장대로 주
민들의 복지를 위해 生活必需品은 국가의
암묵적인 補助下에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奢侈品에 대해서는 높은 價格을 설정해 暗
黙의인 重課稅を 부과하고 있다면 農産物은
당연히 生活必需品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상
대적으로 낮은 價格을 통해 政府補助를 해
주어 食料品価格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동
일 食料品 그룹내에서도 소그룹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인 특징을 보
면 未加工品은 南北韓에 비해 價格이 낮은 반

26) 筆者は 이들 데이터상의 誤謬로 推測하고 있
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表 3 南北韓 價格構造 比較(1)(1984)

<table>
<thead>
<tr>
<th>q</th>
<th>식료품</th>
<th>육류</th>
<th>유란 유리</th>
<th>아가루</th>
<th>채소</th>
<th>해초</th>
<th>과일</th>
<th>유지</th>
<th>조미료</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곡류</td>
<td>육류</td>
<td>유란 유리</td>
<td>아가루</td>
<td>채소</td>
<td>해초</td>
<td>과일</td>
<td>유지</td>
<td>조미료</td>
<td>기타</td>
</tr>
<tr>
<td>q</td>
<td>주거비</td>
<td>공절/수도</td>
<td>가구/가사</td>
<td>피복/신발</td>
<td>보건/의료</td>
<td>교육/오락</td>
<td>교통/통신</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td>
<td>-0.888</td>
<td>0.081</td>
<td>-0.414</td>
<td>0.749</td>
<td>-0.301</td>
<td>-0.213</td>
<td>0.405</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0.530</td>
<td>NA</td>
<td>1.335</td>
<td>0.588</td>
<td>-0.219</td>
<td>0.713</td>
<td>0.022</td>
<td>0.335</td>
<td></td>
<td></td>
</tr>
</tbody>
</table>

注: 1)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품목비교는 (附表 1)에 있음.
2) 밥, 과자, 찔, 음료, 주류, 외식을 포함.
3) 이·미용, 장신구, 담배, 숙박료 및 수수료를 포함.

면 加工品은 價格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그룹들 중 北韓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은 주거비 그룹과 보건·의료 그룹이다. 이 는 社會主義 국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거비용을 거의 저축하지 않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그룹의 價格도 마찬가지로 정부 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南韓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다. 반면 가구 및 가사용품 그리고 피복·신발 등은 南韓에 비해 활선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北韓에서 生活必需 品의 개념이 南韓과 다르며 南韓에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에 生活必需品화되어 있 는 것이 奢侈品으로 간주되어 높은 價格을 통한 일종의 準課稅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 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그룹이 價格과 일치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교육 및 오락 그룹은 다소 價格과 일치되지 않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국가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어 資本主義 국가에 비해 價格이 낮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의 비 교에서 北韓 價格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統 計廳의 分類에 따른 教育·오락 품목에 TV, 교양·오락기구, 학용품 및 교양·오 락서비스 등 어느 정도 생활 수준에 이르러 야 소비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北韓에서는 이들을 담연히 奢侈品으로 간주 하고 價格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南韓通貨와 北韓通貨간의 購買力差異를 商品価格 및 勞動費用를 이용해 비교해 보았다. 이들 결과에 따르면 北韓의 公式価格 및 公式賃金을 이용하는 경우 南北韓通貨간의 購買力差異는 현제 北韓이 国際貿易에서 동영하고 있는 商業換算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北韓에서의 價格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결정되고 北韓勞動者の 賃金 또한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북한 통화의 구매력에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에서의 가격 및 금리의 실제적인 필요과 공급 상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통화의 구매력이 이 논문에서 가사 가격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시장 가격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통화의 실제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북한에서의 가격을 조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정직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실정결과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가격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국가적 대내외적 요소, 보건·의료 등이 남한에 비해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활필수품에 대해 북한이 인위적으로 낮게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자발적 가격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공공의료, 교육, 가사용품, 의복, 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노동을 경제하고 소비에 대한 일종의 편리성을 부과하는 북한당국의 인위적인 가격구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가격구조 차이는 일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북한의 제도에 의해 인위적인 가격구조를 의한 가격구조의 조정으로 인한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정직할 수 있다.

參 考 文 献

統計廳,『主要統計指標』, 各號.
——,『韓國的物価指標』, 各號.
——,『韓國統計年鑑』, 各號.
統一院,『北韓經濟動向 綜合評價』, 各號.
——,『北韓經濟現況』, 各號.
——,『北韓的社會文化指標』, 1991.

韓國貿易協會,『北韓的流通構造와 價格體系』, 1989.
韓國銀行,『北韓的GNP 推計』, 各號.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tians, Comparison of Levels of Consumption in Austria and Poland, Document WG. 22/19, United Nations, 1968.


<table>
<thead>
<tr>
<th></th>
<th>單位</th>
<th>配給價</th>
<th>暗市場價格</th>
<th>南韓價格</th>
</tr>
</thead>
<tbody>
<tr>
<td>쌀</td>
<td>Kg</td>
<td>54</td>
<td>10,135～13,514</td>
<td>810</td>
</tr>
<tr>
<td>보리</td>
<td>Kg</td>
<td>41</td>
<td>6,757～10,315</td>
<td>440</td>
</tr>
<tr>
<td>간장</td>
<td>Kg</td>
<td>122</td>
<td>1,351～2,027</td>
<td>596</td>
</tr>
<tr>
<td>닭갈</td>
<td>1개</td>
<td>115</td>
<td>4,730</td>
<td>60</td>
</tr>
<tr>
<td>데지고기</td>
<td>Kg</td>
<td>4,730</td>
<td>13,510～27,028</td>
<td>3,100</td>
</tr>
<tr>
<td>소고기</td>
<td>Kg</td>
<td>5,068</td>
<td>23,649～27,028</td>
<td>8,933</td>
</tr>
<tr>
<td>두부</td>
<td>1도</td>
<td>81</td>
<td>2,027</td>
<td>132</td>
</tr>
<tr>
<td>천약</td>
<td>1개</td>
<td>946</td>
<td>4,730～5,406</td>
<td>385</td>
</tr>
<tr>
<td>첫술</td>
<td>1개</td>
<td>811</td>
<td></td>
<td>210</td>
</tr>
<tr>
<td>스타킹</td>
<td>1개</td>
<td>676</td>
<td></td>
<td>366</td>
</tr>
<tr>
<td>운동화</td>
<td>1개</td>
<td>2,297</td>
<td>10,135～13,514</td>
<td>3,415</td>
</tr>
<tr>
<td>양복</td>
<td>1벌</td>
<td>81,083</td>
<td>202,707～270,276</td>
<td>77,900</td>
</tr>
<tr>
<td>컬러TV</td>
<td>1대</td>
<td>810,828〜1,013,535</td>
<td>13,513,800</td>
<td>265,920</td>
</tr>
<tr>
<td>시계(전자)</td>
<td>1개</td>
<td>47,298〜67,569</td>
<td>202,707〜405,414</td>
<td>31,096</td>
</tr>
<tr>
<td>카메라</td>
<td>1대</td>
<td>270,276</td>
<td>675,690</td>
<td>132,369</td>
</tr>
<tr>
<td>선물기</td>
<td>1대</td>
<td>54,055</td>
<td></td>
<td>33,515</td>
</tr>
<tr>
<td>세탁기</td>
<td>1대</td>
<td>270,276</td>
<td></td>
<td>184,370</td>
</tr>
<tr>
<td>다리미</td>
<td>1개</td>
<td>16,892</td>
<td></td>
<td>16,275</td>
</tr>
<tr>
<td>자전거</td>
<td>1개</td>
<td>270,276</td>
<td>2,702,760</td>
<td>5,249</td>
</tr>
<tr>
<td>전진자</td>
<td>1개</td>
<td>270</td>
<td></td>
<td>211</td>
</tr>
<tr>
<td>안경</td>
<td>1개</td>
<td>9,460〜14,189</td>
<td></td>
<td>12,562</td>
</tr>
<tr>
<td>주전자</td>
<td>1개</td>
<td>6,757</td>
<td></td>
<td>1,885</td>
</tr>
<tr>
<td>멀추</td>
<td>1병</td>
<td>622</td>
<td></td>
<td>617</td>
</tr>
<tr>
<td>소주</td>
<td>1병</td>
<td>1,622</td>
<td>13,514</td>
<td>309</td>
</tr>
<tr>
<td>클라</td>
<td>1병</td>
<td>1,014</td>
<td></td>
<td>217</td>
</tr>
<tr>
<td>사이다</td>
<td>1병</td>
<td>811</td>
<td>3,378</td>
<td>222</td>
</tr>
<tr>
<td>담배(평양)</td>
<td>1갑</td>
<td>1,216</td>
<td>13,514</td>
<td>500(술)</td>
</tr>
<tr>
<td>냉면 1인분</td>
<td>1인분</td>
<td>1,352〜1,689</td>
<td></td>
<td>1,594</td>
</tr>
<tr>
<td>택시</td>
<td>1km</td>
<td>676</td>
<td></td>
<td>600</td>
</tr>
<tr>
<td>버스</td>
<td>1회</td>
<td>68</td>
<td></td>
<td>106</td>
</tr>
<tr>
<td>지하철</td>
<td>1회</td>
<td>68</td>
<td></td>
<td>179</td>
</tr>
<tr>
<td>전화(시내)</td>
<td>1회</td>
<td>68</td>
<td></td>
<td>20</td>
</tr>
<tr>
<td>이발료</td>
<td>1회</td>
<td>473〜676</td>
<td></td>
<td>5,279</td>
</tr>
<tr>
<td>목욕료</td>
<td>1회</td>
<td>68</td>
<td></td>
<td>800</td>
</tr>
<tr>
<td>유원지 입장료</td>
<td>1회</td>
<td>34〜68</td>
<td></td>
<td>521</td>
</tr>
<tr>
<td>우표</td>
<td>1매</td>
<td>68</td>
<td></td>
<td>70</td>
</tr>
</tbody>
</table>

注: 此表中的北韓數值是商品價格的平均值(1:675.69)在北韓價格中也有上表的資料。

資料: 統一院, 『北韓聯通分析』, 1984.[韓國貿易協會, 『北韓聯通結構和價格體系』, 1989에서 제안
용]: 統計局, 『韓國的物價指標』.
다음은 1987년과 1991년의 남한과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table>
<thead>
<tr>
<th>지표</th>
<th>1987년</th>
<th>1991년</th>
</tr>
</thead>
<tbody>
<tr>
<td>GNP(세상: 럼달러)</td>
<td>1,363</td>
<td>2,817</td>
</tr>
<tr>
<td></td>
<td>194</td>
<td>229</td>
</tr>
<tr>
<td></td>
<td>143</td>
<td>225</td>
</tr>
<tr>
<td></td>
<td>39</td>
<td>64</td>
</tr>
<tr>
<td></td>
<td>452</td>
<td>806</td>
</tr>
<tr>
<td></td>
<td>116</td>
<td>87</td>
</tr>
<tr>
<td></td>
<td>768</td>
<td>1,786</td>
</tr>
<tr>
<td></td>
<td>39</td>
<td>78</td>
</tr>
<tr>
<td>1인당 GNP(달러)</td>
<td>3,110</td>
<td>6,518</td>
</tr>
<tr>
<td></td>
<td>936</td>
<td>1,038</td>
</tr>
<tr>
<td>무역수지(달러)</td>
<td>76.6</td>
<td>-51.5</td>
</tr>
<tr>
<td></td>
<td>-8.6</td>
<td>-6.2</td>
</tr>
<tr>
<td>수출</td>
<td>462.4</td>
<td>766.3</td>
</tr>
<tr>
<td></td>
<td>16.4</td>
<td>10.2</td>
</tr>
<tr>
<td>수입</td>
<td>385.8</td>
<td>817.8</td>
</tr>
<tr>
<td></td>
<td>25.0</td>
<td>16.4</td>
</tr>
<tr>
<td>예산규모(달러)</td>
<td>192</td>
<td>428</td>
</tr>
<tr>
<td></td>
<td>141</td>
<td>172</td>
</tr>
<tr>
<td>취업자(만명)</td>
<td>1,599.6</td>
<td>1,547.3</td>
</tr>
<tr>
<td></td>
<td>897.2</td>
<td>991.5</td>
</tr>
<tr>
<td></td>
<td>358</td>
<td>376.8</td>
</tr>
<tr>
<td></td>
<td>340.9</td>
<td></td>
</tr>
<tr>
<td></td>
<td>560.2</td>
<td>366.8</td>
</tr>
<tr>
<td></td>
<td>323.2</td>
<td></td>
</tr>
<tr>
<td></td>
<td>817.2</td>
<td>247.9</td>
</tr>
<tr>
<td></td>
<td>224.3</td>
<td></td>
</tr>
<tr>
<td>임금(원)</td>
<td>386,536</td>
<td>754,673</td>
</tr>
<tr>
<td></td>
<td>60</td>
<td>68.7</td>
</tr>
<tr>
<td></td>
<td>334,372</td>
<td>696,565</td>
</tr>
<tr>
<td></td>
<td>94.3</td>
<td>77.6</td>
</tr>
<tr>
<td></td>
<td>502,650</td>
<td>851,219</td>
</tr>
</tbody>
</table>

주: 1) 자료는 통계청의 '주요 통계 지표'와 통일부의 '南北統計 指標' 및 '南北統計動向 綜合評價'을 이용하였다.  
2) 자료는 통계청의 '주요 통계 지표'와 통일부의 '南北統計 指標'을 이용하였다.  
3) 자료는 통계청의 '南北統計 指標'을 이용하였다.  

63
貧困對策의 再照明：
協同組合을 통한 脫貧困運動의 活性化를 중심으로

權 純 源

本稿是 貧困問題를 토대로 새로운 觀角을 설명하고 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
해서 집필되었다. 소극적이고 福祉次元的 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自主의 労動에 의해
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最善의 貧困對策이라고 본 觀点인 것이다.

世界銀行 등의 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努力과 労動에 의해 自立할 수
이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最善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社會扶
助의 大家們인 貧民들이 個人的으로나 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
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所得增加, 나아가서 地域開発 및 國
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进而 社會的 安定 및 政治的 基盤形成 등 비람작
한 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本稿에서는 대동여기 시작된 正民들의 生產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地域사회에
근거를 둔 経濟共同體事業의 活性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就業機會가 확충되고 地域
開発이 촉진되며 그들의 所得增加를 통하여 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貧困
對策의 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貧民들은 協同組合을 결성하여 自立할 수 있도
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價格単金庫 등을 통한 金融支援
과 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I. 序 言

貧困問題는 經濟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筆者：本院 研究委員
* 草稿を 얻고 유익한 助言과 論評을 해주신 本
院의 朴元巖・髙日東 博士와 本稿을 완성하는
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고 보장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
리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왜 일반적
인 經濟水準의 上昇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
민들은 衣・食・住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가? 어떤 이유로든 市場經濟라능 競爭

65
의 장에서 나오되었거나 사회保障의 未備 등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직면 하여 필요한 社會의 安全網(social safety net)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이 常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는 現実로 나타나고 있 기에 현실에 기반을 둔 分析과 處方이 요구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国内外 情勢 및 経済社會의 변동에 따라 貧困問題를 보는 視角 또는 달 라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먼저 貧困의 根本的 原因과 빈곤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視角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런다면 貧困層을 도와 이들로 하여금 市場에서 生産活動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経済成長에 치중하면 貧困問題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経済에 부분을 주는 한가 하더라도 독립적인 貧困對策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종래의 視角을 탐색하여 経済成長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貧民을 포함한 國民 다수의 참 여를 유도하는 實行計劃 중심의 貧困對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視角을 설명하고 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 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그러므로 市場經濟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대 도움을 준 尹聖媛・金賢淑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

1) 資本은 다시 實物資本(physical capital)과 人的資本(human capital)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경우 勞動은 비교적의 能力を 발휘할 수 있는 貧困層에 대해서는 個人이든 다른 貧民과의 協同을 통해서 그들의 能力を 키워 최대한 活用할 수 있도록 고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도저히 生産活動에 참가할 수 없는 부류의 貧困層에 대해서는 社會保障을 통한 最低生計費의 公的支援이 필요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노동할 수 있다면 貧民들이 할지라도 상호간 연대에 의하여 生産活動에 가담하여 階層상向運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人間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고, 특히 그들의 子女들이 教育과 訓練을 통하여 人的資源을 촉각해 나가도록 고무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정책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II. 貧困의 原因과
不正 公是正的 必要性

근본적으로 貧困의 経済的 原因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生産的인 資源의 量이 적고 質이 市場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결여된 사람들도 계외한다면 개인의 혼란이나 教育秩序가 낮거나 運이 없거나 相續財産이 거의 없는가 社會的으로 差別이 있는 경우 등이 열거된다. 먼저 家計所得은 就業을 통한 補償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本質의으로 그 働家가 보유하고 있는 資源(勞動과 資本)의 量과 그 資源이 市場에서
이렇게 평가되는가에 달려 있게 된다. 따라서 가난한 농민은 노동과 자본의 둘에 적거나, 또는 자원의 질이 낮아 제대로 재배가 되지 않고, 설혹 취업이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의 평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2)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실패의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박에 의하여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도 많다. 경제성장은 공공정책의 유효 및 추진에 힘입어 달성된 부분도 적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과감한 기업가정신이나 근로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체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규범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쟁적인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균형의 미rror를 찾아 대식시키려는 내면의 인적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 광경에도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넏히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복음 25:29)는 구절이다. 이와 같은 경향을 조장하는 기회는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의 두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질병, 업무, 인플레이션, 교육, 이자 등 다섯가지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들 요인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여기에 국가의介入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인류은 지마다 지어질 때 부여된 능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고 발휘하며 사회에 공헌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책임의 범주를 벗어난 요인(출산 및 출산 후의 환경)이 정해져 되어 노동자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이런 요인들이 여려가지 차별을 낳아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하는 성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근본이 되는 평등의 부재를 제거하여 평등감 없음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자유화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의 육구가 한꺼번에 분화되어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었음은 우리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과거 사회적 협력이 없어 여론형성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믿이 따르지 않아 빈곤계층에 머무르게 된 일ئ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사회발전의 희생양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전망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는 소득분배(을를 당초소득의 분배라고 부르자)를 위해, 재정支出, 稅收 또는 社會保障政策에 의하여 再分配시켜야 하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각 개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売産要素, 즉 각종 労動, 儲蓄 및 土地인 売産要素市場에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결합하여 売産을 행하는 企業에 이들 売産要素를 수요한다. 그런데 売産要素市場이 競争의이 라면 売産要素에 대한 需給의 均衡이 이루 어지지 売産要素価格과 売産過程에 소요되는 売産要素의 数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각 売産要素에 대한 所得이 또한 결정되는데 이는 売産요소격과 売産투입량을 곱하여 산출된다. 시장기구를 통하여 각 개인이 얻게 되는 당초所得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売産요소가 売産에 공헌하는 바에 대응하는 報酬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売産要保有量, 売産요소시장의 需給關係, 그리고 市場의 競争程度 등이 所得分配에 영향을 주게 된다.

分配되어야 할 總額으로서 売産總額에 대한 각 개인의 貢獻, 다시 말해서 寄与度에 따라서 所得을 얻는 것이 公平하다고 하는 分配의 公平觀은 貢獻原理(merit prin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売産要素 일부 사람들 사이에 뿌리가 깊으며, 경제의 所得分배를 상당한 정도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再分配政策에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초소득의 분배는 각자가 보유하는 売産요소의 물과 種類에 의존하기 때문에 疾病이나 障害 또는 老齢으로 생산에 공헌할 수 없을 경우 所得이 없는 상태로 개인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貢獻原理를 존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는 公平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所得再分配의 需要출이 제기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公平觀은, 시장기구에 의한 所得分配를 그대로 公平한 分配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① 본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疾病, 障害, 老齢, 失業 등의 原因에 의하여 생산에 공헌할 수 없는 사람들의 生活保障, ② 相續資產에 대한 相續税, ③ 教育의 機會均等, 그리고 ④ 市場의 競争性, 確保를 전제조건으로 한 다음, 生産에 대한 貢獻度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公平하다고 본는 公平觀이 우리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権純源 외, 1992).

III. 貧困問題 및 貧困對策을 둘러싼 視角

1. 종래의 視角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西歐社會에 있어서 貧困對策의 효시는 救貧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貧困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
다는 민공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민공이 일어진 사람들에게 홍수이
언에서 도출을 제공한다. 대가. 성장
에 1차의 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한편 빈곤이
나 소득배분에는 2차의 인 의미를 부여하
는 둘 ‘ 경제성장의 귀중히 상대적으로 나온
계층으로부터 보다 가난한 계층으로 이전되
도록’ 유도하는 방식(trickle down)이 주
류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된다. 3) 따라서 어
디까지나 성장으로 이전하면서 부수적으
로 사회적보장제도나 교육, 공중건강, 생산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보장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보장의 효과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보
다는 사항을 분리시키기 이윤의 근본적임으로써 경제학적 무당을 준 것도 사실
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제
시되어 온 산업개혁을 보면 크게 두가지 접
근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육이나 협
력, 취업절편 등을 통하여 취업가능한 빈
곤층의 생활정신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며, 다
른 하나는 주권이 점점히 사항으로 부수적으로
바로 가능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최
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적자체의 경
우에는 어린이나, 노인, 노동자나, 정신질환
생산활동이 어려운 계층이 포함된다. 그러
므로 이와 같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거나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생활성이 낮아 가
난할 수밖에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소득
지원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보장의 생활정신을 높이기 위한政
策수단으로는 교육, 고용 및 의료의 사회적보장
이 손꼽힌다. 크게 보아 두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상자로 위
한 개인의 소득스웨이트가 그 하나이며, 교육
이나 고객의 서비스와의 제품, 부자 및 서
비스의 제공자와의 둘, 다른 하나이다.前者
에는 우선 직업교육, 소득을 위한 교육,
직업관련 보수교육, 특수장애자직업훈련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고, 이와 같은 직업
훈련의 보수교육로서 정부나 민간기업을 대
상으로 추진하는 영세민과 장애자의 취업보
를 위해 고용증대시책, 그리고 고용기관과
의 관할관계에 관한 정부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4) 교육, 주택, 보건의료 등의 분야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빈곤층
의 생활정신이 증가될 수 있었으나, 이들 프
로그램은 사회적보장에 의거 국민의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빈곤층에만
한정되는 시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정부의 적자체 민 소득지원정책으로는 여
러가지가 열려될 수 있겠으나 크게 보아 소
비교적보장과 사회적보장에서 공의 할인, 사회적보장서비스, 그리고 사회적보장과의
대외적으로 할인, 사회적보장서비스 및
의 관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말하는데 등 체적으로 소득지원정책의
핵심이 된

다. 사회福祉서비스는 가난, 신체적, 고유성 등 특수목표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회서비스를 가리키며, 사회보장관련사업은 반드시 그 거주지로 하지 않는 가장 교육, 건강, 고용, 그리고 보건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경제적 인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저소득층의 특별히 산업을 제공하고 있는 생활보호구역이나, 산업 서비스, 자산 보호나, 보호 서비스, 그리고 일리실에 대한 지원 또는 임금 보조금, 직업훈련보조금 등 기본수요자비로 나누어 행해지고 있는 현행제도가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새로운 시각  

가. 미국의 근거적 논거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이 왕따를 둘러싸고 보호자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 정비를 통해 대리하고 있다. 보호자간은 미국의 공적기 부조기의 관리와,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 기록을 악용하여 일하지 않고 적게 살고 있는 바, 이들이 미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복지의 대폭을 실시하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주요한 문제는 복지제도가 갖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근본원인은 개인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나 수단의 부족에 있으므로 이 면에서 반전한 많은 사회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진보적 정의에서 복지제도는 개인의 근원은 복지제도 외의 다른 태도에 있다고 설명하면 복지의 굴착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들의 의타성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인권이 일정히 삶이 허락하지만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교육, 훈련, 의료 보험, 이양 등 복지제도의

최근 미국의『엘우드』(Ellwood, 1988)은 미국의 빈곤정책을 둘러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논리에는 양쪽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계제도의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엘우드」의 논지는 평안에 설계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동의 범위에 의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며, 복지제도는 단기적 전과의 보호기제로서 역할해야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엘우드」가 제시하는 처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의 배치이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장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가장 무작정이 적고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노동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는 일시적으로 계약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기적 긴급 지원, 교육, 사회의 지원 등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런 지원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과도기의 지원을 모두 다 이용하여 시한이 지나고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최저급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도 자신만의 노력을 통해 자립하도록 돕는 방안이 미국 설계제도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엘우드」의 주장인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점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나. 세계은행의 퇴기대책
세계적으로, 퇴기 문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해 왔으며, 선진국의 경제의적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 빈곤화는 점점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설계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복지를 조직이 태어하였고, 이는 성공적인 지역사회개발과 평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이고 지역의 단독, 광범위한 경제의적 평가, 정책적 평가, 이에 따라 평가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이고 지역의 단독, 광범위한 경제의적 평가, 정책적 평가, 이에 따라 평가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이고 지역의 단독, 광범위한 경제의적 평가, 정책적 평가, 이에 따라 평가를 보여 주었다.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노동과 노동에 의해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무단한 일을 하는 기회는 중대해야 한다. 둘째,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초월한 데 불가능한 인형에 의해 변절 가능성을 언제나 존재하며, 빈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저의 안전망으로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홍미있는 것은 세계은행이 제3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처방이 미국과 일본의 빈곤정책의 반성에서 제기된 '엘루우드'의 주장과 상당히 부합하는 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정책은 한국의 고민과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과 노동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고용을 도와주는 것을 기초로 하되,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 학생, 만성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보호와 보상의 역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없거나 (일시적 장애, 단기적 질병, 연少 등으로) 진공소재에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일정의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도 아울러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폐민운동의

展開의 폐貧對策의 基本方向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를 넘어서는 시기에는 폐민운동은 그간 개척공로 등 종교기관의 후원 아래 주로 소아 후속과 생활관련 이슈를 주제로 정치적 투쟁이나 사회주의의 이념전체에 열중한 바 있으나,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의 민주화, 이념과 함께 현실적인 당면과제인 폐민들의 삶을 고려한 정책의 구축은 과전 대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의 폐민운동의 이러한 중점은 종교인이나 폐민指導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해 폐민들이 지나고 있는 노동력과 소규모의 자본, 미숙한 래와 약간의 전문적 실력과 맞물려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과 초래, 간단하지 않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는바, 이들 NGO들은 부분적으로 상호간 의제교환, 협력사업전개 등으로 연대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사태의 발전은 빈곤문제나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솔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UN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중점으로 폐민대책에 향후의 노력에
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의 관심 사도, 민간指導자와 민간단체의 참여하는 NGO와 지역사회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자발 적인 계층 상호운동을 지원하려는 데 보아 지고 있는바, 이들은 동아 및 소련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혁명적 변화로 도달하는 실현적 모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사회서비스나 공의 편리한 대상자로서 도착한 노동력의 자발적 활동을 찾기 힘들어 독특한 복지관의 한 부분이였던 민간들이 노동력의 축적의 증가로 활동을 찾게 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재정적 지원에 다가오는 이들이나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동체, 이와 같은 특기한 사회참여는 변화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유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안정 그리고 정치적 기반성상

7) 이른바 UN은 '人間中心의 경제發展'을 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0년부터 매년 '人間開発報告書'(Human Development Report)을 발간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장려하고 있고, 세계은행 역시 '人間開発'to 위한 전략적 노력(Wold Bank, 1993)을 전개하고 있으며, IMF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IMF, 1988)를 토대로

Ⅳ. 난민재정의 재정문
가. 경제성장율을 지원하는 난민재정

Ⅲ. 난민에서 우리는 종래의 소극적인 난민 정책에서, 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인적, 문화적 지원을 위한 정책, 자립, 자립, 자립의 방향으로 다시 생각하여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큰 재정적 지원 없이 이와 같은 난민지역내에서의 재생산의 민간주도 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때 성장과 난민 등의 특수적인 외부효과(그래고, 사회안정이라는 전문적인 해석)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난민들의 자립을 조기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기해 나가는 정책조정이 요구된다.

경제성장은 난민의 계속적인 감축을 위해서 일반적인 필요한 조건이며 지속적 성장과
로 알려져 있다. 그림으로는 농업, 정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는 "농업종교"를 축전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제반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 정책이나 인력자원정책에 대한 제스"를 통한 직접적인 "농업정책努力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농업정책과 미시적 "농업정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농업의 서로 별도의 관계정

<table>
<thead>
<tr>
<th>〈표 1〉 社會的 階層上向 移動에 대한 態度</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r>
<td>(단위: %)</td>
</tr>
<tr>
<td></td>
</tr>
<tr>
<td>1988</td>
</tr>
<tr>
<td>1991</td>
</tr>
<tr>
<td>가능성이 높다</td>
</tr>
<tr>
<td>------------------------------------------</td>
</tr>
<tr>
<td>世代間 移動</td>
</tr>
<tr>
<td>全國</td>
</tr>
<tr>
<td>64.0</td>
</tr>
<tr>
<td>30.2</td>
</tr>
<tr>
<td>5.8</td>
</tr>
<tr>
<td>60.7</td>
</tr>
<tr>
<td>31.7</td>
</tr>
<tr>
<td>7.6</td>
</tr>
<tr>
<td>市部</td>
</tr>
<tr>
<td>65.2</td>
</tr>
<tr>
<td>29.3</td>
</tr>
<tr>
<td>5.5</td>
</tr>
<tr>
<td>59.1</td>
</tr>
<tr>
<td>32.5</td>
</tr>
<tr>
<td>8.4</td>
</tr>
<tr>
<td>郡部</td>
</tr>
<tr>
<td>61.2</td>
</tr>
<tr>
<td>32.3</td>
</tr>
<tr>
<td>5.5</td>
</tr>
<tr>
<td>65.3</td>
</tr>
<tr>
<td>29.3</td>
</tr>
<tr>
<td>5.4</td>
</tr>
<tr>
<td>國卒以下</td>
</tr>
<tr>
<td>56.6</td>
</tr>
<tr>
<td>36.0</td>
</tr>
<tr>
<td>7.4</td>
</tr>
<tr>
<td>57.8</td>
</tr>
<tr>
<td>35.1</td>
</tr>
<tr>
<td>7.1</td>
</tr>
<tr>
<td>中卒</td>
</tr>
<tr>
<td>61.6</td>
</tr>
<tr>
<td>32.3</td>
</tr>
<tr>
<td>6.1</td>
</tr>
<tr>
<td>58.7</td>
</tr>
<tr>
<td>32.5</td>
</tr>
<tr>
<td>8.8</td>
</tr>
<tr>
<td>高卒</td>
</tr>
<tr>
<td>68.0</td>
</tr>
<tr>
<td>27.3</td>
</tr>
<tr>
<td>4.7</td>
</tr>
<tr>
<td>61.3</td>
</tr>
<tr>
<td>30.9</td>
</tr>
<tr>
<td>7.8</td>
</tr>
<tr>
<td>大卒以上</td>
</tr>
<tr>
<td>75.1</td>
</tr>
<tr>
<td>20.7</td>
</tr>
<tr>
<td>4.1</td>
</tr>
<tr>
<td>66.7</td>
</tr>
<tr>
<td>26.5</td>
</tr>
<tr>
<td>6.8</td>
</tr>
<tr>
<td>世代內 移動</td>
</tr>
<tr>
<td>全國</td>
</tr>
<tr>
<td>53.6</td>
</tr>
<tr>
<td>34.3</td>
</tr>
<tr>
<td>12.1</td>
</tr>
<tr>
<td>43.9</td>
</tr>
<tr>
<td>38.0</td>
</tr>
<tr>
<td>18.1</td>
</tr>
<tr>
<td>市部</td>
</tr>
<tr>
<td>53.1</td>
</tr>
<tr>
<td>34.4</td>
</tr>
<tr>
<td>12.5</td>
</tr>
<tr>
<td>42.1</td>
</tr>
<tr>
<td>38.8</td>
</tr>
<tr>
<td>19.1</td>
</tr>
<tr>
<td>郡部</td>
</tr>
<tr>
<td>54.6</td>
</tr>
<tr>
<td>34.1</td>
</tr>
<tr>
<td>11.3</td>
</tr>
<tr>
<td>49.0</td>
</tr>
<tr>
<td>35.7</td>
</tr>
<tr>
<td>15.3</td>
</tr>
<tr>
<td>國卒以下</td>
</tr>
<tr>
<td>49.5</td>
</tr>
<tr>
<td>37.8</td>
</tr>
<tr>
<td>12.7</td>
</tr>
<tr>
<td>41.8</td>
</tr>
<tr>
<td>39.0</td>
</tr>
<tr>
<td>19.2</td>
</tr>
<tr>
<td>中卒</td>
</tr>
<tr>
<td>52.1</td>
</tr>
<tr>
<td>35.7</td>
</tr>
<tr>
<td>12.2</td>
</tr>
<tr>
<td>40.0</td>
</tr>
<tr>
<td>40.7</td>
</tr>
<tr>
<td>19.3</td>
</tr>
<tr>
<td>高卒</td>
</tr>
<tr>
<td>55.7</td>
</tr>
<tr>
<td>32.0</td>
</tr>
<tr>
<td>12.3</td>
</tr>
<tr>
<td>43.2</td>
</tr>
<tr>
<td>38.2</td>
</tr>
<tr>
<td>18.6</td>
</tr>
<tr>
<td>大卒以上</td>
</tr>
<tr>
<td>60.1</td>
</tr>
<tr>
<td>29.8</td>
</tr>
<tr>
<td>10.1</td>
</tr>
<tr>
<td>53.5</td>
</tr>
<tr>
<td>32.7</td>
</tr>
<tr>
<td>13.8</td>
</tr>
</tbody>
</table>

지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장래
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장과 균형증진에 다 같
이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정
부의 역할을 익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나 그
러한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여건조성
이나 인센티브제공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서
기한이 제한된 경직성을 전파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조법, 민간조직을 통하
여 자발적으로 빈민들의 소득증진사업을 전
개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인 분
위기를 살려, 그들로 하여금 상호연대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의 조합을 장려하고, 편의조합
상호간의 역할과도 수적적 혹은 수평적 연계조직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분리
되어 있는 독립의 인센티브를 제계화하고
서 제조소의 자주성은 더욱 갖추어 진단과
pieczeńst 있는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나. 빈곤대책의 주요내용과 우선순위

새로운 시각에 입각하여 입안되는 새로운
적 대책은 중점의 소극적 대책의 내용
을 적극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접근방법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할 수 있다. 한편
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간안하면서, 우리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빈곤대책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중기대책의 경제사
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주도로의 양
자발적, 힐링과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의 경제사업에 동등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정책을 할 수 있는 중간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기준에 입각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접근방법
은 경제성장을 빈곤대책에 대해 보완의 관계
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가장 효과적인 빈곤
대책은 직업전환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이다.

나. 몇 가지 주요내용과 우선순위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이 스스로의 노동에
있어 경제상의 투자나 기회가 부여될 경우 그들의 소득증가를 통한 경
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에 관련하여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
민들의 주요특성, 이를테면, 자주적이기
반면의 사회적, 양상적으로 양면한 경계상의
여성은, 그 분란의 기능조합, 그리고
여성과 업계가 많은 점을 고려하는
동에, 그 분란의 특성에 대한 요구도 근로할
</textarea>
〈표 2〉 빈곤대책의 우선 순위

1. 就業機會擴大 및 生産協同組合運動의 장려
   - 地域社會에 기초한 生産(및 消費)協同組合運動의 확대 전개: 地域社會, 民間, 政府의 共助體制 구축
   - 세마을金庫, 信用組合, 生業資金融資制度를 통한 저소득층 雇用제도의 개선
   - 非公式部門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勞動政策 추진
2. 教育 및 技術訓練프로그램의 강화 및 社會保障制度의 확충
   - 등록제 실시로 就業훈련 및 일선제도 內実化
   - 低所得階 子女에 대한 장학금 확대지급
   - 基本需要充足을 위한 社會福祉 擴大供給
   - 健全능력이 없는 불임에 대해 補充給與方式에 의한 最低生活保障

* 바람직한 社會經濟 與件의 造成
  - 지속적 經済成長 및 物価安定
  - 公平한 經済活動機會 保障
  - 社會福祉 傳達體系 改善
  - 地自制 發展 및 地域社會 均衡開發

〈표 3〉 貧困家口의 主要特徵

<table>
<thead>
<tr>
<th></th>
<th>1982</th>
<th>1990</th>
</tr>
</thead>
<tbody>
<tr>
<td>1. 家口員數 (명)</td>
<td></td>
<td></td>
</tr>
<tr>
<td>低所得家口</td>
<td>4.0</td>
<td>3.5</td>
</tr>
<tr>
<td>全都市家口</td>
<td>4.5</td>
<td>4.0</td>
</tr>
<tr>
<td>2. 女性家口主의 比率</td>
<td></td>
<td></td>
</tr>
<tr>
<td>低所得家口</td>
<td>31.1</td>
<td>25.3</td>
</tr>
<tr>
<td>一般家口</td>
<td>15.7</td>
<td>n.a.</td>
</tr>
<tr>
<td>3. 老人家口主의 比率 (60세이상)</td>
<td></td>
<td></td>
</tr>
<tr>
<td>低所得家口</td>
<td>n.a.</td>
<td>25.5</td>
</tr>
<tr>
<td>都市</td>
<td>n.a.</td>
<td>32.8</td>
</tr>
<tr>
<td>農村</td>
<td>n.a.</td>
<td>10.2</td>
</tr>
<tr>
<td>全體家口</td>
<td>n.a.</td>
<td>18.0</td>
</tr>
<tr>
<td>4. 國卒以下 家口主의 比率</td>
<td></td>
<td></td>
</tr>
<tr>
<td>低所得家口</td>
<td>n.a.</td>
<td>73.8</td>
</tr>
<tr>
<td>全體家口</td>
<td>n.a.</td>
<td>27.4</td>
</tr>
<tr>
<td>5. 障碍者 比率</td>
<td></td>
<td></td>
</tr>
<tr>
<td>低所得家口</td>
<td>n.a.</td>
<td>3.4</td>
</tr>
<tr>
<td>全體家口</td>
<td>n.a.</td>
<td>2.2</td>
</tr>
</tbody>
</table>

註: 1) n.a.는 數值가 없음을 의미。
로 높은 나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업
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으로 노동일수를 높이
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제
도의 도입을 계기로 독일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적인 주인 · 주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
를 전산화로 연결하여 항구적으로 가동시
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일본의 희망함이나 동반 등과의 협동
운동에서도 보는 것처럼, 노인, 노동자, 여성
등의 동반자 등도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
을 찾아갈 수 있거나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
은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8)
장기적으로 보면, 재난의 적응을 단절시
킨다는 의미에서 빈곤가구, 고등교육에 대한 교
육부조의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다. (表 4)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요
구를 반영,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
금 공여가 확충될 필요가 있었고 자연계를
중심으로 대학전용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야
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기
본시설의 정비 · 확충과 더불어 생산성 증대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되고 있
는 보건의료, 주택, 교육, 훈련 등 기본 세
화 서비스를 확대공급하는 종합적 대책으로
발동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사회
서비스와 사람의 자원개발이 본좌에 기치
는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개방이 꾸
 PHPUnit에 다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부족의 주도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예산제약이 있는만큼 공의
소재의 대상자를 업선, 규모를 축소하여 그
들에게 적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
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곤들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의무적인 전달을 기해
나가야하면 민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인바, 복지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
인 운영 관리는 비교적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빈곤들은 지역사회에 주민의
전람이 있는 지역에 몰집도, 사회적에
의한 복지시설 주권도, 대학, 주택 등으
로 구성한 민간자원봉사요원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랑의 쌀 운동, 봉사시설의 확대
발전 등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는 협력적
하려는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며,
이를 제계적으로 단합하는 장치가 제도화
될 때 빈곤층의 사회의 지원수준은 확장적

8) Neuhaus(1979) 참조.
9) 權純源(2079) 참조.
<table>
<thead>
<tr>
<th></th>
<th>농  村</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奖學金 擴大</td>
<td>15.4</td>
<td>13.9</td>
<td>13.0</td>
<td>14.6</td>
<td></td>
<td></td>
</tr>
<tr>
<td>學資金 融資擴大</td>
<td>18.8</td>
<td>23.7</td>
<td>25.2</td>
<td>21.2</td>
<td></td>
<td></td>
</tr>
<tr>
<td>義務教育擴大</td>
<td>40.1</td>
<td>42.7</td>
<td>37.8</td>
<td>40.4</td>
<td></td>
<td></td>
</tr>
<tr>
<td>夜間學校 及 技術訓練</td>
<td>16.8</td>
<td>14.4</td>
<td>14.8</td>
<td>15.8</td>
<td></td>
<td></td>
</tr>
<tr>
<td>託児所 及 幼兒園</td>
<td>6.6</td>
<td>4.3</td>
<td>7.4</td>
<td>6.6</td>
<td></td>
<td></td>
</tr>
<tr>
<td>其 他</td>
<td>2.2</td>
<td>1.0</td>
<td>1.9</td>
<td>1.8</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中央政府次元에서는 總理나 經濟企劃院長官이 주요계 지도자들과 定例의회 회동을 가
지하면서 필요하다한 社會福祉分野 活動과 종교기
관을 제계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수시로 未
備點을 補完해 나간다면 活動에 共助體制
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特히 社會
福祉活動의 전개는 地域社會單位에서 구체
화될 것이므로 地域的의 協力은 더 큰 動機
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社會에 점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相對的 貧困感은 貧民들을 심리적으로 자극
하여 社會不安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近年の景気不振은 貧民에도 社會
懸吊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이다. 文民政府가 들어서면서 不正腐敗 防
止, 地下經濟 剷抜 등을 통한 正義 society의
實現을 약속하였기에 貧民들의 기대감은 近
육 고조되고 있다. 가난은 많은 돈을 힘차
변에 투입하고 정부가 力なく 경주한다고
해서 一掃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貧民들을
 포함해서 社會의 協力가 이루어질 때 효
과적으로 退治될 수 있는 것이다.

2. 脫貧困運動을 위한 韓國의
   模型定立의 必要性

가. 協同組合運動의 意義와 重要性

〈表 2〉에서 우리는 地域社會에 基礎한 協
同組合運動의 建立보급에 政策의 우선순위
를 듣기로 있었는데, 본교의 要義는 바로 협
同組合掛案에 의한 民間組織 人　的 自發的
貧民減少 力を 위한 韓國의 模型을 논의
하며 그 정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協同組
合의 唤起을 함으로써 地域的의 協同은 共同
出資하
고 力なく 경주하여 生産이나 消費 등과 관련
하여 설정된 地域的의 목표를 달성해야는 민
간조직의 人。  그런대 政府의 조작은 전
國적인 것으로서 지대하고 방대하며, 따라
서 안정적이나 관료주의적 性으로 인하여
신축성이 이른 낙관의 感性이 결여되어 있는

78
특징이 있다. 반면 민간 기관은 규모로 작으나, 평민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필요한 전문성을 결여되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모자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익 ancest요리의 기본조건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으로 서로 협조하는 제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정부의 공제체제는 전통적으로 개인이나 강대사회의 형태를 떠 넘어서 공산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되는 것이다.

종래에 유사한 운동이 있었다면 새마을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위로부터의 상향(top down)이던 반면, 협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상향(bottom up) 또는 scaling up)을 겪어내고 있어, 민주의 이념을 확립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같은 지역내에서 상호연대한 할 수 없었고, 유가증 혹은 관련기업과의 연계를 맺으며, 서로를 교환과 수길을 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결코 우연히, 이들이 자신의 일에 스스로 투자하는 만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억제하게 된다. 이들은 비록 조합원들의 정부의 번영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만, 지역의 발전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협동조합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사회에 안정만
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의 지원만으로는 생산양평조합을 위한 장소나 시설확보, 자금투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청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한국적 협동조합운동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이 되는데, 농민指導를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는 경제적 협동努力을 정부와 민간이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경제적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 이는 농림수산과 가경소득증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듈라곤 사업이나 우리나라의 기존 협동조합사업 추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낙민의 역할이 가히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수단이었음에 비추어 既存의 새마을

사업비와 생산당금 증가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협동조합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나 추경협동조합과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새마을

금고로 하여금 개인보다는 신용상태가 좋고 담보능력이 개선된 협동조합에 과감히 대출을 늘려주면서 이들의 자립·자공努力를 크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경

협동조합운동은 이를테면 지역사회 농림수산과 가경소득증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주요 사례와 

韓国の 모형개발

농민地域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생산·消費協同조합 또는 生活協同조합 운동은 결국

東西間 농진증식에 따른 이남투쟁의 소멸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변화로 각국의 경제전

쟁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과 국내의 민주화, 自由화 진전과 함께 市場 Economy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社會主義의 組織形態인 協同조합

을 결합하여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농민指導者들의 志意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운동 을 관찰하고 國내協同조합 운동의 問題點을 모색하여 한국적 협동조합모형을 더욱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都市地域에서의 生產共同體를 위해서뿐만 아니

10) 現行 규정상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다른

NGO를 대상으로 융자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

정하거나 이들 단체에 대한 인민지도자나 종교지도자에게 융자금액을 증액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발전은 결국 새마을

금고의 前途가 짧으며, 兩者간의 相乘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우리나라의 協同조合運動

은 그 역사가 짧고 규모가 영세하며 아직은

開発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그

리나 농민地域에서 지도자들 중심으로 自發的

인 의지로 생성된 協同조合들은 많아 金融이

나 기타 필요한 社會의 지원을 얻게 될 경우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協同組合運動의 鼓吹 및 韓国の 模型定立 方向

地域社會에 기반을 둔 民間・政府 共助體系의 構築

協同組合 遠代조직

生產協同組合
消費協同組合

NGO 등 민간단체,
기업의 후원 및
자원봉사, 기술지원

貧民指導者의 리더십,
貧民들의 적극 參與

政府는 필요한
정보제공 및
金融* 稅制上
支援

* 基존 새마을事業費 및 生業資金 融資制度를 再整備하여 주로 新마을金庫와 信用組合을 客용하여
貧民들을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공.

先決 및 實行課題

・ 몬드리앙 등 國內外 成功事例 分析
・ 國內 基존 NGO 活動의 評價 및 展望
・ 協同組合活動을 강화하는 原法 制定

라 农村의 경우에도 스위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生產과 流通을 포괄해서 관
장하는 協同組合을 설립해 나갈에 있어서
은 売買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合同조합活動
으로 평가되고 있는 몬드리앙사업은 유리한
地域의・文化的 요인도 있었지만, 創設者였
던 「호세마리아 아리즈텐디」神父의 ‘조합
원의 協同努力을 통한 自治 金融機構設立과
기술학교를 통한 人力의 安定及 積極의 中
요성을 강조한 점’ 등 未來指向的인 비전과
地域性이 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956년 이 운동은 불과 10수명의
조합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거대한 中
小企業界 undermine, 发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生産, 金融, 社會保障, 教育, 技術, 住宅 등
各 分야별로 결성된 協同組合群이 포함된
다. 몬드리앙의 成功을 가져온 세가지 軸은
表 6 몬드리곤 사업의 성공사례 분석

背景
1. 良好한 지역환경 ① 산업화가 비교적 진전된 지역
   ② 協同精神이 부칠한 文化的 특성
2. 地方自治区의 리더십
3. 地域社會의 적극적 호응

主要手段 *
1. 信用組合 : 몬드리곤 사업의 銀行役割을 담당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2. 기술학교를 통하여 기능공을 장기적으로 공급
3. 協同組合體系構築 및 상호연대: 生産, 銀行, 社會保障, 技術, 教育, 住宅 協同組合間 연대체계 구축
   * 新規企業投資에 대해서는 履務創出 정도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었음.

成功的主要要因
1. 教育制度: 2년制 技術學校에서 출발하여 大學課程까지 擴大
2. 地域社會內에서 教育 및 文化的 연대: 學父母, 教師, 學生, 地域社會支持者 등 地域社會와 연대
3. 信用組合의 완활한 자금공급: 사업이익에 대한 個人配當金을 口座에 납여 주되 動用하지 못하도록 상호계약의 관계로 자금흐름이 완활하였음.
4. 信用組合體系 構築
5. 協同組合의 真実 고수

評價
1. 簡易조합 본래의 民主의分위기 조성과 근로정신으로 效率과 民主화를 동시에 달성
2. 市場經濟體制內에서 社會主義組織이 성공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하였고 半田
   伊馬 危機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

表 6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 技術學校를 통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 둘째 지역사회
支援基金의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강력한 연대유지, 셋째 신용조합을 통한 순조로운 자금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도 경영, 기술개발, 마케팅 등 支援部門의
체계적 협조, 利益金을 個人別로 배당하지
않고 口座에 예치해 두는 방법을 통한 신용
조합의 자금공급능력 확대, 이윤추구보다는
건전한 生産共同體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사
회의 참여도를 높인 점 등이 사업의 성공적
인 추진을 도와 준 요인들로 열거될 수 있
겠다.
요컨대 社會主義의 요소를 市場經濟體制
에 효과적으로 접근시켜 협동조합체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효율성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몬드라곤사업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끌게 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경제적성에도 혼들림 없이 탄력 있게 대처함으로써 단단한 생산기반을 외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함께 급속도로 확대 전개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운동의 제도적이고 풍부한 운동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인 통제의 부재를 지적하는 이론이나 행정경제적매각학의 미흡한 실정이나 문헌의 부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로 종교기관이나 민간자본 도자 혹은 지역사회 단체 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추진된 협동조합은 아직 그 역할이 일찍하여 그 성공시의 판가름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된다. 서울의 협동조합은 주로 화장품생산(알로에 화장품), 건설활동(임대, 건설공사, 나중건설, 마포건축), 봉사활동(실내바나) 등과 대신지역에서의 연계체제로 대표되는 협동조합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뿐만 아니라 임시단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조합운동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공동적인 문제로는 시설과 장소의 미흡, 사업에 따른 전문기술의 부족, 자금부족, 조합주인이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부족 등이 열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수직적, 수평적, 연대성을 통하여 서로간 이해를 돕고 정보를 교환하는 노력과 더불어, 상호구매 등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 사회협동조합과 연대해 나감으로써 이들은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협동조합은 자금의 관리와 같은 단가로 건설안전 및 건물면적을 늘려 나가면서 협동조합에게도 집계형으로 입대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들 협동조합의 제조, 분양이 제작과 회계를 설치하여 경영능력의 배양, 회계처리, 생산기술의 향상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양으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와 더불어,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적 모형을 다듬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조구조 연구에 있어서, 협동조합운동을 포함하여, 국내외 NGO 활동을 통한 경제의, 공동체 노력을 대한 심층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한국의 모형정립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2) 권순용, 〈민족의 (新)〉의『附錄에서 이들 사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V. 結 語

東西冷戦の終結と競争 積極地 2000年 2000年代という国際的 視角を搭載して 一边倒の経由を突破する 国際機関などの中核的 業務促進を 実効的・迅速に打開して 統合に 前進した。 一般財団法人経済産業 院の 議論等を通じて 経済社会状況の 成長・安定を 促進に 着眼している。
民들의 계층상향운동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은 이제 개념과 체제의 절착에서 벗어나 빈민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개발을 거남하면서 생활향상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NGO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쾌적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운동처럼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접근방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사회의 지원을 위한 공적체제의 확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자주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선언한 자극을 주는협동조합운동은 빈민지도자에 의한 부단한 가르침과 습관적 갈등을 거듭하면서 우리 실제에 적합한 모형이 개발될 것임바, 정부는 생활정보자문제도와 새 마을로 등을 통해 빈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용자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그들은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유행적인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자선의식을 다져나가는 공적체제의 확립을 대상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나라가서 민주화를 생활화하여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高日東, 「公的扶助の改善と貧困層対策」, 『国家政策研究』, 1990.
權純源, 「都市低所得層 密集地域（달동네）の生長改善を 위한 政策提案」, 1991. 3.
權純源, 「社會福祉傳達體系的確立 및 民間 參與 擴大政策」, 1991. 7.
權純源, 「中長期 社會保障制度의 發展體系와 低所得層 生活向上對策」, 1991. 8.
朴純一, 「低所得層의 社會福祉 需要分析 -貧困の原因・ 養育需要 및 医療需要-」, 1991. 2.


Colombo Plan, Major Issue: Poverty Alleviation and Basic Needs, 33rd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Bangkok, Thailand, 1990.


———, The Implications of Fund-Supported Adjustment Programs for Pou-


北韓의 投資環境과 對北投資戰略

全 洪 澤

I. 序 言

1970년대 중반 이후 崙造的 沈淵을 보이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구소련의 봉쇄에 따른 對外經濟運作의 濁慣한 악화로 인해 危機狀況을 맞게 되었다. 特히 1991년에는 對外交易의 50% 이상을 차지해 오던 對蘇交易이 전년대비 68%나 대폭 감소하였고, 92년 1월에는 중국까지 硬貨 결제라 國際市場価格 適用을 요구함으로써 北한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近年 北한의 對外開放推進은 이와 같은 経済難打開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對外開放을 통한 산전 자본·기술도입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북한의 經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北南在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1991년 7월 「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동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를 공표하면서 부터 뒤늦게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1992년 4월 헌법 개정시 외国人投資의 憲法的 根據要項을 신설하고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1993년 1월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4월에는 「저하자원법」을 제정하는 등 대폭적인 法의 投資環境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자의 입국절차, 토지이용, 운행, 회계, 세무, 노동관리, 공업 소유권 등 관련 법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 지대에 대규모투자를 유치하여 동 지역을 東北亞地域에서의 국제화물의 중개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적 관광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일본, 권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방 각국에서 投資誘致을 위한 講明會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對內經濟의 改革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開放戦略도 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나진·선봉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主體經濟와 自力更生의 原則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입에 틀림없다.


북한의 南北經濟協力 要請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상호화 및 日本과의 経済을 위한 전략의 성격이 없고, 남한정부를 흥행한 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對南統一 戦略의 연장선상에 머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南北經済을 통하여 相互 不信을 해소하고 信賴基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 實益을 얻을

1) 1984년 제정된 「합영법」에서는 「제일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영법에 근거하여 투자를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남한기업의 투자를 사실상 배제하였으나, 1992년 10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공화국외자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투자를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속적인 법제적에 따라 남한기업들도 투자를 수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참조.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제협은 남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원수 및 핵문제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을 감안할 때 핵문제를 장기화시키는

이러한 것이다. 따라서 원수 및 핵문제가 해결될 것

에 대비하여 적절한 남북협력 정책과 투자전략

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투자전략을 세운다는가 정부가 남북

협력 정책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나라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개발의

대면과 경제의 개방에서 분석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남북협력 정책과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그림의 구성은 제2장에서 남북투자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한 후, 제3장에서 최근에 전면개편

된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선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남북투자의 "의미와

구조와 격변을

한

적한

남북협력 정책과 투자전략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II. 对北投資의意義

對北投資에 대한 視角은 經濟기술에 조성

한다는 側面의 領業과 기업의 이주추구라는

視角의 側面의 두가지를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經濟의 合意에 기초한 한국정부의 3段

階統一方案은 經濟공존과 민족복치의 원칙

하에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의 중간단계로

서로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는 南北聯合

을 이룩하여 민족同質性을 갖춘 輝명함으로

써 공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3段階統一方案의 요체는 일방체제로의

통일이나 타협에 의한 제3의 체제로의 통일

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偉大民族大聯盟을 구성하여

평화공존체제를 장려시킨 가운데 점진적으

로 민족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봤을 때 통일 그 자체 못지

않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同質

성을 회복해 가는 統一의 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물자교류, 합작투자와 같은 경제교류

협력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서로 상이한 경제권이 하나의 경

제권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교역→합작투자

→자유무역지대→공동시장→완전통합의 순

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經濟統合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둘 경제
간에 소득수준, 경제발전단계, 경제제도 등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너무 크므로 두 경제를 어느 정도 동질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북한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계 획경계라는 유래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경제통합은 일반적인 경제통합 과정에 더하여 경제체제의 동질화 과정이 필요하다. 독일, 북한의 경제에서 보면 경제의 수준이 다를 경우 경제를 일기에 통합시킨다면 업그레이드 경제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완전통합이 전통 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동질화시킨 가운데 경제력 격차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의 시각에서 볼 때 대북投資는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기로써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북투자는 단기적 경제적의 이익의 차원에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체인 민간개개의 입장에서는 경제통합과 같은 기관의 측면이 아니라 자본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고임금,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섬유,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임금이 저렴한 북한에 이전한다든가 또는 북한에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결합하는 합작투자는 우리가 당연하고 있는 경제구조와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북投資에 대한 국민경제적 시각과 기업의 시각이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상호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 우에 따라서 특히 경제·경제적 위험이 높은 초기단계의 대북투자의 경우 기업의 시각에서 대북투자의 이익(private benefit)과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사회의 이익(social benefit)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적 판단에서 바람직한 규모의 대북투자가 이루 어지도록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북투자사업의 주체가 우리의 경우 개별기업이지만 북한은 결국 정책당국이기 때문에 북한경제체제에 변화가 있는 한 현상주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간의 경쟁을 유발시킨다든지 또는 우리 정부와 기업간의 의견차이를 북한당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대북투자의 사회의 자원이 소유(community cost)과 자산의 소유(community cost)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북投資에 정부의 조정
과 수수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투자의 전환을 사용하여, 둘째, 북한의 경제의 개방을 소개하고, 둘째, 노무현의 시계를 개방함으로써 상호 보이는 모범적인 사례, 즉, 북한의 정책을 적절히 실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대북투자의 便익, 便費와 사회의 便益, 便費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III.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1. 外國人投資法體系와 投資企業의 形態


북한의 外國人投資法體系는,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一般法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투자법을 上位法으로 하고, 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投資3法을 下位법으로 하는 중심법률과, 特別法 성격을 가진 自由經濟무역지대법, 그리고 附随法 성격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법, 외화관리법,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토지이용·회계·노동관리·공업소 유권 등에 관한 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력투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持分參與形式과, 即持分參與形式을 모두 포함하지만, 여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태를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北韓, 중국, 베트남은 「表 1」과 같이 세가지의 유사한 조직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2)

먼저 북한의 합영기업(Equity Joint Venture)은 우리가 혼히 합작투자라고 부르는 지분창여형 합작투자기업으로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에 해당한다. 합영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며, 利潤은 損失의 分配는 出資比率에 따른다. 한국의 합작회사로서, 북한의 法人으로 등록된다.

협력企業은 일종의 生産分與(production sharing) 또는 技術供與契約에 의한 투자기업으로서, 합작계약의 조건, 출자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조직형태를 취

2) 이 세가지 이외에 중국은 합작개발(Joint Exploration), 베트남은 건설경영이전계약(BOT, Build-Operation-Transfer) 등의 형태를 별개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원개발 또는 인프라건설을 위한 것으로 크게 보아 합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 외국인投資企業의 조직形態

<table>
<thead>
<tr>
<th>복 한</th>
<th>중국</th>
<th>베트남</th>
</tr>
</thead>
</table>
| 합 영 기 업  
(Equity Joint Venture) | 中外合资經営企業 | 合資企業 |
| 합 작 기 업  
(Contractual Joint Venture) | 中外合作經営企業 | 經營合作企業 |
| 외 국 인 기 업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 外國人獨資企業 | 外國人獨資企業 |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出資持分의 개
념이 없고 이윤분배, 투자회수 및 재산
재산귀속 등은 契約에 의해 정한다. 합작기
업은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작계약 만
료후 자산소유권을 중국측에 이양하는 조항
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外資側에서
보면 設備 및 技術의 長期輸出信用과 유사
하다. 북한의 합작법에는 계약만료후의 자
산 소유권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중국
의 경우와 같이 期間滿了後 資產所有權이
北韓側에 移伝될 것으로 이양되며, 따라서
계약시 투자원본의 우선적 회수조항 포함
등 이에 대한 部分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의 합작기업은 투자는 公同으로 하되 生産
· 經営은 北韓側이 담당하도록 하여 외資
의 경영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94
<table>
<thead>
<tr>
<th></th>
<th>합영 기업</th>
<th>합작 기업</th>
<th>외국인 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설립지역</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td>
</tr>
<tr>
<td>운영지배</td>
<td>이사회, 공동경영</td>
<td>북한촉이 경영, 다양한 비상설 공동협의</td>
<td>규제 없음</td>
</tr>
<tr>
<td>자본비율</td>
<td>당사자간 합의 결정</td>
<td>출자지분의 개념 없음</td>
<td>외국인 100%</td>
</tr>
<tr>
<td>허가기간</td>
<td>1개월 이내 (‘지내는’ 50일 이내)</td>
<td>50일내</td>
<td>80일내</td>
</tr>
<tr>
<td>물품구입 및 제조업</td>
<td>국내거래는 합영자체상사, 무역기관, 여러 합영·합작 회사를 허용할 수 있음</td>
<td>규제 없음</td>
<td>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합</td>
</tr>
<tr>
<td>직원 및 해雇</td>
<td>노동기관을 허용할 수 있음</td>
<td>규제 없음</td>
<td>노동기관과의 계약에 따라</td>
</tr>
<tr>
<td>직무정원 (개소)</td>
<td>직무의 활동 보장</td>
<td>규제 없음</td>
<td>동일</td>
</tr>
<tr>
<td>보험</td>
<td>북한보험을 원칙으로 함</td>
<td>규제 없음</td>
<td>북한보험기관으로 계한</td>
</tr>
<tr>
<td>세금</td>
<td>25%(자유경제무역지대 14%). 이용발생 후 3년 현정, 연장 가능</td>
<td>범죄 점단에 따라 (합영기업과 같은 것으로 추출) 14%. 이용발생 후 3년 현정 2년 연장가능(50% 감면)</td>
<td></td>
</tr>
<tr>
<td>관세</td>
<td>수입관세 면제</td>
<td>규제 없음</td>
<td>수출입관세 면제</td>
</tr>
<tr>
<td>기타세금</td>
<td>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번호세, 자동차이용세</td>
<td>동일</td>
<td>동일</td>
</tr>
<tr>
<td>재화</td>
<td>허용 안됨</td>
<td>규제 없음</td>
<td>허용 안됨</td>
</tr>
<tr>
<td>소속</td>
<td>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로 재정치 감독 가능</td>
<td>동일</td>
<td>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td>
</tr>
<tr>
<td>회계, 세무</td>
<td>재정검열원의 검열</td>
<td>재정검열관</td>
<td>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td>
</tr>
</tbody>
</table>

보다 제약이 크다.

외국인 기업은 외국투자자가 100% 전액

3) 중국의 경우 1986년 4월 '외자법과'에 제정되거 전까지 외국인 기업의 설립은 대체로 랴오닝과 평양의 경제특구지역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의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31
2. 外國人投資法制의
 主要改善内容과 現狀

가. 投資貢次

〈合營企業〉

기존 합영법에서는 합영신청에 대한 承認 또는 쟁결의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개정 합영법시행
세칙에서는 事前合意段階 (합의요청 접수후 20일 이내) 및 承認段階 (합영회사조직 신청 후 1개월 이내)의 결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합영
신청시 3개월의 결정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결정기간이 짧다. 그러나 자유경
제무역지대에서는 투자승인신청후 50일 안
에 承認 또는 쟁결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
다. 한편 출자분양은 합영사업승인후 60일
이내에 자기출자금의 5% 이상을, 그리고
합영사업승인후 12개월 이내에는 40~70%
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있어 6개월 이내
일괄불입 또는 3개월 이내 분할불입을 규정
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伸縮性을 보이고
있으나, 30일 이내에 15% 이상을 불입하고
3년 이내에 전액을 출자하게 되어 있는 베
트남에 비해서는 엄격하다.  

북한측의 출자는 주로 토지, 건물 등 현
물출자로 예상되는데, 그 評価에 대한 客觀
의 基準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외국측의 知的財産權 (발명권, 
기술문헌 등) 투자에 대한 평가기준도 국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하는 데 따르도록 되어 있어 紛爭의 소
지가 있는바, 제3자에게 평가를 위임할 것
을 계약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合作企業〉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한 후 외국투자자와 합작계
약을 체결하고 대외경제기관의 합작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협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규정은 없으나 합작承認에 대해서는
申請書 접수후 50일내에 承認규정을 결정하
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받은 후 30일내에
所在地의 道行政經濟委員會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外國人企業〉

협영기업이나 합작기업과 달리 외국인기
업에 대하여는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에 따라 지방정부 또는 대외경
제무역위원회의 事前協議를 거치고 있는 중
## [그림 2] 합영기업 설립절차

<table>
<thead>
<tr>
<th>질 치</th>
<th>소요기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사전협의</td>
<td>해당 정부기관</td>
<td>〈20일 이내〉 협의사항에 따라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 합영공업총국 등</td>
</tr>
<tr>
<td>② 협 의</td>
<td>외국측 부자가</td>
<td></td>
</tr>
<tr>
<td>③ 계 약</td>
<td></td>
<td></td>
</tr>
<tr>
<td>④ 승인신청</td>
<td>합영공업총국</td>
<td>〈1개월 이내〉 계약서와 경제대신자 취부</td>
</tr>
<tr>
<td>⑤ 승 인</td>
<td>도방정경제위원회</td>
<td>〈15일 이내〉 비준동의문 처부</td>
</tr>
<tr>
<td>⑥ 회사등록신청</td>
<td></td>
<td></td>
</tr>
<tr>
<td>⑦ 등록서 발급</td>
<td></td>
<td></td>
</tr>
<tr>
<td>⑧ 계약이행담당보출자</td>
<td>양측 부자가</td>
<td>〈합영승인후 60일내〉 자기자본의 5% 이상</td>
</tr>
<tr>
<td>⑨ 영업허가발급</td>
<td>소재지 정부가</td>
<td>〈합영승인후 12개월〉 출자자자의 40~70%</td>
</tr>
<tr>
<td>⑩ 영업허가신청</td>
<td></td>
<td></td>
</tr>
<tr>
<td>⑪ 영업허가증 발급</td>
<td>합영공업총국</td>
<td>〈15일 이내〉</td>
</tr>
</tbody>
</table>

상기의 결과를 감안할 때 북한의 경우에도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신청 후 승인 기간은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보다 긴 80일 이며, 외국인기업은 승인받은 후 30일내에 소재지의 경제관련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20일 이내에 기업소재지 재정 기관에 정부등록을 하여야 한다.

미래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개정 합영법의 시행세칙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반면, 합작기업이나 외국인기업은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알 수 없으나 중국의 경영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합영기업에 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하에서는 주로 합영기업 중심으로 경영활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합영기업과 차이가 있는 부분만 검토하기로 한다.

나. **経営活動**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개정 합영법의 시행세칙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반면, 합작기업이나 외국인기업은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알 수 없으나 중국의 경영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합영기업에 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하에서는 주로 합영기업 중심으로 경영활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합영기업과 차이가 있는 부분만 검토하기로 한다.

중정의 합영법 및 동시행세칙은 이사수, 이사결합, 이사회 참가위원 등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방법도 의결 정족수가 불분명하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 (표 3) 北韓, 中國, 貝特南의 合營制度 比較 |
|---|---|---|
| | 北 한 | 中 国 | 貝 特 南 |
| 출자지분 | 당사자 합의 | 외자최저비율 25% | 외자최저비율 30% |
| 합영기간 | 10년, 특정부분 10년 이상 | 10~30년, 특정부분 30년 이상 | 50년, 특정부분 70년까지 |
| 승인처리기간 | 1개월 | 3개월 | 3개월 |
| 출자불입 | 승인후 15일 이내 5% 12개월 이내 총출자액의 40~70% | 일괄불입: 6개월 분할불입: 3개월 (1회불입금 동목자본의 15%이상) | 설립시 일시에 완납출자 또는 당사자합의에 의해 상당기간 후 출자 |
| 토 지 | 최고 50년 임대 (양도·상속 가능) | 임대기간 최고 40~70년 (양도 가능) | 임대기간 최고 50~70년 |
| 불가구매 | 국내구입 우선, 국내구입 시 국제가격기준, 외화지급, 국가계획반영 필요 | 국내구입 우선, 국내구입 시 국영기업과 동일가격, 외화 또는 국내화폐 지급 | 국내구입 우선 |
| 판 매 | 수출원칙, 국내관세 승인 필요 | 수출장려, 수입대체기업 등 국내관세 가능 | 수출원칙, 국내관세 승인 필요 |
| 노무관리 |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만 고용·해고 가능, 사회보험 회사부담 | 노동계약이 기본, 직접고용 가능, 사회보장·보험 회사부담 | 고용법제하사, 직접고용 가능, 사회보장·보험 회사부담 |
| 결 산 | 예비기금으로 순소득의 5% 적립(동목자금 25%, 누적까지), 기타기금으로 순소득의 3% 이상 | 상호합의로 기금적립, 대체로 납세후 이준의 10% 수준 | 준비기금으로 납세후 이득 5% 적립(법정자본금 25% 누적까지), 기타기금은 상호합의 |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에서는 만장일치사항과 2/3 찬성사안으로 투표방법을 고려하였다고 권가한 대리참석 인정, 3명 이상의 이사수 규정 등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의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전의慣行을明文化한 것이다.

〈物資購入과 貨費〉

합영회사의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物資는 북한내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북한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輸入할 수 있다. 북한내 구매시 합영자 재상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북한내貿易機關, 여타 合營・合作會社 및 그 밖에
북한에서 승인된 자재을 공급할 수 있다. 항영자재상 사를 통한 구입은 그 취급의 전년도 3/4 분기까지 항영자재상사에 제출하여 국가계획(항영수출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항영회사가 복원내에서 사는 조정체와 그에 따르는 이용은 외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로도 없는 경우 국가의 승인을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항영기업의 복원내 물자구입시 외교로 지급하게 한 것은 외환수입을 가능한 한 북한측에 이전시키려는 의도로서 국내외 개발을 인정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보다 엄격한, 이는 북한의 외환사정 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물자구입시 국제시장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도 더욱 많은 외화를 북한기업에 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규정은 비교적 저렴한 국내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북한물자 구입인센티브를 심각시키고 있다.7)

항영회사의 생산제품 판매에 대하여 개정 세칙에서도 중점과 마찬가지로 투자이 기본(제5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수판매 도 가능(제55조)하다는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다. 또한 눈에 띄는 새로운 규정은 사

7) 중국은 항영기업의 국내물자조달시 국영기업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지 않으며, 석탄, 석유 등 6개 물자의 경우에만 국제가격을 적용한다(중외항영기업법 시행조례 제65조).
조항(시행세칙 제73조)이 신설되어 봉사관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협약약관에 포함되었던 사항들을 명문화시킨 것이며, 중국, 베트남의 경우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문문 쟁점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관행으로서, '양양회' 같은 일종의 협장 상대로 고위인사의 인사정착, 범죄체도 불규칙, 사실상 불가능한 해고, 합영파트너가 운영하는 국내 타공장 열동노동인력의 합영공장으로의 전환배치 등의 악로사항이 예측된다. 따라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선별검사, 동일성심사(동일성심사)가 수행되어 그 중 일부를 채용단에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의 제고 및 인센티브상회를 고려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득금의 직접지급 및 임금체계 및 지급방법에 대한 연구 및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에는 우리 개념의 봉사조직이나 없는 대신 노동당 외국단체인 족단(조선직업총동맹)이 있는데, 합영기업과 외국기업은 직원 등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합영법시행세칙 제73조, 외국인기업법 제21조). 한편 합영계약조수약칙에서는 노동자들과 관련한 중요문제의 토의에 족단 및 이사회의 기타 회의에 참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 및 결산>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의 하나는 손익과 직접되는 회계제도이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회계제도는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에 이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영법과 통일행정시책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개정세칙에서도 재무상의 종류 및 작성기준, 원가계산, 재고자산평가, 감가상각 등의 방법, 필요경비의 기준과 인정범위, 피법인채권의 인정과 예의를 위한 회계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리제도로서 1985년에 '중외합작경영기업 회계제도 및 제무표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會計原則과 기준을 정비하여 왔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총지출의 5% 이내 경비지출 인정, 소실의 이득정부 등 북한에 비해 명확한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재정부계산규범'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국의 회계제도를 참고 삼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것은 회계규범이 발표되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결산시 관내 및 허위금 등 4개의 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자금은 당해연도 순자산의 5%를 매년 적립하며(등록자금의 25% 적립시까지), 기타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범위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종전과 같으나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은 기타기금의 적립규모를 당해연도 순자산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금의 관리, 자체의 요구의 정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납세 후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비추어 그 기준을 납세 후 이익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송쟁주와

각국의 정책성 보장

〈소송쟁주례시〉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화운영과정에서 의전침이 생길 때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실패시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및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분쟁해결의 심의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정한 합법적국적협약에는 북한내에서의 중재조차만 규정하고 제3국의 중재기관에 대한 심의규정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 분쟁해결조차 규정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재기구는 북한의 무역중재기구를 지정하는 방법, 해외의 제3국 중재기구(예: 스톡홀름 중재기구)를 지정하는 방법 또는 남북단국간 협의에 의해 중재조차가 정해지는 경우 그에 따르는 방법 등이 있다. 남북단국간 협의에 의해 중재조차를 정하는 경우, 첫째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양측 동수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둘째 북한의 중재기관과 남한의 중재기관이 협정을 통해 중재하도록 하는 방법의 두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개정 협정법시행세칙에는 외국인당

사자나 대리인이 회사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소와 정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행정기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의 경우 외국인투자법과 달리 소송쟁주를 외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박서 있는데, 외국인기업의 경우 외국인 100% 출자기업이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외국인투자자가 북한당국 또는 북한기업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국투자자가 합작하였다는 점에서 합법적국적협약 성격이 비슷한 합작기업의 경우 합작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상 제3국에서의 중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보호〉

산업재산권의 보호문제는 노무관리, 회계제도 등과 더불어 북한의 협정법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합영법에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계설비 등의 출자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다. 다만 합법적국적협약에 합영회사가 새롭게 인수한 기술 및 경영시장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민수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 더구나 표준계약서에는 ‘출자한 생산특허와 기술비밀은 합영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북한측 출자자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 북한의 국내 산업개선권 보호 제도를 보면 총전에는 발명 및 창의적 혁신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1989년 1월 과학 기술처를 제정하였다. 한편 1974년 8월 UN 기구인 세계한적 재산권 협약(WIPO)에 가입한 이래 1986년 6월 특허권협약(PCT) 등 산업재산권 관계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호의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산업의 이전 또는 허가, 노하우 허가, 기술용역 등의 국제계약과 관련된 수입 등에 있어서도 아직 외국계제가 있다. 국제기술도입계약에 관한 법률은 1972년 7월에 엄연한 법률이다. 그러나 제도화는 둔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은 외국인에 의한 특허나 상표의 제출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 국적의 특허나 상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외국기업과 관련하여 산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알려져 있는 바,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북반한 상반의 산업재산권 제출을 허용하는 협약을 도출하도록 하고 상호 협약에 의하여 new 산업재산권 보호 규정이 남한기업에도 적용될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 외국인투자 관련 투자

1993년 1월 제정된 이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법은 소득의 범위가 모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통합수표로 하여, 종전의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 추가하여 수입(관계 기업의 일종으로 일반의 관리세), 재산세, 자본세, 그 밖의 세금(토지가세, 농토가세, 자동차이용세 등)을 도입하였다.

기업소득세율은 일반기업 25%, 자영형 기업 14%, 특정가스업무 10%이며, 자영형 기업과 근사기업의 투자에 대해 다양한 종세를 적용한다. 2000년 4월 1일까지의 소득은 소득세에 따라 4~20%까지의 승계수입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국외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1년이상 5년이내는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 중 중국으로 송출된 부분만 과세대상에 포함). 수입세는 북한은 다른기업보다 높게 지불하고 있다.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이 적용되며,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마. 外換管理法制

북한의 外換管理制度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집중관리 및 外國換業務 專門銀行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운행 또는 외환관리기관이 승인한 운행에 外貨口座을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모든 외화 이용 기관·기업·단체는 분기 및 年間 外貨財政狀態表를 외환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환 관리제도는 결국 외자기업이 所要外貨를 를出이나 海外借入 등을 통해 自己조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內需販賣로 얻은 북한 ‘원’貨이용은 교환성통화로의 兌換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11)

外貨管理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취업자는 貸金 및 기타 合法的 所得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다.12) 한편 새로 제정된 외화관리법에서 주목되는 조항은 ‘북한주민은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는 外貨를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외화는 北한운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외화관리법 제15조)는 부문으로서, 중 국의 경우 허용된 個人保有外貨은 반드시 中국운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 교하여 더 개방적이며, 아마도 외화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바. 自由經濟貿易地帶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經濟特區方針의 受 容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1992년 10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1993년 1월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特惠的 措置를 法制화하였다.13)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에서는 ‘지대’)는 특혜적인 貿易 및 中國輸送 과 수출, 가공, 금융, 서비스지역으로서 투자자는 企業管理와 経営方法의 自由로운 선 택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대’는 투자심
의 지방분권화,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격 결정의 자율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환 시장 허용, 특혜적인 조세감면조치 등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투자심의결정에 있어서 ‘지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투자규모에 따라 중앙기관인 대외경제지원회와 지방기관인 지방시장으로 근거화되어 외국인투자심의결정 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값참여자기간에 있어서 지방 안의 경제는 충전시킨다는 목적외에도 특구에 시장경제의 도입을 도모하여 그것을 사회주의경 제체제와 융합시켜서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특정

이다. 북한의 ‘지대’는 개방의 척도로 활용 하겠다는 점은 명확히 체제개혁의 실현장으로서 ‘지대’내에서의 시장조절능력 활용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불투명하다.

한편 최초의 ‘지대’는 조선·선부지역을 설정한 의도로, 첫째 동 지역이 수도권지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대’ 운영에 따른 비용효과의 통제가 용 이하고, 둘째 UNDP가 추진하는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진·선부지 역에서의 외자유동성과 성공적으로 나타 난고 북한의 정치체제에 우려할 만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지대’ 설치도 가능할 것이다.

Ⅳ. 對北投資의 誘引과 危險

1. 對北投資의 誘引

가. 非經濟的 誘引

對北投資의 誘引은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장기적 관점에 기초한 非經濟의 要因과 經 濟的 要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첫째 시장공학과 기업이미지 제 고라는 投資의 戰略的 價值, 둘째 실정현충 신 기업가의 歸巢本能, 셋째 借為 言語·文化 등 民族의 同質性을 들 수 있다.

14) 일반부문의 경우 총투자액 1억원까지, 하부 구조건설부문의 경우 총투자액 2억원까지는 지방시장이 심의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대외경제지원회가 심의결정 한다.
15) 조세상의 특혜조치에 대하여는 제4장 ‘對北投資의 誘引과 危險’을 참조.

104
먼저 상당수의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통일 후를 겨냥하여 북한을 수명적으로 진출하여 할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하는 장기적 투자로 보고 감수할 용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시장을 전략의 심리적 판단하려는 경향은 대북 투자관련 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면 무역협회가 9년 9월에 걸쳐 120개의 절대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답자의 41.5%가 ‘세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진출 교두보 확보’라고 응답하여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의 31.7%를 상회하고 있 다. 이는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단기적 경제 성과보다 장기적 경제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결정은 3개국에 대한 해외투자 결정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설 향민출신 기업가들이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귀족본능도 대북투자추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언어, 문화 및 민족동질성도 해외투자에 비교하여 대북투자가 유리한 점의 하나이다.

나. 경제의 적인

대북투자에 경제적 적인에는, 첫째 저렴한 양급의 노동력, 둘째 수출화를 정비할 수 있는 지리적, 삼째 협조, 셋째 정부의 우대 조치, 그리고 남한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이러한 유인이 실상을 알고 보면, 큰 유인이 못 된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렴한 높은 노동력〉

북한의 임금도 경력, 직종, 생산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약 40달러(80~100불트원)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인 합영기업은 월평균 150달러(평양광남학공장, 안경대성장황홍 회사 등)로 알려지고 있다. 합영기업의 경우 임금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기관에 일괄 납부되고 해당 노동기관이 국가납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영기업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용기의 업무 대출을 수준으로 추정된다. ⑭ 한편 1992년 북한이 작성한 납부공단에 대한 설명서에 따르면 임금은 약 75~180달러 (최소 160~400원까지)로 한다고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들은 합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⑮

---

16)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3. 7, pp.165~166.
熟能技術人力，管理者에 대하여는 북한이 1990년 UNIDO에 제출한 「합작투자유치회 망사업목록」에서 준수한기술자부터 관리자 까지 월평균임금을 약 150~40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저장하는 一般勤務者의 월평균임금은 북한의 國營企業 一般勤務者の 임금 40달러의 4배 가까운 150달러가 일반적이며 최저 75달러~최고 200달러 사이에 있다. 그러나 북한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약 45~90달러로 외국투자기업 지급액의 23~60%에 불과하다.

북한의 投資誘致競爭國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임금, 노동력의 질 등을 비교해 보면,所得水準에 비해 教育水準이 높고 단순노동력이 풍부하며 賃金水準이 가장 낮은 베트남은 투자대상지역으로 가장 유리하며, 다음이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合營기업의 基本給은 국영기업의 120~150%로 낮은 편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주택 교통 등 각종 補助金이 基本給의 150~200%에 달하는 등 外資企業의 實際支給額은 기본급의 2~3배에 달하고 高級人力難이 심각하며, 인도네시아는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나 교육수준도 낮고 최근에는 높은 임금 및 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投資環境이 가장 比較劣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對北投資의 대표적 成功事例로 알려져 있는 모란봉합영회사의 경우 조총련총이 연합기, 특수미싱 등의 최신 펌복가공설비, 실, 양모 등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북한측은 공장건물, 노동력, 토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1989년에 신사복 및 재킷 7만 5천벌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1990년에는 여자블라우스 2만벌, 신사복 15만벌, 점퍼 15만벌을 일본에 수출하여 북한과 조총련 양측은 처음으로 각각 30 만달러씩 이윤을 올림으로써 일본의류업체의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측은 북한노동자의 본체 및 가공기술 모두 양호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만족한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국내기업의 북한에 대한 賃金加工 事例에서 도 완구, 봉제품 등의 品質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농동력의 품질은 동남아, 중국 등에 비교하여 결코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으며, 임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对北投資 失敗事例도 적지 않으며 많은 대북투자기업 이 先기술지도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의 필
<table>
<thead>
<tr>
<th></th>
<th>勞 動 力</th>
<th>月平均賃金(달리)</th>
<th>項 償</th>
<th>其 他</th>
</tr>
</thead>
<tbody>
<tr>
<td>北韓</td>
<td>教育수준 높음 노동력 풍부</td>
<td>미숙련공 150달러(1)</td>
<td>노동정책기관과의 계약</td>
<td>사회보험료 7% 회사부담 연간 15일 휴가</td>
</tr>
<tr>
<td></td>
<td></td>
<td>숙련공,관리자 150~400달러</td>
<td></td>
<td></td>
</tr>
<tr>
<td>中國</td>
<td>教育수준 보통 단순인력 풍부 숙련인력 부족</td>
<td>90~112.5달러(2)</td>
<td>노동기관 직접 고용 가능</td>
<td>임금(실수령액)외 보험료,주택,물가 등 보조금을 회사가 부담. 연간 20일 휴가</td>
</tr>
<tr>
<td>韓南</td>
<td>教育수준 양호 단순인력 풍부 숙련인력 부족</td>
<td>미숙련공 30~50달러</td>
<td>노동기관 직접 고용 가능</td>
<td>사회보험료 15% 연간 1주 휴가</td>
</tr>
<tr>
<td></td>
<td></td>
<td>숙련공 120달러</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관리자 250달러</td>
<td></td>
<td></td>
</tr>
<tr>
<td>西亞</td>
<td>教育수준 낮음 단순인력 풍부</td>
<td>미숙련공 60~80달러</td>
<td>노조와 계약</td>
<td>사회보험료 없음 파업 금지 연간 2주 휴가</td>
</tr>
<tr>
<td></td>
<td></td>
<td>숙련공 100~160달러</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1) 북한의 임금은 합영회사가 노동기관에 납부하는 실지급액 기준. 2) 중국의 임금은 합영회사의 기본급 기준으로 회사가 노동기관에 납부하는 실지급액은 기본급에 각 종 보조금, 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함.

資料: 北한 -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험』, 1993. 7.
中國 - 대한무역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韓南 - UNIDO, 『베트남투자실험 안내』, 1992. 3.
西亞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험』, 1993. 7.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소수의 성공사례나 소량의 임가공 사례만으로 북한노동력의 품질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地理的 利點〉**

북한은 地理的으로 가깝기 때문에輸送費를 절감할 수 있는 利點이 있어서 원자재공급 또는 제품반입 등으로 모기업과 해외투자기업간 수송의 필요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輸送費節減이 큰誘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간 해로·철도 및 도로연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鐵道輸送이 가능하다면 수송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수 있으며, 철도연결이 어렵다면 적어도 남북간 직접 輸送費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송비 절감의 이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해로·철도 등輸送網을 연결하는 한편, 북한투자시 수송망을 감안하여 임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租税減免 惠澤>

북한은 외국인투자유치가 활발한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하여 새로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다소 유리한租税減免惠澤을 적용하였다. <表 5>는 북한,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의식하여 企業所得稅의 基本税率を 25%로 정하였으며, 또한 ‘지대’에 적용되는 세율도 중국의 特區보다 낮은 14%로 정정하였다. 북한의 企業所得稅율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15~30%), 말레이시아 (40%), 태국 (30~50%), 필리핀 (15~25%) 등 동남아 국가보다는 다소 유리한 수준이다.

租税減免(tax holiday)에 있어서는 북한은 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감면혜택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 비해, 중국과 베트남은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减免基準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세감면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投資業種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계획시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政府의 政策의 支援>

對北投資가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政策의 支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유일한 금융지원제도인 南北協力基金의 규모도 크지 않지만 남북협력기금이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의 貸出과 損失補助, 債務保證 등 지원대상을 완범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2. 對北投資의 危險

가. 非經濟的 危險

<體制의 特殊性에 기인한 問題>

對北投資計劃의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情報不足이다. 북한의 閉鎖性으로 현지 사정을 알기 어려운데다가 북한체제가 시장경제는 물론 改革開放의 경험이 축적된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서의 投資經驗을 적용할 수도 없는 데 따른 不確實性은 대북투자의 큰 문제점이다. 體制的 特殊性에 기인한 또 다른 투자위험으로 計劃經濟의 硬直性을 들 수 있다. 구조론의 경우에 나타나는 정부관리들의 관료주의, 근로자들의 자주성, 적극성, 참여의식의 부족 등의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thead>
<tr>
<th></th>
<th>北韓</th>
<th>中國</th>
<th>貝特南</th>
</tr>
</thead>
<tbody>
<tr>
<td>所得税率</td>
<td>일반지역: 25%</td>
<td>일반: 33%(지방세 3% 포함)</td>
<td>일반: 25%</td>
</tr>
<tr>
<td></td>
<td>자유경제특례지대: 14%</td>
<td>특구: 15%</td>
<td>수출가공구: 10%</td>
</tr>
<tr>
<td></td>
<td>장려부문: 10%</td>
<td>장려부문: 10%</td>
<td>우대부문: 10, 15, 20%</td>
</tr>
<tr>
<td>所得税減免</td>
<td>자유지대제조업, 장려부문: 3년 면제후 2년 50% 감 면①</td>
<td>기초: 10년이상 운영시 2년 면제후 3년 50% 감면</td>
<td>기초: 1년 면제후 2년 50% 감면</td>
</tr>
<tr>
<td></td>
<td>서비스업: 1년 면제후 2년 50% 감면①</td>
<td>농림어업: 기초+10년간 10~15% 감면</td>
<td>20% 소득세 적용부분: 2년 면제후 3년 50% 감면</td>
</tr>
<tr>
<td></td>
<td>자유지대 하부구조건설 총 투자액의 6천만원 이상: 4년 면제후 3 년 50% 감면</td>
<td>70% 수출기업: 기초+50% 감면 계속</td>
<td>15% 소득세 적용부분: 2년 면제후 4년 50% 감면</td>
</tr>
<tr>
<td></td>
<td>장려지원사업: 특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이상 기업: 3년 면제후 5년 50% 감면</td>
<td>장려지원사업: 특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이상 기업: 3년 면제후 5년 50% 감면</td>
<td></td>
</tr>
<tr>
<td>再投資惠澤</td>
<td>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영 시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의 50% 환급</td>
<td>5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40% 환급, 첨단기업 및 수출기업은 100% 환급</td>
<td>3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환급</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備註：1) 10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政治的 危險〉

北韓의 개방의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고 政權交替 및 權力闘争에 따라 偶發的 事件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결과로 예측하기 곤란하며, 장래의 남북한 관계에도 不確実性이 크기 때문에 大北투자에 시설체손 및 파괴 등 財產損失의 위협 이 있으나 大北투자에 대한 투자 및 철수에 대한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나. 經済的 危險

〈市場性〉

直接투자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의 하나는 市場性이다. 直接투자는 內需販賣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시장 또는 제3국 시장의 규모(현재 및 예후)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現在 體制의 特性이나 經済水準을 몰 때 내수시장을 거냥한 투자는 이루어지기
美麗다. 우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는 수출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내수를 목적으로 한 대北投資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또 설사 허용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외환일환과 농경 주민의所得水準을 고려할 때 내수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제3국 수출은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EC도 북한을債務弁済不能國 및破産國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북한산 제품의 수출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산 제품의 남한으로의 반입도 영제 및 중소기업제품과競爭關係에 놓일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대北投資承認段階 또는物資搬入段階에서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산 제품의 시장은 남한, 일본, 중국 등舊共産國과동남아 등開途國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즉,市場性의側面에서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북한지역과中國東北3省의 배후지역을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제3국 수출에 대한 제약도 결국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투자의潛在의市場性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投資의下部構造 落後〉

북한경제는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으며 철도, 항만, 도로, 통신 등社會間接資本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電力은電壓이 불안정한데다 供給도 부족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70년대 중반의 사례로는 하지만 조철련이 기증한 라면공장의 경우 전자통 기계화되어 있어서 전압변화의 허용범위가 상하 10%미만이 있으나 북한의 전압이 불안정하여 기계가 고장났는데, 에포메어서비스요원이 북한을방문하기 위한 출입국절차에 6개월이 경과되는 바람에 수리가 불가능해서 공장은 고물이 되었다고 하며,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22)

한편 貨物運送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鐵道는 대부분 單線이며 일제때 건설한 것이 대부분으로 취급이 막연되어 정상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港灣施設도 나전·선봉을 비롯한 대부분의항구가 컨테이너·荷役設備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최대 접안능력도 1만~2만톤 정도의 수준이다.

〈企業經營의 徵視の危険〉

대북투자기업의 徵視의危険으로는 송금의 불확실성, 원자재 현지조달계획의 차질, 본지사간의 잇적교류 및 통신의제약등을 더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外聯不足状況에 비추어 과실송금의 불확실성이 없지 않다. 과실송금은 법제상 보장되어 있지만內需販賣로 얻은 利潤은 安兌性通貨로의 교환이 원칙적으로 규제될 것이며, 輸出을 통

22) 북한의 長期商業過去 함께사업의 실패사례에 대하여는 李佑民, 〈여름의共和國〉, 1990, pp. 46~75 참조. 북한의 長期商業是 최근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 얻은 외화이용도 북한의 외환시장에 따라 환승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원재료 조달시 북한내 생산물자의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획경제의 속성상 구매자가 원하는 물자가 아니라 목표달성만을 위해 구격, 품질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자가 공급되거나 원자재공급과정의 차질로 아예 물자가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저자간의 통신 또는 관의 약속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간지체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V. 對北投資戰略의 模索

1. 對北投資의 政策課題

가. 北韓의 投資與件改善 誘導

南北經協이 완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對北投資의 유인은 강화되고 위험은 축소되어 도록 정부가 북한의 투자여건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북투자 를 맞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당국간 협의가 필요 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산업재산권 보호, 공업규격 의 통일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다. 이 중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산업재산권 보호 등은 국제적인 기준과 중립, 동남아 등 인근국의 客觀的 事例가 있기 때문에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紛爭解決基本方針는 남북한이 새로운 공동의 仲裁機構을 구성하거나 또는 남북한 이 협의하여 北韓의 기존 중제기구간 協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南北問題의 特殊性으로 보아서는 첫번째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國際的인 先例 가 없고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두번째 방법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송비절감의 실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陸路輸送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철도 · 도로 등 陸路輸送體系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對北投資는 남한에 서 가장 먼 나긴·新賓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이루어지기 쉽고, 投資方式도 임가공형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輸送費節減은 중요한 投資誘引이므로 北한當國을 설득하여 조기 에 남북간 陸路輸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對北投資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情報不足이므로 北한경제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대북경제정보 수집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제공을 체계화하는 한편,
남북당국간의 협의에 의해 우리 기업이 사
용할 대북투자의 표준契約書를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북한당국과 협의하여 중국의 대만
동포 투자장려규정에 상응하는 남한동포 투
자장려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은 대만기업인의
대륙투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대륙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한기업인의 대
북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대만기업인이 대륙
투자에 가졌던 불안감보다 그도 월치 덜하
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당국을 설득하여 우
리 기업인의 안정감을 증가하키 대북투자
의 실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우리 내부의 대북투자制度整備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투자契約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제도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는 과제로서, 첫째 대북투자
제도, 둘째 대북투자의 조정, 셋째 대북投
資支援制度의 세가지로 들 수 있다.

〈投資節次〉

우선 현재의 대북投資節次는 대북교역절
차에 비하여 너무 복잡하다. 대북교역은 현
재交易契約을 자동승인대상품목과 제한승
인품목으로 구분하여, 자동승인품목은 일반
무역과 마찬가지로 갈음외국환환행의 승인
을 얻으면 되고, 제한승인품목의 경우에만
통일원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承認契約书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투
자の場合 대북투자를 추진하려는 자는 ①
협력사업자 승인, ②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
한방문 승인, ③협력사업 승인, ④해외투
자 승인(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
자승인결과)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
어 대北交易와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図 3 참조).

이 중 ①과 ②의 단계는 南北合意書가
실천되는 단계에 전입해서는 범지 또는 간
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협력사업승인과 중복되므로 이를 폐
지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집측은
事前承認을 事後報告로 대체하며, 북한방문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의 협력사업승인결과는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승인신청을 접수하
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를 30
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하여 의결을 거친 후 承認契約書를 결정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리훈령 제258호
(1992. 4)에 따라 추진협의회 상정 전에 남
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가 전문적 사항에 대
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④의
해외투자승인결과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로서 外환使用에 따르는 절차이
다. ③의 절차에서는 해당 대북투자사업의
非經濟의 側面뿐만 아니라 経済의 側面도
검토하게 되므로 이때 外換使用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검토될 수 있게 함으로써 ④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것도 검토해 볼

112
수 있을 것이다.

〈投資的調整 및 支援〉

對北投資是 북한의 수용능력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投資需要가 크기 때문에 대북진출을 위한 기업간의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 이 있다. 북한의 外資受容能力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 우에 비추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하다. 우선 북한이 UNIDO를 통해 全産業에 걸쳐 작성한 외국인투자유치회망목록에 따르면 북한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하는 사업은 총 83건, 외국인투자요청액은 총 8억 7,840만 달러이다. 즉, 북한의 投資環境에 문제점이 없다는 가정하에 북한이 추진하는 모든 외국인투자사업이 성사되더라도 총규모는 최대 8억 7,840만달러 수준이다. 한편, 외국인투자 성공적으로 유치한 중국의 경우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總固定投資의 2.6%를 차지하였다. 북한과 중국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총고정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을 중국을 상회하는 3% 수준으로 달성하고 북한의 총고정투자가 GNP의 30%라고 가정하면, 1992년 북한의 GNP가 211억달러(한국은행 추정치)이므로 북한이 유치가능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연간 2억달러 에 못미친다.

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북한과 경쟁관계에 있는 中國投資만 보더라도 숭인 기준으로 89년부터 93년 상반기까지 675건 에 중 6억 5,800만달러이며, 실행된 투자는 412건에 3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年도별로 보면 대중국투자가 본격화된 1992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즉,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내투자체 조사본토에서 경제성과 재능력의 형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복합경쟁력, 경제성과 간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企業의對北投資方案

가.對北投資의基本方向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병중하는 고위험투자지역이다. 기업은 대북투자에 희생을 감수하여 위험의 자기부담이 적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투자체 조사본토의 경제성과 재능력의 형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복합경쟁력, 경제성과 간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4) 투자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全洪澤・曹東昊 (1992, 6) 참조.
등의 품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의복, 원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소비재 원료산업, 전기·전자 중 조립형 수출산업 등, 한국의 도달력과 한국의 특성에 특화된 모란봉합영업사 등과 거래 구조소개로 설비, 원재료를 제공하고 제품 수요(product buy-back) 방식으로 구조로 수출환 시도한 합작기업들도 대개 성유, 의류, 신발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독자방식에 있어서도 투자협력을 초소화할 수 있는 단계의 접점이라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투자초저에는 단순업가공 또는 설비제공형 입가공 등을 투자업종의 성과와 부합되면서 협력을 초소화할 수 있는 투자방식을 취하고 남북경제관계의 활성화에 따라 공장설립, 자원개발 등 투자를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에 투자방식의 특징은 북한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협력, 협동,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보장되는 단독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으나, 북한과 같이 행정기관의 제재적 범용수 경제가 높고 사회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현지의 협력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와 달리 대만 기업가는 단독투자효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는 대만의 대륙투자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이며, 중국의 경제개혁 진전으로 기업환경이 상당히 시장적 상황의 인테크 지역적으로도 친절히 가증하는 적응력에 집중되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개방이 시작되려는 시점이고 시장환경의 전환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북투자수 산간축의 활용은 체계적 성격상 융이지 않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험이나 북한에 진출한 일본의 합영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지 협력자의 역할에 따라 경영상과의 차이가 둘러싸고 있으므로 대북투자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적 협력자가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할 것이다. 특히 일본 공방식에 적합한 합작기업 형태는 북한적 경영을 보완으로써 있어 북한적도 선호할 것이다.


나. 위험관리

수출기업 운영의 지원의 위험은 투자 주의 단계와 협상단계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투자업종, 투자방식, 투자 형태 등 기본사항에 대한 점포와 합작면 및 입자의 선정,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중심段과 투자계약을 확정하는 산입단계에서 위험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작선을 결정할 때에는 북한경제체제의 특성과 투자대상지역을 감안

25) 북한외 합영기업의 사례에 대하여는 대한무역
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한경자료 93-35, 
영국해무, 『北朝鮮における合併事業の展開に
ついて』, 『北朝鮮の経済と貿易の展望』, 日本
貿易振興会, 1992 참조.
<표 6> 위험最小化를 위한 對北投資의 段階的 接近

<table>
<thead>
<tr>
<th>초기단계</th>
<th>본격화단계</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업종</td>
<td>경공업</td>
</tr>
<tr>
<td></td>
<td>임가공</td>
</tr>
<tr>
<td></td>
<td>합작</td>
</tr>
<tr>
<td></td>
<td>자유경제무역지대, 남포 등</td>
</tr>
<tr>
<td>투자방식</td>
<td>전용공단</td>
</tr>
<tr>
<td>투 자 형태</td>
<td></td>
</tr>
<tr>
<td>투자지역</td>
<td></td>
</tr>
</tbody>
</table>

하여야 한다. 북한경제는 크게 黨이 직접 통제하는 핵심경제부문, 政務院이 통제하는 일반경제부문, 軍이 통제하는 군수부문의 三重構造와 당이 정무원을 지도하는 黨優位가 특징이다. 따라서 동일업종에서 ‘당의 기업’과 ‘정무원의 기업’이 경쟁할 때에는 ‘당의 기업’이 유리하므로 합작선 선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투자선정은 가능한 한 철저한 充當性 調査를 거쳐야 한다.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공장과의 수송체계, 원자재의 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과 관련하여 철도, 항만 등의 운송시설을 탐색,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目標市場(target market)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다. 北韓無 製品의 유럽, EC 등으로의 수출에 제약이 있고, 남한으로의 반입도 일정규모 이상은 국내산업에의 외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제한될 것이므로 目標市場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사전에 販売網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協商段階에서는 북한에 진출해 있는 합영기업이나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出資의 평가, 고용 해고 등 労務管理, 費金(보너스 포함) 결정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에의 투자시 외국인투자가자는 주로 기계설비, 기술, 자금 등을 출자하고 북한측 투자가는 토지사용권, 건물 등으로 출자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現物財産 및 財產權에 대한 출자가 國際市場價格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합영법 시행령에 서는 국채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 관기관이 평가한 데 따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出資物의 평가에 있어 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의 悖意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측 출자물, 특히 산업재산권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측의 토지, 건물 등 現物出資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를 볼 때 자체적 持分率를 높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평가한 가능성이 크므로, 토지와 출자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토지를 출자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土地使用料를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必要人力은 원칙적으로 봉타 복무관에 알선해 주게 되어 있으나, 북한재 사람과 사적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인근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장의 소속력이 있을 때는 북한측 관리의 기존 복무관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기존 공장에는 우수인력을, 신설공장에는 열등인력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중국의 경우로서에도 인사 채용 등도 예상되나, 문제 발생의 해고가 실제로는 쉽지 않음을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관제에서 제한적, 분원별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인사관리를 도입하였다가도 하지만, 북한에 진출해 있는 합영기업의 사례를 보면, 임금을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행정기관을 통해 간접지급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너스 등의 지급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산품 또는 허가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종업원 해외연수, 보너스의 현물지급 등 인센티브를 위해 북한측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VI. 結 言

北한은 對外政策의 虐化에 따른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나 마 봉타 복무관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1992년 10월 이후의 대폭적인 외국인투자法制의

改編内容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개 방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10년 이상 개방과 개방을 추진하여 온 중국이나 1986년 이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모방하여 빠른 속도로 '도이모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1984년의 협정법제 계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개선된 점은 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改編된 외국인투자法制의 特徴은, 첫째, 中國式 特區戦略을 수용하여 자유경제무역 지대를 설정하고 중 지역내에서는 보다 자 유스러운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둘째, 중국, 베트남 등 競爭國을 의식하여 소득세율, 소득세감면기간, 조세의 우대부문 설정 등 税制減免惠澤을 확대한 것, 셋째, 합작기업, 단독투자형태의 외국인기업 등 投資形態를 多樣化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편된 외국인투자법제는 투자신청 후 북한당국에 承認허용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등 투자절차, 이 사회구성과 운영방식, 존속 및 해산절차 등에서 透明性과 具體性이 제고되었다.

한편 개편된 외국인투자법제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하고 勞働力의 雇佣・解雇是 노동행정기관을 통해 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의 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은 물론 시장경제국가들의 외국인투자
법제들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주권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가 투자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의 단계에서 또는 당국간의 대화에 의해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적 투자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投資環境은 개선된 게 별로 없으며, 사회간접자본의 누락, 전반적인 경제정책, 전력 등 에너지문제 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투자배경으로 거론되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은 어느 정도 적당성이 있는 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단순인력 평균임금은 150달러 수준으로서 교육 수준을 감안하면 동남아나 중국에 비해서 입금촉진에서 별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영 사업의 사례, 또 그동안 적은 규모지만 남북간에 이루어진 임가공사례 등을 통해서 보면 북한의 노동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력의 공급은 풍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 달리 장사하는 인구국은 아니며 경제체제의 성격상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투입을 극대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대북투자에 대해 우리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인건비가 적지 않을 수 있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북투자는 남북관계의 동질화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대북투자의 의의가 실현될 수 있는 대북투자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대북투자전략은 초기단계에서는 임가공사식, 합작형태로 투자규모가 적은 경우에 영업분야와 관련한 인프라 분야에 진출하고 관계조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하며, 위협과 자금부담 원칙 아래 투자준비단계와 협상단계에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총정부단계에서는 철저한 안전성 점검과 현지 정보에 기초한 합작전과 임지선정 등이 중요하며, 각기업단계에서는 출자주의 평가, 고용・해고 등 수요관리, 임금체계 및 보너스 지급, 회계처리 등에 대한 협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부는북측의 투자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環
境 改善을 위해서는 북한당국과의 協議를
통해 투자보상, 이중과세 방지, 재산권보호,
분쟁첤폐절차, 공업규격통일 등 南北協議의
制度의 裝置를 마련하고, 育로연결수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輸送費を 절감할 수 있도
록 하며, 중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북한당국
으로 하여금 '남한동포투자장려규정'(가정)
을 재정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경제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大북투자절차의 간소화와
大北투자조정방안을 강구하여 民間과 政府,
또 民間과 民間간의 自律과 協助로 大北投
資사업이 점차 있는 가운데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接로 중국기업은 大北投資者의 위험관리
능력이 미흡하므로 大投資과의 협력, 中土
企業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중국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情報・
技術・金融・協同技術 등에 대한 綜合的인
支援體制를 구축하는 빌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獻

권 울, 「베트남의 土地制度와 開發參與方
案」, 『土地研究』, 韓國土地開發展公社,
1993년 1・2월호.
金時中,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韓
國의 進出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
김정계,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 明人社,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태』, 貿易資料
락키금성경제연구소, 『南北韓 經濟協力 推
進現況과 展望』, 1992, 4.
배용렬,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我
う의 對北投資政策 方向」, 輸銀調查
月報, 제12권 제3호, 1993, 3.
法制處, 『北韓法制概要』, 1991.
楊平燮・安鍾石, 『中國 外國人 直接投資誘
致政策의 變化와 韓國의 對中投資』,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センター,
1993.
延河清・崔炳善, 『北韓・日本の 經濟協力
과 南北韓 經濟關係의 變化展望』, 北
韓經濟研究センター 研究資料 93-03, 韓
國開発研究院, 1993, 2.
임동진・임길진, 『中國投資의 實態』, 나남,
1989.
吳勇鍾, 『中國 經濟特區戰略的 評價와 韓國
企業의 對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北韓経済研究センター 研究資料 93－05, 韓國開發研究院, 1993. 3.
全洪澤・曹東昊, 「南北韓 投資協力의 當面課題」, 第2次 國際學術會議 資料集, 『南北韓 經濟協力의 當面課題와 汶江地域 開發計劃』, 韓國開發研究院, 1992. 6.
韓国商務協会, 『對中國交易 및 投資案内』, 1991.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併事業の展開 について」, 『北朝鮮の経済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会, 1992.

UNIDO, List of Project Profiles from the DPRK, July 1990.
談合規制의 效率化를 위한 競爭政策方向

申 光 泰

本稿是1981-92년의 부당한 共同行為 및 事業者團體禁止行為 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라 사업자들의 談合規制과 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談合規制法制와 그 運用上の
問題들을 검토하여 談合規制의 實效性 提高을 위한 競争政策의 代案들을 체계하고 있다.

我們的 談合規制法制와 法施行方法은 完全하고 지속적인 談合보다는 談合의 目的적 중
거를 남길 가능성이 많은 明示의 共謀行為의 搭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事實, 談
合事件들이 競争의 市場에 偏在되어 있고 事業者間 및 事業者團體 共同行為의 平均共謀期
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時晶조치된 行為가 競争談合
的 試圖양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價格固定共謀의 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談合實行期間 賣出額의 1%라는 現況의 最高 談費金額은 不當利得還収나 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正의 모든 違法行為에 대
하여 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談合事業者들에 談費金이나 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
히 드물어 談合抑止效果가 의문스이고 있다.

談合規制的 實效性 提高を 위해서는 競争的 實質的 制限性이 아니라 競争制限의 不當性
을 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價格固定, 入札操作, 市場分割 등 '작나라한' 談合에 대한
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談費金을 談合期間 賣出額의 20% 정도로 上向調整하여 談合에
对한 懲戒的 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談合의 搭發·立證努力에 經済的 分析
和 證據를 이용하고, 特히 入札操作의 監視·掛發體制를 확립하여 公共競逐分野에 대한
競争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静的의 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談合
促進·企圖行爲를 금지할法的 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 序 論

談合은 多數의 閣揖적 事業者들이 市場競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 論文的 草稿 與之 權衡之 論評者을 韓企
本院의 南逸聰, 崔鍾元 博士와 市場的

争을 억압하고 獨占力を 腹割り 行事하기 위
해 자기들의 行為를 調整하는 것으로, 그 경
제적 페해는 獨占의 경우와 유사하다. 成功
的 談合은 競爭力 제한과 超競争的 價格 策定
을 통해 賣負嘗로부터 競爭者들에게 富を
移転하고 獨占厚生損失(deadweight loss)を
조례할 뿐만 아니라, 경쟁압력을 제거함으로써,技術의,非效率,限界企業의,存続,技術革新과,産業構造調整의,지연,등,다양한,형태의,非效率을,가져오게,된다. 1) 그러하여,각국의,獨占禁止法은,談合을,違法化하고,있으며,우리의,公正去來法令,価格固定,産出,量,制限,市場分割,競争者,排除,등을,위한,사업자들의,共同努力는,‘부당한,共同行為’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大半의,製造業,분야가,獨占,의,構造로,되어,있고, 거의,모든,업종에,事業者團隊가,조직되어,있으며,競争制限의,法令과,行政慣行도,많이,전반적으로,事業者,間,및,事業者團隊에,의한,談合의,개연성이,매우,높다고,볼,수,있다. 따라서,우리에게,談合規制는,自由競争體制의,확립을,통한,경제의,극대화와,성장잠재력의,발현을,위해,극히,중요한,정책과제이다. 政府主導의,経済成長 과정에서,合法의,카르텔과,事業者,들의,談合이,관행화된,상황에서,公正去來法令이,제정되어,부당한,共同行為를,違法化한,것은,市場機能活性化의,기반을,마련한,제기,가,되었다고,보겠다. 이에는,談合規制制度,와,그,運用実績을,評価하여,談合規制의,実効性,提高을,위한,競争政策의,始動方針을,모색해야,할,時點이다.

지금까지,共同行為에,관한,研究는,主로,談合規制의,立法論의, 및,法解論論의,論議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실제의,談合事例들에,대한,詳細,分析를,통해,談合規制의,本質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競争政策방향을,설정하기,노력을,미쳤다고,한다. 本稿는,1981~92년의,부당한,共同行為, 및,事業者,團隊禁止行為,事件들을,대상으로,우리나라,事業者の,談合禁止事件과,談合의,일반적,특징들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談合規制法制,와,規制実績을,評価하여,談合規制의,實効性,를,위한,競争政策의,推進方針을,제시하고,있다. 第II章에서는,事業者の,談合誘因과,談合의,성을,따라서,競争政策,에,의향을,미치는,市場構造의,要因들을,살펴보고,寡占企業들이, 자기,들의,行為를,조정할,수,있는,方法을,검토하,고,있다. 第3章에서는,談合規制法制와,規制実績을,개관한,뒤,부당한,共同行為를, 및,事業者,團隊禁止行為,審決例에,나타난,談合,闖聯,製品과,市場,談合方法,등,談合의,다양한,촉진들을,분석하고,이에,의거하여,談合規制実績을,평가하고,있다. 마지막,章에서는, 이상의,論議와,分析를,바탕으로,談合規制의,実効性,推進를,위한,法制와,法運用上の,改善方針들을,제시하고,있다.
II. 談合의 經濟的 分析

1. 談合의 施行費用

談合은 그 形態와 方法가 다를 뿐 아니라 實效性과 持續期間 등도 크게 다르다. 短命하였거나 소량의 表現에 불과한 談合도 있고,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었으나 경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경쟁을 억압하였으면서도 적발되지 않은 談合도 있을 것이다.

事業者들이 ‘성공적으로’ 談合하기 위해서는 가격수준이나 산출량 배분 등의 調整條件에 合意하고 合意逸脱行爲를 신속히 探知·處罰할 수 있어야 한다. 談合의 前期적 형태는 경쟁자들의 價格固定共謀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어떤 共通価格과 產出量 配分方式에 合意해야 하지만 상이한 銷售구조 등으로 각기 원하는 價格과 產出量이 달라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合意에 이르더라도 각 共謀者는 은밀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량을 늘리려는 誘因을 갖게 되므로 欺瞞行爲의 감시와 단속이 필요해진다. 產出量 削減이나 市場占有率 削減이 비밀가격인하를 저지하는 方法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은밀한 방법으로 지키도록 하는 데는 어렵다. 예컨대 합의된 產出量으로부터 이탈이 생기면 共謀者들간의 去來精算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런 企業間

地域의 市場分割은 共謀者들이 共通価格을 교섭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가격과 산출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價格合意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가격인하의 誘因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市場分割의 또 다른 利點은 非價格競爭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共謀者들이 産出量 配分에 관한 합의 없이 談合価格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非價格競爭을 통해 談合利潤이 소멸되는 경향이 있으나, 고객의 지역적 이동성이 없고 市場分割妥定이 준수되다면 非價格競爭의 誘因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談合妥定의 欺瞞誘因이 존재하여 欺瞞行爲의 訓練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을 誘引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低価格市場에서 구매하여 高価格市場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低価格事業者は 이를 막으려는 誘因을 갖지 않는다. 이 밖에도 市場分割은 공모자들간의 違法 조정과 협력을 통한 산업이윤의 極大化를 달성하지 못한다. 각 共謀者는 대외 競争에서 합의상생을 대신하여 다른 공모자들간의 산출량 조정을 통해 利潤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顧客削減은 각 共謀者에게 顧客들을 배정하여 顧客確保競爭을 방지하는 것으로 그機能과效果는 지역적 市場分割과 유사하다. 顧客削減도 나라들내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顧客削減은 쉽게 탐지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경기적으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고객들에게 대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시 간이 흐르면서 확장·변화하는 고객들이 있 는 반면 서로 소비하는 고객들도 있어, 공 모자들간에 고객이상에 대한 불만과 불화가 생겨나 마련인 것이다. 또한 고객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자들인 경우, 이러한 공모행태의 고객들은 경영면에서 그 경쟁자들이보다 유리 해져 성장할 수 있으므로, 공모자들이 강력 한 가격이하 사유화를 갖게 된다.

2. 談合誘因과 市場與件

여면 상황하에서 경쟁자들간에 조정과한 조건의 속의가 쉽게 이루어지고 속의가 잘 유지될 수 있는가? 경제理論은 談合의 施行費用이 市場의 構造的·技術的 要素들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 조건들을 갖춘 산업에서 談合 이 쉽게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 람이 많음을 시사한다.

가. 事業者數와 集中度

談合은 事業者數가 적고 集中度가 높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이런 시장에서 는 효과적 談合에 필요한 共謀者數가 적어 가격이나 산출량 변동에 관한 속의에 이 르기 쉽고 共謀施行의 어려움도 크지 않다. 

調整條件의 合意는 生產費用이나 垂直統合 의 정도 등 사업자들의 異質性에 의해 제한 ·방해될 수 있는데, 共謀者數가 적음수록 最適調整條件에 대한 見解差이 생길 가능 이 적어 合意가 쉬워진다. 또한 購買者의 数와 規模分布가 일정한 경우, 共謀者數가 적음수록 欺瞞行為로 인한 「정직한」공모자 들의 占有率 감소가 줄 것이므로 合意放蕩 行為가 달지될 가능성이 많아 逸脱誘因도 적 어진다. 2)

나. 需要彈力性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商品이 談合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需要가 非彈力의인 商品이라면 일정 產出量 制限에 따른 價格上昇(따라서 談合의 利得)이 큰 것이며, 일정 價格引上에 필요한 供給量 감소가 적어 가동률의 하락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遊休生產設備의 調整費用도 낮은 것이다. 또한 欺瞞行為의 管理費用 증가는 추후 여러 共謀者들의 管理費用 감소로부터 오게 되므로 逸脱行為가 달지될 가능도 많다. 3)

다. 商品의 同質性

복잡하고 差別化된 商品보다는 단순하고 同質의인 商品에 대하여 談合이 이루어지기 쉽다.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제품 등과 같,
이 복잡하고 자변화된 상황의 경우에는, 가격, 품질, 서비스, 판매수단 등 여러 요소들이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비가격 경쟁의 기회가 많아져, 피업을 조직적, 운영하는 어려움도 커진다. 공동주의들은, 가격구조 형식으로, 판촉활동, 판매조건과 방법, 제품개발 등, 비가격 경쟁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 공동주의가 제품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제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조건이, 적절하다면, 변경조항, 수익을, 다시, 재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의들이, 가격조건을, 융성하고, 있다면, 이들은 제조, 기술,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능력, 마케팅, 기술의 복합성이, 인해, 이런, 적극적, 관리, 방법을, 탐색하는, 극히, 어려운, 반면에, 상품이, 단순하다고, 비가격 경쟁의, 소비자가, 별로, 어렵고, 경쟁, 품질의, 교체, 불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동일,의,이나, 제조, 경제품, 표준, 경제품, 목재, 철강, 농산품 등, 조합조약이, 단순화될, 수, 있다. 사실, 완전한, 동일,성,를, 가정한다며, 공동주의들은, 담합이, 복잡화하는, 단일,가격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이, 경쟁제품들,에, 대하여, 적어도, 판매자가, 동일,가격수준에서, 품질,제고, 등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기술, 이용, 필요, 변화

피업은, 기술혁신과, 소재,특성의, 변화가, 빈번한, 점을, 보다는, 기술, 변이, 별로, 없고,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르게, 될 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생산비용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면, 조합조약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의들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개발, 가능과, 속도는, 다를, 것이며, 이는, 조합조약의, 적절, 조정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다른, 농업자들로부터, 고객을, 유도하고, 적은, 정도의, 기술혁신이나,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면, 피업, 자체의, 존립, 상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 도입, 기기, 등, 같은, 제품에, 대하여, 피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업은, 필요, 수고, 변화가 적은, 대체로, 생산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만일, 필요, 수요가, 적어지면, 쓰는, 방법으로, 변화한다. 본질적으로, 그때마다, 조합조약에, 다시, 적절하게, 조정을, 하며, 적극적, 관리의, 사례로, 마케팅, 활동의, 다른, 이유로, 구별하기도, 어려우며, 피업은, 이, 사례로, 마케팅, 활동의, 사례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마. 생산의 수요

피업은, 필요, 수요, 증가와, 동일, 재고, 생산의,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실패됨, 가능성, 많다. 경기, 정체로, 사채자들이, 재정, 부정리, 역,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최대, 수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가격이, 평균, 수요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업이, 부정리, 되면, 어떤, 사업자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쉽게, 형성된다.
성될 수 있으며,  

발표에 의한 관리의 정 ley이  

출입을 유발할 위험이 적다.  

바. 가격정보

발표는 가격요인, 경쟁자들의 관리의 정보의 수집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가격카탈로그가 그 구성원들의 가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격의 절대적인 형식이나 가격의 경향성 구분이 없다면 이는 특별한 막바지와 처벌이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자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리는 구매자들에게 이와 같은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마케팅에 의한 공급요인

따르면, 가격의 좋은 대상이 됐을 의미한 

그가 가격의 목적이 사 

업자들의 차별화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 

리하려는 것이지만 그 결과를 공표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공급요인들에게 발발적 균형의 관리단계를 제공하게 된다. 즉, 가격의 경쟁에서 가격의 경제적 화학인가를 즉시 특정하게 노출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가격요인을 낮추게 된다.  

사. 산업의 사회의 구조

발표는 강력한 산업군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발가능하다고 산업들은 일관성을 사용하여 주요한 단계를 가까운 경제학자, 로써 가격, 경제, 일반적으로 산업에서의 단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발가능한 요소, 경제학자로 활동함으로써 가격으로 발가능한 목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독립적인 산업자 또는 경제학자들이 협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는 기업가는, 구매자에게 공해는이고 산업자에서의 감소된 산업에서도 발가능이 어려워진다.

아. 구매자규모

발표는 많은 구매자들보다는 다수의 구매자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구매자들에게 존재하는 시장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관리로 요인이 경
쟁수로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 쇼핑이 이용증가의 유일한 메커니즘일 수 있다. 하지만 쇼핑은 시도되어도, 주관적 이익을 둔 간판 경영의 선호에 기자 간판 경영을 위해 그들에게 가격안정을 해주려는 강한 홍의를 갖게 되며, 폭망 행위를 탐지하기도 극히 어렵다. 또한, 많은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쇼핑의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단계의 임용자들로서 쇼핑에 의해 가격이 장기경쟁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게 되면 제품의 자체적인 생산을 감소할 것이다. 반면, 수차의 수량구매가 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대특이적 경영 행위를 그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되기는 어렵다. 1회의 가격 촉각에 따른 이익이 적도가격적 촉각으로 미치지 못하므로, 가격 촉각행위가 어느 정도 이익을 줄이기려면 많은 간판들에게 가격인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촉각행위가 점차 가망성이 커진다. 10)

9) Stigler(1964, p.43)는 "그 구매력이 자기의
풀구매력에 비하여 임정 규모에 미치하는 구
매자들"에게는 비밀가격인하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0) 1회의 가격 촉각이 탐지된 확률이 p라면 (1
- p)는 가격인하가 탐지되지 않을 확률이다.
따라서 n명의 구매자에게 가격 촉각을 하는
경우 탐지되지 않을 확률이 p(1-p)n이고, 가격
촉각이 적도로 한반 탐지될 확률은 [1-
(1-p)n]이 되므로 n의 증가에 더불어 탐지될
확률도 증가한다.

저. 고정비용

고정비용 / 연계비용이 비용이 높은 시장
에서는 '과도'(cut-throat)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방지하고, 
해결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가격을 높이기 어렵다. 사실, 그간의 가격쟁의
은 고정비용의 비중이 큰 산업에서 혼히 볼 수 있다. 필요성으로 유의생산비가 생기면
각 사업자는 가격격리수를 통해 판매량을 허용으로써 고정비용의 적절을 달고자 하며,
이는 지속적 가격을 가격까지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쇼핑을 시도할
가망이 많다. 그러나, 과도 경쟁을 유발하는
사용 경제가 바로 쇼핑시의 경쟁의 가격인하
을 늘이는 요소로 되어 담합이 안정적으
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
서 쇼핑이 시도되는 이유는 비록 한정된 기
간만이더라도, 쇼핑이 유지되면 그 이득을 
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쇼핑에 유리한 조건들을 있으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쇼핑은 이 조건들이 갖추어진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성공적으로 또
는 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유의
해야 한다.

 먼저, 임정 거래분야의 모든 경쟁자들간에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져 독점과 동일한
결과를 달성이야, 쇼핑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쇼핑은 일부 사업자들이

127
나 일부 고객들 또는 경쟁의 일부 측면들을 포함하지 않거나, 독점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상을 가져오거나, 또는 간접적 가격전쟁으로 끌어드는 등 불완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경쟁의 경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기업들이 판매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서바이브의 가능성을 알 수 없으며, 우선 기업들은 경쟁의 외부기업(fringe firms)들을 무시하고 서로 협력하여 자기들의 산출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시장占有率를 높이는 데 이익이 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시장에 상업 및 가격의 고정, 전략적 전략, 고객의 가용성, 반응적인 끝에 ‘간단한’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경쟁을 억압하고 이득을 볼 수 있다.

둘째, 담임에 유리한 조건들이 담임의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성공적 담임은 이 조건들 중 일부가 없는 경우라도 맞물릴 수 있다. 예컨대 산업내 기업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 가장 흔히 언급되는 담임 의존조건이지만 이는 여러 조건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효과적 담임에 필요한 공존자수로 많아지면서 집단의 의결, 공존자수의 애로를 이어지며 담임의 성공사례는 도대체 공존자수의 의결이 담임의 성공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공존자수에 따라 담임의 구조를 둘러싼 빈리가 아닌 담임의 구조와 그 범위가 변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담임은 균일한 개념이 아니다. 산업에 따라 담임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다르며 그 결과 담임의 조직의 형태, 행위의 방법, 행위의 목표로 달라진다. 사업조건들이 담임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노골적으로 담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은 경우에는 정기적·공식적 회합이나 의사결정·사령자로 기능하는 어떤 조직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적 조직을 간과하고 이를 통해 담임을 법적화하고 공권력으로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담임에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담임할 필요 없이 ‘의식의 동의’ 또는 ‘해석의 동의’에 상호공존성의 확립을 원칙으로 초래되는 자연스러운 협력에 의거하여 담임의 결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극단적 상황 사이에 담임의 성공을 위해 명시의 공존이 필요하지도 하지만 ‘해석의 동의’에 대한 방해요소들이 존재하여 자연발생적 약속도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에 사업자들이 좀 더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담임에 성공하기는 어려우며, 진화행동(facilitating practices)가 담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담임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3. 寡占의 조정

寡占企業은 자기의 意思決定이 경쟁자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취할 행동에 대한 경쟁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寡占企業들은 相互依存의이며, 이들은 明示의 또는 黙示的 合意를 의하지 않고도 相互依存의 相互認識을 통하여 자기들의 행위를 조정함으로써 담합적 결과를 달성하거나

12) 여기서 ‘默示的’이란 合意에 이르는 方法을 지칭하는 것으로, 黙示的 合意는 口頭나 書面 등에 의한 明示的 合意와는 달리 無言의 同意로 시사되는 合意이다. 따라서 이는 그 정의상 狀況的同義語로부터 추정되어야 한다.

13) 이는 과정기업들이 相互依存의 相互認識에 의거하여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寡占의 相互依存性, 黙示의 談合 등 다양한 용어들이 그 同義語로 쓰이고 있어 논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우리는 狀況的同義語로부터 合意가 추정되는 경우를 黙示의 談合이라 하고, 意識의 談合行爲나 寡占의 相互依存性은 合意가 추정될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促進行為를 통하여 간접한 調整을 이룰 수 있다.

가. 相互依存性에 의한 調整

寡占企業들은 寡占의 相互依存性만으로 또는 순수한 意識的 同調行爲(conscious parallelism)에 의해 자기들의 행위를 긴밀히 조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談合의 結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寡占企業은 경쟁자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獨立的으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이 자기 행위에 대한 경쟁자들의 反應에 대한 예상에 달려 있다는 의미에서 相互依存의이며, 相互依存의 行爲는 合意나 共謀와 유사한 무정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寡占企業은 價格를 인하하거나 가격인상을 하지 않으므로써 利潤을 增加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경쟁자들의 반응을 예상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寡占의 相互依存性에 의한 調整의 法律적 중요성과 競爭政策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論者에 따라 다르다. Posner는 相互依存性에 의한 調整을 黙示的 談合이라 지칭하면서 과정기업들의 상호의존성은 불가피하지만 “산출량을 제한하고 경쟁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黙示의 合意는…불가피하지 않으며…반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 寡占의 調整을 共同行為의 한 형태로 취급하여 그가 경쟁적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行為와 成果의 증거에 기초해서
違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競爭政策의 실질적 목적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카르텔가격이므로 담합적 결과의 달성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談合施行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寡占企業들이 순수한 同調行為 또는 단순한 相互依存性만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긴밀히 調整하여 지속적으로 談合의 結果를 달성하기는 어려다는 견해도 많다. 예를 들어, Hay (1982)는 순수한 同調行為를 통해 독점적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高集中市場에서도 競争은 매우 어렵게 그리고 명시적 또는 목시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구성원들의 의도적 노력의 결과로서만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需要와 費用條件의 변화, 進入·退出 등 각 기업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外生의 變化들이 일어나는 장기에서 있어서 寡占企業들이 相互依存性만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긴밀히 調整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 

17) 寡占企業들간의 긴밀한 調整이 同調行為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超競争的 價格을 부과하면 이이 중대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이지

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각 기업이 기대되는 적절한 行動의 制限이 각 자의 결정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제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欺瞞誘因은 情報가 불완전하거나 경쟁자들의 반응에 흠차가 있는 경우에 커지므로 欺瞞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순수한 同調行為만으로 긴밀한 調整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자들간의 어떤 理解나 合意 또는 調整을 촉진하는 行為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나. 促進行為에 의한 調整

寡占的 調整은 促進行為와 더불은 意識的 同調行為로 달성될 수 있다. 談合에 유리한 建造的 條件들을 갖춘 시장에서도 사업자들이 合意에 이르고 그施行을 확보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障碍物들이 있는 경우가 훼하 다. 예컨대 경쟁자들이 價格情報를 얻기 어려운 경우나 경쟁자들간의 운송비 차이가 큰 경우에는 談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促進行為로 경쟁자들간의 不確定性 을 줄이거나 조정된 전략으로부터의 逸脫誘因을 감소시킴으로써 寡占의 調整을 촉진하는 행위로서, 

19) 전반적으로 談合에 有利하 나 事業者들이 담합의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市場에서 생길 가능성이 많으며 사업자들간의 合意에 의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合意 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더 훼하다.
(1) 價格引上的事前公包： 價格引上的事前公包是 價格先導を 拭고 안전하게 해준으로써 談合을 촉진할 수 있다. 先導企業이 價格引上的計画を 공표하면 그 경쟁자들은 스스로의 價格公包로 대응하여 압박적으로 가격인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쟁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先導企業은 가격인상계획을 철회하여 價格先導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업자들이 公共演說 등을 통해 市場状況과 展望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도 자기의 생각을 경쟁자들에게 알리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0)

(2) 價格保護條項：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기의 最低販賣価格을 보장해 주는 最恵顧客條項(most-favored-customer clause)이나 市場 最低販賣価格을 보장해 주는 競爭對應條項(meeting-competition clause) 등의 價格保護條項은 판매자의 價格割引誘因을 감소시킴으로써 黙示의 價格調整을 촉진할 수 있다. 과정기업들의 경쟁은 보통 選別的 價格引下的 形態를 취한다. MFC條項을 채택한 판매자는 어떠한 가격할인도 모든 最恵顧客들에게 적용해야 하므로 이는 顧客의 '특별대우' 요구를 저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談合價格으로부터의 逸脱의費用을 크게 높여 選別的 價格割引을 처벌・계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MFC條項은 가격할인행위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 談合逸脱行為의 探知時差를 줄인다. 21)

(3) 引渡價格策定： 購비용에 대한 運送費의 비중이 크고 事業者들이 지역적으로 分散되어 있어 運送費의 차이가 크다면 談合이 유지되기 어렵다. 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단위로 單一引渡價格을 채정하거나 共通지점으로부터 運送費를 計上하 는 基點價格策定方式(basing point pricing system)을 채택하여 판매자의 立地에 따른 運送費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談合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이 價格策定方式는 地域의 異質性을 제거함으로써 판매자들이 合意해야 할 價格의 數値を 增やる 逸脱行為의 便が 있을 단순화함으로써 價格調整을 有用하게 하 는 것이다.

(4) 價格策定便覽： 價格策定便覽은 사업자가 既知의 要素들로부터 자기가 제시할 價格을 쉽게 도출하는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價格策定を 便覽로서의 要素들은 非常관의 간단한 價格表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된다. 사업자들은 價格策定便覽을 고객과 경쟁자들에 게 보내거나 公開함으로써 自己의 가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5) 排除의行為： 이는 競争者들의 進入・擴張을 저지하기 위한 單獨의行為로서, 특히 垂直統合과 排他的 去來, 連繫販売, 再販売価格維持, 市場・顧客制限 등의 垂直的制限이 모든 주요 企業들에 의해 행해지
는 경우에 경쟁자들에 대한 배제 효과를 의심할 수 있다. 22)
(6) 談合要請: 談合要請 (invitations to collude)은 사업가와 그 경쟁자들에 대해, 제품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경쟁업계를 훼손하여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경쟁업계의 복복으로서 사업가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경쟁업계를 훼손하여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促進行為는 談合이 어려웠을 시장에서 사업가들의 행위에 관한 不確実性이나 逸脱誘因을 줄여, 發示의 調整의 가망성과 완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유익한 효과를 기질 수도 있다. 예컨대, 가격의 시가공시는, 가격의 변동을 미리 알려주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들 사업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MFI 상권은 구매자들의 가격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이 축소될 수 있다.

Ⅲ. 談合의 實證分析

1. 談合規制制度

현재, 公正去違法은, 事業家간의 不當한 共同行行為 ‘契約·協定·決議’ 등의 방법으로 일정 거래분야에서 競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8개 法令의 违法行為를 할 것을 競争‘合意’하는 것을 违法行為로 규정하고 있다. 23) 또한, 事業家들이 競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明示의 인 合意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競争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여, 그동안의 신고도 경계가 없더라고도, 의형직 行為의 一致로부터 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談合規制制度는 3次에 걸친 法改正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추구하고 있다. 1980년의 公正去違法은, 競争行行為를 驗證制를 실시하여 미등록, 공동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第1次改正法律(1986년 12월)은, 驗證制를 認可制으로 바꾸어 부당한 行為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競争行行為에 대한 推定規定과, 課徵金賦課制度 등을 도입하였다.
제32 제2次 法改正時(1990년 1월)에는 과정규제제도가 事业者團體의 共同行為 參加事業者들로 확대되었으며, 合意의 實行이 부당한 共同行為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오던 것이 현행의 第3次 改正法律(1991년 12월)에서는 合意만으로 부 당한 共同行為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가.適用除外

公正去來法은 “産業合理化, 研究・技術 開發, 不況克服, 産業構造의 報整, 中小企業 의 競争力向上 또는 去來條件 合理化”를 위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認可한 共同行為를 예 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24) 다른 法律或 者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따라 행하는 違當行 善, 無體財産權行使行為, 일정 組合의 행위 등에 대하여 法適用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公正去來의 認可를 받은 共同行為로는 10개 벌브 製造業者간의 共同行為 1件과 한국항공화물협회 등 6개事業者團體의 경쟁제한行為 6件이 있다. 1986년 8월부터 認可되어 온 벌브 제조업자들의 共同行為는 생산품목 産業區와 生産物量配定을 통해 유형설비 業務품들 높이고 원자재를 共同行為로써 原價值를 절감하여 産業合理 化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5) 事業者團體의 競争制限行為 6件은 모두 1981 〜82년중에 認可된 것으로 예방等 사유, 화물취급수수료, 선박관련 서비스요금의 決定에 관한 것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競争制限行為들에 ‘法 命令에 따른 正當行為’로 適用除外되어 합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共同行為 註明制 在 실시되었던 1981〜86년에 註明・認可된 138件의 業者團體 競争制限行為 가운데 中小企業協同組合法等 特別法에 근거한 競争制限行為가 128件에 이르고 있었으며, 26) 공정거래위원회의 1991년 조사를 보면 경 善제한行為 中小企業구제 및 共同行為 근거법령이 119개에 달하고 있고 이 중 35개 法律에 44件의 共同行為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公正去來法은 競争制限의 法令의 도입과 行 善行為를 역제한다는 의도에서 競争制限事 項을 담은 法令을 制定・改正하거나 命令・處分・承認 등을 하려 할 때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하며, 그를 명령・ 처분・承認 등은 이를 通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競争制限事 項을 담은 法令들 중에 公正去來委員會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條文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工業發展法 등 극히 少數에 불과하 며, 실제로 경쟁제한적 法令制定・處分 등

24) 1986년 6월에 事業者 단체의 違同行為類型을 例示되어 주는「事業者團體活動指針」이 제정되 었다.
25) 研究・技術開発은 第3次 法改正時에 추가되 었다.
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문 설정이다.

나. 是正・制裁措置와 損害賠償

公正去來委員會는 違法行爲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常行 行為의 中止, 違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으며,28) 談合事業者들에 대하여 共同行為 實行期間 買出額의 1% 내에서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談合事業者が 正公去來委員會의 고발로 公訴되 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正公去來法 違反行爲의 과해자는 同法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 損害賠償請求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있으며, 課徵金 納付事業者が 損害賠償을 한 경우 正公去來委員會는 그 사업자에게 賠償額 상당금액을 還給하게 되어 있다.

2. 談合規制實績


課徵金賦課事例는 1988년의 精油6社 販賣 物量制限事件과 1991년의 7개 바나나 수입 업체 價格談合事件 등 2件에 불과하고,30) 1991년에 傳統出版者 등 2개 出版社의 是正命令 불이행 행위를 告發한 것이 共同行為와 관련한 유일한 告發事例이다.31)

是正措置된 共同行為의 類型을 살펴보면(表 2), 價格談合이 43件(47.3%)으로 가장 많아 價格固定共謀가 談合의 優先적 형태임을 알 수 있다. 去來地域・相對方制限은 16件(17.6%), 数量制限은 15件(16.5%)에 이르고 있고, 去來條件談合과 商品種類・規格制限이 市場 조절된 경우도 각기 9件과 6件이 있으나 設備制限의 規制實績은 없다.

事業者團體禁止行爲事件은 共同行為事件의 2배가 넘는 123件이며, 이 가운데 是正
表 1 不當行為的類型別

<table>
<thead>
<tr>
<th></th>
<th>81</th>
<th>82</th>
<th>83</th>
<th>84</th>
<th>85</th>
<th>86</th>
<th>87</th>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告發</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謀詐金賦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1</td>
<td>2</td>
</tr>
<tr>
<td>是正 命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d>4</td>
<td>4</td>
<td>7</td>
<td>4</td>
</tr>
<tr>
<td>是正 勸告</td>
<td>-</td>
<td>-</td>
<td>-</td>
<td>-</td>
<td>5</td>
<td>8</td>
<td>4</td>
<td>5</td>
<td>4</td>
<td>-</td>
<td>1</td>
<td>2</td>
<td>-</td>
</tr>
<tr>
<td>警告</td>
<td>-</td>
<td>-</td>
<td>-</td>
<td>2</td>
<td>3</td>
<td>1</td>
<td>-</td>
<td>8</td>
<td>7</td>
<td>7</td>
<td>9</td>
<td>5</td>
<td>4</td>
</tr>
<tr>
<td>棄却・其他</td>
<td>1</td>
<td>2</td>
<td>2</td>
<td>9</td>
<td>8</td>
<td>7</td>
<td>3</td>
<td>1</td>
<td>7</td>
<td>12</td>
<td>6</td>
<td>3</td>
<td>61</td>
</tr>
</tbody>
</table>

注：謀詐金賦課制度是第1次法改正時(1986.12)導入的。
資料：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第1卷～12卷)：「公正去來年報」(1992)。

表 2 不當行為的類型別

<table>
<thead>
<tr>
<th></th>
<th>81～83</th>
<th>84</th>
<th>85</th>
<th>86</th>
<th>87</th>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價格規定・維持・变更</td>
<td>-</td>
<td>5</td>
<td>6</td>
<td>4</td>
<td>5</td>
<td>5</td>
<td>3</td>
<td>3</td>
<td>9</td>
<td>3</td>
<td>43</td>
</tr>
<tr>
<td>去來條件規定</td>
<td>-</td>
<td>1</td>
<td>-</td>
<td>1</td>
<td>1</td>
<td>2</td>
<td>1</td>
<td>2</td>
<td>1</td>
<td>-</td>
<td>9</td>
</tr>
<tr>
<td>生產・出庫・販賣制限</td>
<td>-</td>
<td>1</td>
<td>3</td>
<td>3</td>
<td>1</td>
<td>4</td>
<td>1</td>
<td>2</td>
<td>-</td>
<td>-</td>
<td>15</td>
</tr>
<tr>
<td>去來地域・相對方制限</td>
<td>-</td>
<td>1</td>
<td>4</td>
<td>1</td>
<td>2</td>
<td>3</td>
<td>1</td>
<td>3</td>
<td>1</td>
<td>-</td>
<td>16</td>
</tr>
<tr>
<td>設備新增設・裝備導入制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商品種類・規格制限</td>
<td>-</td>
<td>2</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營業共同遂行・管理同社</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他事業者・事業活動制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td>
<td>計</td>
<td>-</td>
<td>10</td>
<td>13</td>
<td>11</td>
<td>9</td>
<td>14</td>
<td>7</td>
<td>12</td>
<td>11</td>
<td>4</td>
</tr>
</tbody>
</table>

注：1件 事件が2件 이상의 違反類型에 該當될 수 있음。
資料：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第1卷～12卷)에서 작성。

命案이 92件으로 전체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도 共同行為事件보다 철
선 높았다(表 3). 이는 事業者團體的 競爭
制限行為が 比較多いが 事業者團體禁
止行為의 認知・立証이 事業者間 談合行為
보다 쉽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殘念

32) 韓国石油ガス流通協会 釜山支部事件(1982년)
    事件の 蝟 6千新元、1991年的大韓石油
    與の 34件に 事業者同士の 共同行為 が
    出現。緊急後、事業者同士の 長期・短
    期の 事件を通じて、釜山市支部 事件は
    起訴猶豫を 堅決されていた、司法追
    適3件については 事業者同士の 事件に
    少額の 失期金が 付加されている。

135
〈표 3〉 事業者個體禁止行爲의 措置類型別 事正實績

<table>
<thead>
<tr>
<th></th>
<th>81</th>
<th>82</th>
<th>83</th>
<th>84</th>
<th>85</th>
<th>86</th>
<th>87</th>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告發</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3</td>
<td>-</td>
<td>-</td>
<td>6</td>
</tr>
<tr>
<td>課徵金賦課</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請正命令</td>
<td>4</td>
<td>4</td>
<td>4</td>
<td>2</td>
<td>3</td>
<td>17</td>
<td>12</td>
<td>12</td>
<td>5</td>
<td>4</td>
<td>12</td>
<td>13</td>
<td>92</td>
</tr>
<tr>
<td>請正勸告</td>
<td>1</td>
<td>4</td>
<td>1</td>
<td>1</td>
<td>3</td>
<td>11</td>
<td>1</td>
<td>3</td>
<td>1</td>
<td>4</td>
<td>1</td>
<td>-</td>
<td>31</td>
</tr>
<tr>
<td>警告</td>
<td>-</td>
<td>-</td>
<td>6</td>
<td>2</td>
<td>2</td>
<td>5</td>
<td>3</td>
<td>18</td>
<td>12</td>
<td>12</td>
<td>15</td>
<td>32</td>
<td>107</td>
</tr>
<tr>
<td>應變・其他</td>
<td>2</td>
<td>3</td>
<td>5</td>
<td>5</td>
<td>8</td>
<td>11</td>
<td>9</td>
<td>15</td>
<td>6</td>
<td>9</td>
<td>16</td>
<td>6</td>
<td>95</td>
</tr>
</tbody>
</table>

注: 課績金賦課制度於第2次 法改正時(1990. 1) 延入되었음.

是正措置된 事業者個體禁止行爲의 類型을 살펴보면〈表 4〉, 부당한 共同行為가 88件으로 전체의 약 48%를 점하고 있고, 構成事業者 事業活動制限이 41件, 不公正去來行爲를 하게 한 경우가 37件, 事業者數 制限은 16件에 이르고 있다. 事業者個體의 共同行為類型으로는 價格談合이 62件으로 주 중을 이루고 있고, 去來地域・相對方制限과 數量制限으로도 많았으며〈表 5〉, 事業者個體의 不公正去來行為로는 보이콧과 再販賣價格維持(RPM)가 많았다〈表 6〉.

1982~92년에 다루어진 153件의 共同行為事件 가운데 42件(27.5%)이, 그리고 325件의 事業者個體禁止行為事件 중에 107件 (32.9%)이 警告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건들이 警告로 종결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違法行為가 中斷 또는 自進是正되어 是正措置의 大相이 소멸되었기

나, 영세사업자들의 共同行為로 競爭의 實質的 制限性이 미미하였거나, 違法行為의 중기가 미흡하여 警告措置가 취해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 談合規制實績의 分析

가. 違反行為의 類型

〈表 7〉은 43件의 價格談合事件에서 합계是正措置된 行為類型을 정리한 것이다. 價格談合과 더불어 數量制限이 쓰인 경우가 13件(30.2%), 去來地域・相對方制限이 이 루어진 경우는 12件(27.9%)이었으며, 價格談合만이 이루어진 경우는 19件(44.2%)이었다. 반면, 15件의 數量談合事件 가운데 數量制限만이 이루어진 경우는 2件뿐이며, 價格談合이 합계是正措置된 경우가 13件 (86.7%)이나 된다〈表 8〉. 또한 16件의 去來地域・相對方制限事件 중에서 去來地域・相對方制限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회 및 서울지역 22개지사 사건(1991년)에서

는 각각 총 600만원의 罰金刑이 내려졌다.
### 表 4

<table>
<thead>
<tr>
<th></th>
<th>81</th>
<th>82</th>
<th>83</th>
<th>84</th>
<th>85</th>
<th>86</th>
<th>87</th>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不當한 共同行為</td>
<td>5</td>
<td>8</td>
<td>3</td>
<td>2</td>
<td>5</td>
<td>20</td>
<td>7</td>
<td>9</td>
<td>2</td>
<td>7</td>
<td>9</td>
<td>11</td>
<td>88</td>
</tr>
<tr>
<td>事業者數 制限</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d>3</td>
<td>3</td>
<td>5</td>
<td>2</td>
<td>-</td>
<td>-</td>
<td>-</td>
<td>16</td>
</tr>
<tr>
<td>構成員 事業活動制限</td>
<td>-</td>
<td>4</td>
<td>-</td>
<td>-</td>
<td>-</td>
<td>3</td>
<td>13</td>
<td>6</td>
<td>4</td>
<td>1</td>
<td>4</td>
<td>3</td>
<td>41</td>
</tr>
<tr>
<td>不公正去來行行為強制</td>
<td>-</td>
<td>2</td>
<td>2</td>
<td>1</td>
<td>1</td>
<td>6</td>
<td>7</td>
<td>8</td>
<td>2</td>
<td>-</td>
<td>6</td>
<td>2</td>
<td>37</td>
</tr>
<tr>
<td>不當表示・廣告</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計</td>
<td>5</td>
<td>14</td>
<td>7</td>
<td>3</td>
<td>9</td>
<td>42</td>
<td>23</td>
<td>26</td>
<td>8</td>
<td>11</td>
<td>18</td>
<td>17</td>
<td>183</td>
</tr>
</tbody>
</table>

**註:** 1개 事件이 2개 이상의 違反類型에 該當될 수 있음.

**資料:** 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第1巻~12巻)에서 작성.

### 表 5

<table>
<thead>
<tr>
<th></th>
<th>81</th>
<th>82</th>
<th>83</th>
<th>84</th>
<th>85</th>
<th>86</th>
<th>87</th>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價格決定・維持・變更</td>
<td>4</td>
<td>5</td>
<td>3</td>
<td>1</td>
<td>3</td>
<td>12</td>
<td>5</td>
<td>8</td>
<td>2</td>
<td>3</td>
<td>8</td>
<td>8</td>
<td>62</td>
</tr>
<tr>
<td>去來條件決定</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r>
<tr>
<td>生産・出庫・販売制限</td>
<td>1</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去來地域・相對方制限</td>
<td>1</td>
<td>2</td>
<td>1</td>
<td>-</td>
<td>1</td>
<td>4</td>
<td>1</td>
<td>1</td>
<td>1</td>
<td>1</td>
<td>-</td>
<td>2</td>
<td>15</td>
</tr>
<tr>
<td>設備新增設・裝備導入制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1</td>
<td>-</td>
<td>2</td>
</tr>
<tr>
<td>商品種類・規格制限</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營業共同運行・管理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他事業者 事業活動制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3</td>
<td>4</td>
</tr>
<tr>
<td>計</td>
<td>6</td>
<td>10</td>
<td>5</td>
<td>1</td>
<td>5</td>
<td>17</td>
<td>7</td>
<td>10</td>
<td>3</td>
<td>6</td>
<td>8</td>
<td>15</td>
<td>93</td>
</tr>
</tbody>
</table>

**註:** 1개 事件이 2개 이상의 違反類型에 該當될 수 있음.

**資料:** 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第1巻~12巻)에서 작성.

### 表 6

<table>
<thead>
<tr>
<th></th>
<th>81</th>
<th>82</th>
<th>83</th>
<th>84</th>
<th>85</th>
<th>86</th>
<th>87</th>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RPM</td>
<td>-</td>
<td>-</td>
<td>-</td>
<td>1</td>
<td>1</td>
<td>1</td>
<td>3</td>
<td>3</td>
<td>-</td>
<td>-</td>
<td>1</td>
<td>-</td>
<td>10</td>
</tr>
<tr>
<td>보 이 못</td>
<td>-</td>
<td>2</td>
<td>2</td>
<td>-</td>
<td>1</td>
<td>6</td>
<td>5</td>
<td>5</td>
<td>2</td>
<td>-</td>
<td>1</td>
<td>-</td>
<td>24</td>
</tr>
<tr>
<td>까위실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r>
<tr>
<td>景品提供</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2</td>
<td>3</td>
</tr>
<tr>
<td>其他</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計</td>
<td>2</td>
<td>2</td>
<td>1</td>
<td>2</td>
<td>7</td>
<td>9</td>
<td>9</td>
<td>2</td>
<td>-</td>
<td>4</td>
<td>2</td>
<td>-</td>
<td>40</td>
</tr>
</tbody>
</table>

**註:** 1개 事件이 2개 이상의 違反類型에 該當될 수 있음.

**資料:** 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第1巻~12巻)에서 작성.
〈표 7〉 價格談合事件(43件)에서 並行된 共同行為

<table>
<thead>
<tr>
<th>並行된 共同行為</th>
<th>無</th>
<th>去來條件決定</th>
<th>生產・出庫・販賣制限</th>
<th>去來地域・相對方制限</th>
<th>商品種類・規格制限</th>
<th>營業共同遂行會社</th>
</tr>
</thead>
<tbody>
<tr>
<td>事件數</td>
<td>19</td>
<td>7</td>
<td>13</td>
<td>12</td>
<td>5</td>
<td>1</td>
</tr>
</tbody>
</table>

資料：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에서 작성.

〈표 8〉 生産・出庫・販賣制限事件(15件)에서 並行된 共同行為

<table>
<thead>
<tr>
<th>並行된 共同行為</th>
<th>無</th>
<th>價格決定・維持・變更</th>
<th>去來條件決定</th>
<th>去來地域・相對方制限</th>
<th>商品種類・規格制限</th>
<th>營業共同遂行會社</th>
</tr>
</thead>
<tbody>
<tr>
<td>事件數</td>
<td>2</td>
<td>13</td>
<td>2</td>
<td>7</td>
<td>4</td>
<td>1</td>
</tr>
</tbody>
</table>

資料：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에서 작성.

〈表 9〉 去來地域・相對方制限事件(16件)에서 並行된 共同行為

<table>
<thead>
<tr>
<th>並行된 共同行為</th>
<th>無</th>
<th>價格決定・維持・變更</th>
<th>去來條件決定</th>
<th>生產・出庫・販賣制限</th>
<th>商品種類・規格制限</th>
<th>營業共同遂行會社</th>
</tr>
</thead>
<tbody>
<tr>
<td>事件數</td>
<td>2</td>
<td>12</td>
<td>4</td>
<td>7</td>
<td>2</td>
<td>-</td>
</tr>
</tbody>
</table>

資料：公正去來委員會,『審決集』에서 작성.

2件에 불과하였고, 價格談合이 함께 是正措置된 경우가 12件(75%), 數量談合이 병행된 경우는 7件(43.75%)이었다(表 9). 이는 數量制限이나 去來地域・相對方制限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價格談合의 補完手段으로 쓰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認知方法

不當한 共同行為와 事業者團體禁止行行為의 認知方法別 分布를 살펴보면(表 10) 다 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申告가 가장 중요한 認知方法이었으며, 特히 事業者團體禁止行行為의 경우에 그 비중이 높았다. 事業者間 共同行為의 경우, 申告로 認知된 案件이 24件(48%), 職權認知된 案件이 19件(38%), 新聞報道・廣告를 통해 認知된 案件는 7件(14%)이었다. 반면 事業者團體禁止行行為의 경우에는 전체의 약 2/3에 달하는 80件이 申告로 認知되었고, 32件(26.3%)은 職權認知되었으며, 新聞報道・廣告를 통한 認知는 3件(2.5%)에 불과
(表 10) 不當한 共同行為 및事業者團體禁止行為의認知方法

(단위 : 件, %)

<table>
<thead>
<tr>
<th></th>
<th>不當한 共同行為</th>
<th>事業者團體共同行為</th>
<th>事業者團體禁止行為</th>
</tr>
</thead>
<tbody>
<tr>
<td></td>
<td>事件數</td>
<td>比率</td>
<td>事件數</td>
</tr>
<tr>
<td>申告</td>
<td>24</td>
<td>48.0</td>
<td>41</td>
</tr>
<tr>
<td>顧客</td>
<td>13</td>
<td>26.0</td>
<td>13</td>
</tr>
<tr>
<td>供給者</td>
<td>1</td>
<td>2.0</td>
<td>1</td>
</tr>
<tr>
<td>競争者</td>
<td>2</td>
<td>4.0</td>
<td>8</td>
</tr>
<tr>
<td>構成事業者</td>
<td>1</td>
<td>2.0</td>
<td>9</td>
</tr>
<tr>
<td>他政府機関</td>
<td>2</td>
<td>4.0</td>
<td>-</td>
</tr>
<tr>
<td>匿名・其他</td>
<td>5</td>
<td>10.0</td>
<td>10</td>
</tr>
<tr>
<td>法令質疑・廉貪申告</td>
<td>-</td>
<td>-</td>
<td>7</td>
</tr>
<tr>
<td>新聞報道・廣告</td>
<td>7</td>
<td>14.0</td>
<td>1</td>
</tr>
<tr>
<td>職權認知</td>
<td>19</td>
<td>38.0</td>
<td>25</td>
</tr>
<tr>
<td>計</td>
<td>50</td>
<td>100.0</td>
<td>74</td>
</tr>
</tbody>
</table>

資料 : 審査報告書에서作成.

하였다.

(2) 事業者間 共同行為의 情況에는 購買者가, 事業者團體禁止行為의 情況에는 봉쇄

분야의 事業者(競爭者)가 가장 중요한 申告者였다. 事業者間 共同行為의 情況 顧客申

告事件은 13件으로서 전체의 26%(申告事件의 54.2%)에 이르고 있으나, 顧客이 申告한

事業者團體禁止行行為는 17件으로 전체의 13.9%(申告事件의 21.3%)에 불과하였으며 이

中 13件은 事業者團體共同行為를 申告한 것

이다. 이는 共同行為의 被害購買者들이 事業

者들로서 그들의 申告誘因이 강하하다

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需

要業界나 一部 大量需要者の 반발로 談合이

成功하지 못한 情况와 大量需要者에 대해서

만은 경쟁적으로 관계하는 情况도 있었

다. 競争者와 構成事業者가 申告한 事業者

間 共同行為는 각각 2件(4%)과 1件(2%)뿐

이나, 事業者團體共同行為의 情況에는 8件

(10.8%)과 9件(12.2%)이었고, 事業者團體

禁止行行為의 情況에는 26件(21.3%)과 10件

(8.2%)이 나타났다. 이는 事業者間의 申告

事件이 事業者間 共同行為보다 훨씬 많은 事

業者들의 내포하고 있어 그들의 이익이 상층

되는 情况이 많기 때문에인 것으로 보인다.

(3) 事業者團體共同行為의 情況, 事業者

團體가 價格協定 等의談合行為를 하면서도

違法行을 알지 못하고 惡意 協定價 위반

事業者が 投資 로 去來秩序를 분란시킨다며

公正去來當局에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法令

質疑를 하여 認知된 情況가 7件이나 있었
다. 이런 경우는 대개 소규모의 지역 생업체의 경우에만 발생하며, 1986년의 한
국경상공동협회 구미시선산지부의 경쟁
제한행위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경영자와 소규모 제조업 등 182
개 업체로 구성된 선산지부가 1982년 2월
부터 그 자체로 가격을 동결하여 1986년에 한
구성사업자인 가격을 동결하여 위반행위를 
정리한 것이다.
(1) 공항행은 제조업소 등에 집중
되어 있는 반면, 공항행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총 50건의 사
건 행 행사에 공항행은 약 3/4에 해당하는
37건이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공
항행 행 사례는 9건(18%)으로 모두 공항
업 사례들의 통합행이었다. 공항행 사례의 
공항성의 경우 공항행사 건은 34건으로, 실용적의 
28%에 불과하고, 공항행 사례건이 59건 
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 사례는 23건에 이르고 있다.
(2) 공항행 사례는 공항행의 시장포괄을 살
펴보면, 공항행의 시장포괄은 공항행가 36건으

<table>
<thead>
<tr>
<th>(表 11)</th>
<th>不當한 공항행 및 사기업단체 공항행의 산업별 분포와 시장포괄</th>
</tr>
</thead>
<tbody>
<tr>
<td></td>
<td>不當한 공항행</td>
</tr>
<tr>
<td></td>
<td>事件數(%)</td>
</tr>
<tr>
<td></td>
<td>N</td>
</tr>
<tr>
<td>製造業</td>
<td>37(74.0)</td>
</tr>
<tr>
<td>流通業</td>
<td>9(18.0)</td>
</tr>
<tr>
<td>食品業</td>
<td>16(13.1)</td>
</tr>
<tr>
<td>消費品</td>
<td>1(0.8)</td>
</tr>
<tr>
<td>宿泊・飲食業</td>
<td>2(1.6)</td>
</tr>
<tr>
<td>運輸・倉庫・通信業</td>
<td>3(2.5)</td>
</tr>
<tr>
<td>金融・保険業</td>
<td>1(0.8)</td>
</tr>
<tr>
<td>貨物・事業サービス業</td>
<td>5(4.1)</td>
</tr>
<tr>
<td>社會・個人服務業</td>
<td>18(14.6)</td>
</tr>
<tr>
<td>計</td>
<td>50</td>
</tr>
<tr>
<td>(100.0)</td>
<td>(72.0)</td>
</tr>
</tbody>
</table>

* : N은 전체 시장, L은 시장포괄임.
資料：公正去來委員會，『審議集』(第1卷～12卷)에서 작성.
로 전체의 72%에 이르고 있으나, 총 122件의
사업자(3차) 건본 전국시장을 대상
으로 한 경우는 34件으로 27.9%에 불과하
였고, 나머지 88件(72.1%)은 지역시장에서
의 위법행위였다. 특히 지역시장에서의 수
통업자(5차)의 원인 행위가 54件에 이르고 있
는데, 그 대부분은 書籍(33) 樂師(34) 및
슈퍼마켓(35)에 의한 것이었다.

(3) 사업자간 공행동 및 사업자(3차)의
行為의 관련제도는 대체적으로 보다 비
교적 '단순'하고 차별화가 어려으며 금속한
기술변화나 제품혁신이 없었던 상품들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경
우 제조업부여에서 事件이 가장 많았던 곳
을 분야는 데미콘(4차)이었고, 창작음료, 백
색소료, 영어교재에서도 각각 2件의 事件
이 있었으며, 통상업에서는 음료 및 전문
사건이 4件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3차) 事件
의 경우 제조업부여에서는 中小(36) 제조업者

33) 書籍(33)은 모두 16件으로, 재판서로
獲荷을 위해 사업자(33) 및 그 사업자(33)의 事件
活動을 제한하거나 부정부의행을 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4) 樂師(34)은 모두 11件으로, 地域樂師(34)가
構成사업자에게 基準価格과 휴일의 중수
를 강요하거나 特定事業者로부터 회전업업 등
을 위한 착조금을 받기 위하여 그 사업자(34)의
음료 및 전문사건을 規定而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가 많았다.

35) 슈퍼마켓(35)은 모두 13件으로, 地域 슈
퍼마켓(35)가 基準価格과 特定事業者の
제품(주로 乳製品과 冰製類)을 購入하도록
한 행위가 事件과의 相對制限行為로 附正措置된
경우가 많았다.

라. 共謀者들의 市場占有率과 規模

公行行為事件 關聯 事業者들의 市場占有
率 分布와 賣出額 分布가 《表 12》에 정리되
어 있다. 共謀者들의 占有率 合計를 구할
수 있었던 44件의 事件 가운데 37件(87.5%
)에서 점유율이 75%를 넘었으며, 점유율
이 50% 이하인 경우는 3件에 불과하였다.
이는 共謀者들이 집단적으로 市場力을 행사
할 정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야 談合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시장내 모든 사업자들을 포함해야 談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님을 보여주는 것이
다. 共謀者數와 市場內 事業者數를 비교해
보면 모든 事業者들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
적 共謀가 많으며, 특히 전국시장에서의 談
合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市場 共同行為事件의 경우 平均 共謀者數와
事業者數는 각각 6.8과 22.1로 談合參加率
이 평균 30% 정도이나, 지역시장 共同行為
事件에서는 평균 共謀者數가 15.1, 事業者
數가 24.2로 談合參加率이 62.4%에 이르고
〈표 12〉  共同行為事件  共謀者들의  市場占有率 分布

<table>
<thead>
<tr>
<th>市場占有率</th>
<th>全國市場  關聯事件</th>
<th>地域市場  關聯事件</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0~25</td>
<td>1 (2.9)</td>
<td>-</td>
<td>1 (2.3)</td>
</tr>
<tr>
<td>26~50</td>
<td>1 (2.9)</td>
<td>1(10)</td>
<td>2 (4.5)</td>
</tr>
<tr>
<td>51~75</td>
<td>4 (11.8)</td>
<td>-</td>
<td>4 (9.1)</td>
</tr>
<tr>
<td>76~100</td>
<td>28 (82.4)</td>
<td>9(90)</td>
<td>37 (84.1)</td>
</tr>
<tr>
<td>計</td>
<td>34(100)</td>
<td>10(100)</td>
<td>44(100)</td>
</tr>
</tbody>
</table>

資料: 審査報告書에서 作成。

있다. 36) 談合事業者들의 높은 市場점유율을
감안할 때, 이는 전국시장에서 활동하는 企
業들이 共同行為를 構成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규모 外邊企業들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此事系 非共謀事業者들의 役
割을 추측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共同行為를 경쟁자가 분명한 사항이 2件에
불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의
非共謀者들이 先導事業者들의 談合에 대한 위
협이 되기보다는 그들이 제공하는 價格우선
법에서 활동하는 限界企業들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 共謀者數와 共謀期間

共同行為事件의 關聯 事業者數, 共謀期間
(認知時差), 談合施行手段 등에 情報
가 〈表 13〉～〈表 16〉에 정리되어 있어, 談

36) 이는 共謀者數와 市場內 事業者數를 구할 수
있었던 31件의 전국시장 共同行為事件과 11
件의 地域市場 共同行為事件에 대한 것이다.
37) 認知時差가 66개월로 가장 길었던 精油6社 販
売物量制限事件을 제외하면 平均 認知時差는
6.8개월이다.
### 〈표 13〉 不當한 共同行為의 共謀者數와 認知時差

<table>
<thead>
<tr>
<th>共同行為</th>
<th>事件數(%)</th>
<th>共謀者數</th>
<th>共謀期間(月)</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平均</td>
<td>中位</td>
</tr>
<tr>
<td>全體</td>
<td>49(100)</td>
<td>8.3</td>
<td>5</td>
</tr>
<tr>
<td>市場業種</td>
<td></td>
<td></td>
<td></td>
</tr>
<tr>
<td>全國市場</td>
<td>37(75.5)</td>
<td>6.5</td>
<td>5</td>
</tr>
<tr>
<td>地域市場</td>
<td>12(24.5)</td>
<td>14.1</td>
<td>10</td>
</tr>
<tr>
<td>製造業</td>
<td>38(77.6)</td>
<td>6.5</td>
<td>5</td>
</tr>
<tr>
<td>流通業</td>
<td>7(14.3)</td>
<td>14.9</td>
<td>10</td>
</tr>
<tr>
<td>サービス業</td>
<td>4( 8.2)</td>
<td>14.3</td>
<td>10</td>
</tr>
<tr>
<td>事業者同體 또는 協議・施行機構</td>
<td>6(12.2)</td>
<td>22</td>
<td>23</td>
</tr>
<tr>
<td>営業共同管理・遂行1)</td>
<td>8(16.3)</td>
<td>7.3</td>
<td>5</td>
</tr>
<tr>
<td>監視・制裁措置2)</td>
<td>15(30.6)</td>
<td>12.1</td>
<td>8</td>
</tr>
<tr>
<td>入札談合</td>
<td>3( 6.1)</td>
<td>26</td>
<td>28</td>
</tr>
<tr>
<td>行政指導</td>
<td>5(10.2)</td>
<td>4.8</td>
<td>5</td>
</tr>
<tr>
<td>RPM</td>
<td>3( 6.1)</td>
<td>3.7</td>
<td>3</td>
</tr>
<tr>
<td>單純 共同行為3)</td>
<td>22(44.9)</td>
<td>5.1</td>
<td>4</td>
</tr>
<tr>
<td>單純 價格談合4)</td>
<td>16(32.7)</td>
<td>5</td>
<td>4</td>
</tr>
</tbody>
</table>

註：1) 共同行為・販売活動, 同共事業體 設立・運営.
2) 監視, 告發調査, 違約金 公開, 質問, buy-back 等 事後稽査.
3) 共同行為 協議・施行機構, 営業共同管理・遂行, 監視・制裁措置, 入札談合, 行政指導, RPM에 관

### 〈表 14〉 共同行為事件의 共謀者數

<table>
<thead>
<tr>
<th>共謀者數</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15</th>
<th>16~20</th>
<th>21~25</th>
<th>26 이상</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事件數</td>
<td>4</td>
<td>8</td>
<td>9</td>
<td>6</td>
<td>4</td>
<td>1</td>
<td>2</td>
<td>2</td>
<td>4</td>
<td>5</td>
<td>2</td>
<td>-</td>
<td>4</td>
<td>51</td>
</tr>
<tr>
<td>事業者同體</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body>
</table>

註: 1987년의 「大韓社協化學(株)」등 6社의 共同行為事件은 有機顔料 2개와 無機顔料 4개의 共同行為を

### 〈表 15〉 不當한 共同行為事件의 認知時差 分布

<table>
<thead>
<tr>
<th>認知時差</th>
<th>1개월미만</th>
<th>1~6개월</th>
<th>7~12개월</th>
<th>13개월 이상</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事件數</td>
<td>12</td>
<td>17</td>
<td>9</td>
<td>12</td>
<td>50</td>
</tr>
</tbody>
</table>

資料：審査報告書에서 작성.
시차는 공모자수가 6~10인 경우에 그리고 중위: 이적시차는 공모자수는 11~15인 경우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수 공모가 적수 공모보다 적발되기 쉽다는 믿고 정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적 공행행동의 평균 이적시차는 10.7개월로 사업자간 공행행동보다는 길었다.

(3) 공행행동의 경우에 사례적 공행행동과 공행행동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사례적 공행행동의 이적시차가 판단되어 적절히 대응된 경우는 3사항으로 모두 공행행동수는 11을 넘는 사례이거나(표 14), 사업자단계가 판단되었거나, 사례적 공행행동의 수가 6건의 공행행동에서 평균 공행행동수는 전체 평균의 거의 3배인 22개 사업자이다. 이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판단한 사례는 사업자단계나 공행행동의 협의, 시행기구가 없어도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공행행동의 경우에 마련되었던 15사의 공행행동사건의 평균 이적시차는 12.2개월로 전체평균(8개월)보다 길었던 반면 16사의 공행행동사건의 평균 이적시차는 3.1개월에 불과하였다.

비. 중한도

경제리론은 실제시도가 낮은 시장일수록 탐습의 행사는 재료부문 가용사량구조 업계의 무해에 의하여 일신된 것을 시사하지만, 지금까지의 탐습 사례들은 중한도가 높지 않은 경쟁의 시장에 상대적으로 빠른적으로 변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1989년도 제조업부문 가용사량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2,615개 상품시장 중에서 721개(27.6%)가 CR<60%인 경쟁시장으로, 그 나머지는 독일고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탐습이 포함이 않아도 볼 수 있는 독일고시장 (CR<80%)들을 제외하더라도 경쟁사시장의 비중은 35.2%가 된다. 이에 비하여 가용사량구조 중한도를 구할 수 있었던 26개의 전체시장 상황의 사례 중에서 CR<60%인 경우는 11개로 그 비중이 42.3%에 이르고 있다. 사례적 공행행동 사례는 시장에 달성이 드가 사례의 공행행동사건의 전력에 대부분(26%와 72%)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공행행동의 경우에는 해피콘, 두부, 백색수, 착화된 등 중한도가 높지 않은 경쟁의 산업

144
사. 가격固定共謀

전체 43件의 價格談合事件 가운데 담합에 의한 價格引上率을 구할 수 있었던 33개事件의 平均 價格引上率은 18%, 中位 價格引上率은 12.1%(最低 3.4%, 最高 84.2%) 였다. 또한 事業者團體事件 가운데 價格引上率을 구할 수 있었던 17개事件의 平均 價格引上率은 19.1%, 中位 價格引上率은 17.5%였다.

자. 談合行為에 대한 識識과態度

談合事件 被審人들의 意見으로부터 우리는 이들이 제시하는 共同行為의 理由와 共同行為의對 識識을 살펴볼 수 있다. 事業者間 共同行為의 경우, 共同行為가 비용상승이나 수요감소에 대한 自救策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된事件이 14件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등의 適當競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8件, 流通・去來秩序 確立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6件이나 되었다. 또한 違法行為事實 자체를 부인한 경우가 6件, 違法行為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경우가 3件이었으며, 著作權 등 無體財產權의 行事이므로 法適用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가 4件이었다.

事業者團體共同行為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製品이나 서 비스의 品質維持와 安全確保를 위해 談合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6件이나 되었다. 그

런 예로 1986년의 大韓建築士協會 競爭制限行為事件과 1982년의 韓國石油ガス流通協會 및 同協會ガス事業部 釜山支部의 競

爭制限行為事件을 들 수 있다. 大韓建築士協會는 社構事業자의 設計報酬割引 등에 의한 競争을 제한하고 人札參加를 금지한 행

為에 대하여 議正命令을 받았으나, 同協會는 建築士는 事業者が 아니고 人札競争은 建築士의 美観와 質의 저하 및 不良建築物

量産의 原因이라고 주장하면서 異議申請을 하였다. 韓國石油ガス流通協會 가스事業部

釜山支部는 價格維持와 去來相對方分割 등이 大利得間의 適當競争에 따른 가스安全管理

의 소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談合規制實績의 評價

사업자들이 談合을 닦연시하고 事業者間 및 事業者團體의 談合 蓋然性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競爭政策은 談合을 억제하여 市場機能活性化를 통한 經済效率提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談合禁止原則의 확

립과 적용은 談合의 施行費用を 크게 높인다. 談合禁止原則은 事業者들이 공식적 協

議・調整機構를 통해 담합할 수 없고 카르

텔을 조심스럽게 은폐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談合의 적발・譲과가명성을 고려하여 행

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식적

談合施行機構가 없다면 카르텔은 구성원의

欺詐行行為를 닦али·처벌할 능력을 크게 상실

145
거의 모든 합의를 위해 정명제, 단순성의 법정기재를 정하는 작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합의는 불법화될으므로써 성공적으로 합의하기는 어려웠다고 하겠으나, 이것이 합의가 효과적이고 적발, 처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불법한 합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합의를 심판할 것이며, 우리의 경쟁정책이 고수중으로서의 유일한 내지 최고의 경쟁정책을 보강하고자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효과적으로 확인된 합의를 이용할 수 있는 유한의 기술 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합의가 적발, 처벌위험은 이 합의가 적발, 처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불법한 합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합의를 심판할 것이며, 우리의 경쟁정책이 고수중으로서의 유일한 내지 최고의 경쟁정책을 보강하고자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효과적으로 확인된 합의를 이용할 수 있는 유한의 기술 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합의를 위해 정명제, 단순성의 법정기재를 정하는 작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합의는 불법화될으므로써 성공적으로 합의하기는 어려웠다고 하겠으나, 이것이 합의가 효과적이고 적발, 처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불법한 합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합의를 심판할 것이며, 우리의 경쟁정책이 고수중으로서의 유일한 내지 최고의 경쟁정책을 보강하고자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효과적으로 확인된 합의를 이용할 수 있는 유한의 기술 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합의가 적발, 처벌위험은 이 합의가 적발, 처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불법한 합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합의를 심판할 것이며, 우리의 경쟁정책이 고수중으로서의 유일한 내지 최고의 경쟁정책을 보강하고자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효과적으로 확인된 합의를 이용할 수 있는 유한의 기술 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작발될 가망이 커지게 된다. 그리하 여 審決例 標本에는 事業者同體事件과 集中 度가 낮은 시장에서의 界限의 共謀行為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少數的共 謀者들이 관련된 사견에서도 明示的 談合 事件들이 大部分을 차지하게 되어 黙示的 談 合의 實質的 中間性이 의심스러워진다. 談 合事件들이 集中度가 높지 않은 競爭的 市 場에 상대적으로 偏在되어 있으며 각종 協 壽나 組合의 價格固定 등의 같은 談合의 極 限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VI. 政策提案

1. 當然違法原則의 確立

현재 公正去來法은 廣泛한 共同行為의 市 場에 8가지 法定列舉行為로 實行하고 있으 며, 일정 거래분야에서의 競爭的 實質的 制 限 부담을 違法性 目標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경쟁자들간의 合意가 競爭的 實質의 よ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法定列 舉行為에 實質하지 않으면 '부당한' 共同行為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列舉式 規定下에서는 廣告, 마케팅, 研究·開發 등에서의 談合, 사업자간 情報交換, 促進行為의 共同行為 체계 등 많은 경쟁제한적 行為들이 法定列舉行為에 實質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談合行為類型이 다양해지면서 法適用을 교묘히 피하는 共同行為가 증가할 것이나 이를 모두 實行하여 法에 列舉하고 大推해 나가기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談合規制의 確立性 제고를 위해 열거식 규정을 포괄규정으로 바꾸고 告示와 審決을 통해 談合規制의 法理와 法適用 범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現行 法規定은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부당한 共同行為의 實質的 構成要件으로 하고 있으나, ‘競爭의 實質的 制限’은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자유로이 좌우할 수 있는 市場支配力의 形成을 實質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市場支配力은 共同行為者들의 佔有率 合計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38) 共同行為者들의 佔有率이 높아 집단적으로 市場支配力を 형성·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한 共同行為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담합이 違法化되어 있는 상황에서 事業者들이 談合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사 談合하려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談合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事業者들이 자 기들의 市場状況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상정하고 談合의 收益性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競爭的 實質的 制限’을 推定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사업자들의 談合

誘因으로부터 경쟁에 대한 악영향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談合事件에서 競爭의 實質의 制限이라는 立證要件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競爭의 實質의 制限性이 아니라 競爭制限의 ‘不當性’을 共同行為의 違法性 판단 기준으로 하고, 價格固定, 入札操作, 市場分割, 競争者 排除 등 경쟁자들간의 ‘적나라한’ 談合에 대하여 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여야 할을 의미한다. 效率創出을 위한 共同行為는 대개 어떤 형태의 經濟活動의 統合을 내포하므로 적나라한 가격고정이나 시장 분할 등에 대한 當然原則이 效率을 創出하는 共同行為를 금지하게 될 가능은 거의 없다.

1981~92년에 42件의 共同行為事件과 107件의 自主行為事件이 警告処理되었고, 61件의 共同行為事件과 95件의 自主行為事件이 棄却・其他処理되었다. 이 가운데 競争의 實質的 制限性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法定列舉行為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談合에 대한 包括禁止規定과 當然違法原則이 확립되었다면 그 數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2. 制裁措置의 強化와

會社免責制度의 導入

성공적 談合의 期待利益(談合誘因)과 그 擄發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是正勸告・命令 등의 原狀回復措置와 謝過廣告命令만으로는 談合抑制效果를 기대할 수 없다. 談合禁止原則의 實效性과 抑止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談合金을 談合의 擄發確率를 감안한 談合의 預想이득 수준까지 上向調整하여 談合事業者에게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刑事罰을 적극 활용하며 損害賠償請求訴訟 誘因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違法行為의 自主申告者에 대한 賠償制度의 導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制裁措置

課徵金에 대해서는 其 法的 性格에 관하여 많은 論難이 있으나, 競争政策의 觀點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當然的 法定課徵金額과 其 法的 性格이 談合抑制의 측면에서 適正한지的 여부이다.

1981~92년에 是正措置된 價格談合事件의 平均 價格上昇率이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價格固定으로 구매자들이 추가 지불하게 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談合期間 賣出額의 18%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談合에 의한 雷同者損失과 닫함기간중의 구매자 손해액에 대한 利子가 추가되어야 價格談合에 의한 경제적 損失이 된다. 우리가
談合의 적발·처벌확률을 10%라고 가정하면 위험기피, 체계적 적손실액을 10배한 금액이 되며, 독占厚生损失과 구매자 손해액의 이자비용을 무시하더라도法定最高罰金액의 180배에 이르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볼 때,談合実行期間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最高罰金金額은不當利得還収나行政制裁의 어떤측면에서도 그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다. 談合金이 不當利得還収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賣出額의 20% 정도로상향조정되어야 하며, 行政制裁을 통해談合抑止效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상향조정폭은 더 커야 할 것이다. 談合禁止政策을 강력히 시행해온美國의 경우에도, U.S. Sentencing Commission(1987)은 "価格固定에 기인하는 평균적 추가이윤이판매가격의10%로추정된다"고 하면서談合抑止를 위해 그금액의2배내지5배의罰金（販賣額의20〜50%）을談合事業者들에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0) Block & Sidak(1980)은低水準의법집행활동과 강력한經濟의制裁를 결합하는 것이경우에따라 불가능하고대개最適의사결책이되지 못하는 내가지야私의執行에대한파장투자,限界의抑止,위험부담,그리고법집행오류의가능성을제시하고 있다.

41) 懲役刑보다罰金 등의經濟의制裁가더 효율적인談合抑止手段이라는 많은논평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Werden & Simon(1987)은적극적인談合事業者들에게정역형을부과해야하는論議를제시하고 있다.

談合抑止를 위해法執行努力보다도經濟의制裁에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상황은 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현재談合事業者에게부과될 수 있는最高罰金金額은談合執行期間賣出額의1%로상공적談合이확보해낼수있는利得의적은부분에불과하며, 그나마談合金이賦課된事例도2件에지나지않는다. 또한談合事業者は3년이하의징역 그리고/또는2億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으나告発・起訴되는 경우가 드물고,公訴되어도경미한罰金刑만이내려졌을뿐아직까지懲役刑을받은談合事業者は없다. 거의모든談合에대하여是正措置만이취해지고있을뿐,談合事業者が처벌되는것은없는 것이다.

談合行為에대하여懲役刑을규정하는 것은最適의經濟의制裁가대개談合事業者들의支拏能力을획득초과하는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실,談合事業者들은대개最適罰金은 물론法定罰金도지불할능력이없는中規模企業들이기뿐만個人들의지불능력도한정되어있다. 이점을간안할때懲役刑부과는적정한談合抑止效果의확보를위해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⑯

損害賠償請求訴訟은談合事業者들로부터不當한獨占利潤을범탈하고談合企圖을억제하는장치가된다. 이런경우에서損害賠償請求訴訟의誘因을높여談合에대한私的執行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談合에대한2倍損害賠償請求訴訟을허용하는것.
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당국의는 정책금지 확정된 사건으로, 각종 상해 행위를 당하였던 피해자와의 각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배의상해가 발생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이 관련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상해의 상당금액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재정의 절약을 위해, 상해사정을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會社敟免制度

會社敟免制度는 경쟁정책당국이, 허위고가 있고 있는, 불법 행위를, 자동징통한 會社나, 개인에 대하여, 관할의 취급을 하는 것으로, 상호가설하에서, 상호자들의, 공謀조직의, 성립을, 예방하여, 전술의 안정성을, 임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로운, 이는, 문제가 의도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법령이, 이에, 허용한, 제도의, 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울, 법적, 최초의, 자동증명가,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3. 法執行努力의 擴大・強化

談合規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違法行為의, 擬為, 이를, 퇴치하려는, 法據를 확보하는 일이다. 法, 第19조는 '契約・協定・決議' 등의, 방법에 의한 '合意'가, 입증되거나, 추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으나, 談合은, 엽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擬為・立證에, 다양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다.

현재 談合行行為의, 認知는, 주로, 申告과, 訴論報到에, 의존하고 있으며, 事件, 調查活動은, 사업자간의, 聚会이나, 相互連絡의, 증거 또는, 내부서류 등을, 확보하여, 合意를, 立證하려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契約・協定・決議' 등의, 方法으로, 法定, 擬為行行為를, 할 것을, '合意'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法의, 要件에, 기인하는 것이이나, 사업자들이, 談合의, 증거와, 혼적을, 은폐하고, 목시, 적 방법으로, 談合하게 되는, 상황에서, 메모, 相互連絡과, 聚会, 協定価格表 등, 담합의, 직접, 證據를, 확보하여, 사업자들을, 적발・처벌하는, 극히, 어렵다. 사실, 高層集中市場構造 등, 談合에, 유리한, 우리의, 經濟件下에서, 規制実績이, 지조하고, 制裁措置가, 미약한 것은, 違法行行為의, 擬為과, 證據確保 등, 심제적, 法執行活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競爭政策은, 談合行行為를, 認知・立證하는, 효과적, 프로그램과, 대체적, 技法들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 經濟的 分析方法의 活用

談合의, 探知・立證을, 위해, 經濟的, 分析과, 證據를, 이용하는 것은, 談合規制努力의, 有效性, 提高에,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談合의 探知・立證努力에 經濟的 證據가 活
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共謀行爲들，特定
產出量과 價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談
合들이 적발되지 않고 있음을 가망이 많다。
 사업자들의 談合能力은 무엇보도다 集中
度와 진입강벽，기업 및 제품의 동질성 등
市場構造의 要素들에 달려 있다。 따라서 競
爭政策當局이 主要商品市場에 대하여 事業
者數에 規模分布，進入障壁，費用과 需要構
造，製品差別化，價格과 利潤率의 變化，占
有率 變化，販賣 patt，政府規制 등에 관한
資料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談合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거나 談合이 의심되는
市場들을 선별하고 이들에 감시활동을 집중
한다면 정책효과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談合에 유리한 市場構造의 條件
들과 共謀의 特定行為패턴에 관한 經濟
의 知識에 의거하여 特定시기에서도的 價格行
態와 販賣 patt 등이 談合에 의해서만 설명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地域市場 共謀가 많은 분야에서는 談合이
의심되는 지역의 가격을 타지역 가격과 비
교해 보는 것이 法執行에 經濟的 證據를 도
입・이용하는 實際적 方법일 수 있다。 물론
地域간 價格差는 談合 이외의 要素들을 반
영했겠지만 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면
이는 有用한 證據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
대 어떤 地域에서 제품가격이 短期間에
20% 상승한 반면 그 인근지역의 가격은 변
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談
合의 存在를 입증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調
査活動을 개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있
다。 물론 經濟的 分析과 證據의 活用에는
많은 資料市場情報의 수집・처리가 요구되
나 資料處理技術의 발달로 그 작업이 불가
능하거나 비 현실적이지는 않다。

나。 入札操作의 監視・摘発體制 確立

公共調達事業의 规모와 이 分野에서의 談
合의 関連성을 고려할 때，2) 入札操作 등의
違行行為規制는 論算執行의 效率化，市場競
爭의 競争化 및 調達分野의 對外開放 대처
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公共
調達事業の 效率化を 仰ぐ 競争政策當局은
入札操作을 效率적으로 예방・監視・適発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調
達関聯 制度と 法律の 改善努力に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3)

入札談合規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事
業者들의 共謀誘因은 강한 반면 그 피해자
인 公共調達機関의 摘発誘因과 努力는 民間
購買者들에게 의해 미약해서 違行行為의 識知
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調達機関은
入札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共謀의 存在

42) 鐵筋，시멘트，레미콘，아스콘 등 많은 購買物
資들이 談合이 용이한 品目들이며，公共工事
에 있어서도 入札操作이 程行할 보여주는
微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3) 筆算會計法，建設業法，刑法 等에도 入札談合
의 價格競争가 適用되어 있으나 業務的 報酬
者olt는 價格競争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実際로 이 방법들은 價格競争의 基礎式시적
이 거의 존재하지는 않다。
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경쟁政策当局은
入札操作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담당규제의 경험과 전문성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규정을 적극 활
용하여 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政策執行
을 강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경쟁을 장
려할 수 있다.

入札執行官 등 調達擔當者들은 입찰조작
을 감시・관찰・식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
치에 있으며 그들의 調達經驗은 違法行為摘
発을 위한 중요한 情報源이 된다. 따라서
競争政策當局이 이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
하고 入札資料의 체계적 수집・분석프로그램
을 개발・시행한다면 入札操作의 감시・
적발이 크게 촉진될 수 있다. 먼저, 公共調
達機関에 談合 개연성이 높은 市場状況, 違
行行為의 類型 및 其 標識와 證據 등을 종
보하고 入札操作嫌疑 포착을 위한 점검목록
을 제공하여 ‘의심스러운 入札’를 통보하게
하며, 입찰관련 情報資料을 보고하도록 해
서 컴퓨터에 입력・저장한다. 이러한 報告
體制의 확립은 入札操作에 대한 監視의 눈
을 확대하고 入札共謀의 성격과 범위를 드
러내 줄 것이다. 다음, 競争政策當局은 時
系列分析이나 地域間 價格比較 등 입찰자료
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入札制限, 필리러入
札, 輪番制入札, 地域・顧客分割 등 談合을
 나타내 주는 入札 패턴들을 포착하여 違法行
為를 探知・處罰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入札’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정밀조사활동
을 할 수도 있다. 일부 入札行為패턴은 入
札談合 등의 경쟁제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市場
分割約定에 따라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 또
는 구매기관 이외에는 入札하지 않는 경우
에 當局은 入札資料의 수집・분석프로그램
을 통해 市場分割談合을 식별해 네울 수 있
을 것이다.

入札操作은 剃毛수수, 공갈, 허위진술,
위중, 증거인멸 등 여타 위법행위들을 내포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公正去來法에 의
거한 入札談合規制와 여타 위법행위에 대한
法執行이 유기적으로 협조・연계되도록 관
련 정부기관들간에 業務連絡프로그램을 실
치하는 것이 입찰관련 위법행위의 認知, 證
據確保, 處罰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推定條項의 積極的 活用

지금까지 摘発된 談合은 價格固定, 數量
制限, 市域・顧客分割 등의 경쟁제한적 행
위에 관한 明示의 合意를 내포하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부당한 共同行為가 추정된
경우는 4件뿐이다. 하지만 談合이 금지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合意나 共謀의 증거를
은폐하거나 黙示의 方法으로 談合하게 되어
合意의 存在가 狀況證據로부터 추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寡占企業들은
相互依存性의 業務連絡에 의거하여 자연스
럽게 담합적 결과를 달성하거나 다양한 促
進行為를 통해 黙示的 調整을 이룰 수 있
다. 그러하여 競争政策當局은 推定條項을
活용하여 담합을 적발/처벌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相互依存性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인식의 근거로 동향하는 경영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경영자와 단순한 상호의존성의 경영자로 적절한 조건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依存性의 양이 급격히 증가할 수는 없으므로 경영자와 상호의존성을 총합한 판단은 필요하다. 

第19조가 개시된 이후에 행위로부터 추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 응답/단순한 상호의존성의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하여 그 양의 양의 중첩에 의한 상호의존성을 의식하는 한편에 기초하여 품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행위의 가능성이 제시로부터 사례가 추정되고 있다. 

同調行為로서의 품질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상호의존성의 상호의존성이나 공동의 반응이 편견적이라고 한다. 

Posner(1976)의 제안대로 상호의존성의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을 상호의존성에 의한

순수한 同調行爲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黙示의 談合에 대한 推定條項의 適用이 제한되고 있다.

 우리는 合意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同調行爲와 단순한 相互依存性—단지 경쟁자들의 행위에 반응한 결과로 나타나는 同調行爲—을 구별하고 단순한 상호의존성이나 우연 또는 공동의 市場変化에 대한 독립적 반응으로는 생기지 않을 ‘부자연스러운 同調行爲’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자들의 同調行爲가 合意나 共謀의 결과인 지 아니면 공동적 시장상황에 대한 정상적・독립적 反응인지를 판단할 根據가 필요하게 되는바, 우리는 同調行爲 이외의 상황증거들을 검토하여 合意의 存在를 추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同調行爲의 증거 이외에 독립적 행위보다는 共謀과 더 잘 부합하는 상황증거들이 있어 同調行為가 사업자들의 정상적・독립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면 合意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同調行為가 사업자간의 合意의 결과인 경우에는 대개 순수한 同調行為를 넘어서는 행위들의 증거가 있다. 이 ‘追加要素들'(plus factors)－同調行為가 合意의 결과임을 시사하는 추가적 사실이나 행위들－에는 여러 類


(1) 明示의 談合의 徵表：이는 사업자들 간에 共謀나 合意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예컨대 복잡한 注文生産品에 대한 同一価入札은 명시적 談合이 없는 일어날 수 없음을 것이므로 共謀의 추정을 완벽히 침니다. 또한 해명되지 않는 사업자들의 會合, 電話通話, 情報交換, 假裝入札(sham bid), 보이콧, 입찰거절, 그리고 우연이기에 그는 무균 전달하거나 별개적인 동조행위 등은 共謀나 合意가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다.

(2) 자가 利益에 반하는 動機와 行為： 어떤 행위가 타사업자들도 행하는 경우에만 행위자의 利益에 부합하고 단독으로 이루어 지면 그의 이익에 반할 것임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으면 共謀가 推定될 수 있다. 이는 대개 문제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事業上 理由’의 不在을 지정한다. 즉 각 사업자의 행위가 독립적 動機로 설명될 수 없고 다른 사업자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리적이 라면 同調行為가 共謀를 암시한다는 것이 다. 제품의 인위적 표준화, 공급과잉기간중의 價格引上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들이다.

(3) 經済의 成果：지속적 超過利潤, 超競争의 價格, 또는 需要나 費用下跌期의 가격 상승 등과 같이 市場成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중개들이 공의의 존재를 반영할 수 있다. 47) 하지만 비 경쟁의 시장과의 공의 존재가 반드시 공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47) 메종드 American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 S. 891 (1946)을 볼 것.

라. 促進行為의 規制

事業者들은 다양한 促進行為를 통해 談合의 障礙要素들을 극복하고 默示의으로 談合을 달성・유지할 수 있으며, 경쟁자(들)에게 規制의 시장分割등을 提議・要請하여 談合을 企圖할 수도 있다. 하지만 公正去來法에는 談合을 促進・企圖하는 行為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없다. 法第19조는 8 가지 봉변나리 행為의 合意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나 동조적으로 행해지는 促進行為와 같이 反競争의 效果를 초래하지만


47) 메종드 American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 S. 891 (1946)을 볼 것.
48) Demsetz（1974）는 高集中市場에서도 大規모 기업들의 利潤이 높았음을 보이면서 이는 그들의 우월한 效率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競争政策當局은 事業者들의 風靡的な 調整을 가능케 하는 談合促進・要請行為를 금지할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默示的 談合을 違反할 수 있다. 먼저, 促進行為가 合意의 破壊이라면 見直行為의 效率을 提議・要請하여 談合을 企圖할 수도 있다. 하지만 公正去來法에는 談合을 促進・企圖하는 行為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있다. 法第19조는 8 가지 봉변나리 行為의 合意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나 동조적으로 행해지는 促進行為와 같이 反競争의 效果를 초래하지만
도 적용될 것이다.  

시장의 일부 또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단독으로 강제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강제진행사가 목적적 담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용용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진행사의 경쟁의 효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달려 있으며, 사업자가 강제진행사를 하는 데는 의무 및 정당한 사로에서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경쟁규제의 분석의 핵심사항이다. 예컨대 경쟁의 상위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에 의한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 경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강제진행사의 동조가 경제진행사의 핵심적 조건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진행사의 양질이 요구하는 상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강제진행사 자체가 경쟁의 방해로 인해 사회가 의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 없이 강제진행사의 동조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담합요청이 수락된다면 그에 따른 강제진행사 결과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강제진행사의 동조는 강제진행사의 조직적 의무가 있고 있는 경우, 강제진행사의 동조는 독점적 제한은 기존의 성과가 있는가 하면, 강제진행사의 동조는 독점적 제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극히 강제진행사의 동조에 대한 적도의 법은 효율적 경쟁행사를 일으키는 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절한 기관이 관리되어 있는 평범한 카르텔화가 목표하기에 쉽다.

4. 경쟁제한의法令의 줄어

우리 경제에서는 법과 행정에 의한 금지강제진행사가 행해지고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경쟁제한의法令들은 가격안
정, 過當競爭 防止, 消費者保護 等을 목적
으로 삼고 있으며 產業政策의 目的의 달성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며, 인적재산이나 공
동행위 등에 의한 市場競争의 억제는 被規
制集団의 利益을 보호하는 방면이 되고 競
爭政策의 效果를 제약하는 등 그 본래의 목
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혼합된다. 또한 法律에 의거하지 않은 行政指
導가 規制적・非規制적 规制수단으로 왕범
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特히 事業者集団에
대한 壓力, 生産力, 설비조정 등의 行政指
導는 共同行為を 助長하여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談合同行為에 대한 강력한 競争政策의 對應과
더불어 競争制限의 法律과 行政指導가 축소
되어야 市場競争의 提高를 통한 經済效率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政府規制보다는 市場競争의 導入・促進
이 產業競争力을 강화하고 物價安定을 달성
할 수 있는 效率的 手段이라는 認識의 전환
이 필요하다. 어떤 시장에서든 新規進入이
나 기존 경쟁기업의 同業者에서 사업자들은
效率提高を 위해 努力하고 壓力를 낮추게
되는 것이므로 市場競争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면 壓力는 競争政策의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諸田 規制緩和가 市場競争의 強化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競争政策이 강화되어야
한다. 談合이 效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
우, 政府規制의 완화로 사업자들간의 競爭
이 축소되면서 壓力가 하락하는 경우를 많
이 볼 수 있다. 競争制限의 法律과 導入을
強制性으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公
正去來法上の 競争制限의 法令制定・處
分 등의 準則規定이 強制力を 갖도록 하고,
法案審議에 競争政策當局의 見解와 評價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權五姫, 「不當한 共同行為의 制限」, 公正去
來法 施行 10周年 紀念 學術大會 發表
公正去來委員會 獨占管理局, 「獨占管理局
業務便覽」, 1993.
金英鎬, 「不當한 共同行為의 違法性 判斷基
金nelle, 「11개 損害保険社의 保険引受 共
同行為」, 『公正去來』, 1991. 4, pp.117
~120.
朴準吉, 「30개 LPG충전소의 不當한 共同行
為」, 『公正去來』, 1991. 4, pp.125~
128.
申光混, 『市場去來の 規制と 競争政策』, 韓


Clark, D. S., "Price-Fixing Without Co-
Marvel, H. P., J. M. Netter, and A. M. Robinson, "Price Fixing and Civil Damages: An Economic Analy-
본고는 생산성과 성장률간의 조화의 성장과정이라 불리는 Kaldor의 균형모델을 기초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저질환율을 통한 빠른 성장성장을 추구한 것이 87년 이후로 고용구조화 및 농업발달은 감소하는 분화형 성장모형을 갖게 되었다. 과거 선진국에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포미지'적 성장체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相互依存성이 크게 증대되고, 과거와는 그때는 원조의 성장(globalization)하에서는 과거의 시장과 포괄적인 구조 자체가 의도를 먹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빠른 성장과 내需가 독립적이지 않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총생산 실현을 높이지 못한 것이며, 버튼 유지가 아니라 유통이 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I. 序論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생의 농요한 농업을 바탕으로 한 빠른 성장성장을 위해 시도한 고도성장의 성장성장과 수요로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라의 성장성장은 신봉의 노동국 혹은 후발국 경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笔者：本院 研究委員

*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본원의 인숙 전, 복동호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본고의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한국경제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가 자기를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해야 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두
축을 구성해 온 '剩餘労動力과 輸出이 어떻게 결합되어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최근의 노동력부족시대를 맞이하여 또 수출
이 성장에 주는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
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高成長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성장이 유지될 수 없다면 어떠한
성장체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주요 資本主義國家의 成長過程, 특히
제2차 世界大戰後 進先 資本主義諸國에서
나아가 성장동력을 가능하게 하였던 「포디즘」(for-
dism)과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자본주의제국의 주요한 성장양식
인 「포디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成長樣式을 규정하고 그 建造의 轉換可能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生產
性이 directive로 취급되는 巨視模型의 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양식의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를
서는 최초로 생산성의 내생적 변수로 파악
한 Kaldor의 累積의 成長モデル를 살펴본다.
Ⅲ.에서는 閉鎖的 與 開放의 경제의 둘 하에
서 이를 建造모델로 확대시킨 Boyer와
Thirwall의 모델을 다룬다. 특히 Boyer의
모델을 통해 전후 전진국의 고도성장을 가
져온 「포디즘」의 특성을 규정해 본다. Ⅳ.에
에서는 이러한 비합 위에서 한국경제의 모
델을 추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다. V.에서는
한국경제의 建造의 變化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어떠한 성
장체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전
망을 한다.

II. Kaldor의 累積的 成長過程

 일반적으로 成長樣式에 대한 연구는 生產
性이 어떻게 장출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장
출된 生產性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經濟成
長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Kaldor의 累積의 成長모델
(cumulative growth model)을 분석의 출
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Kaldor는 美國 經濟成長의 沈滞에 관한
연구로부터, 첫째 製造業部門은 다른 모든
부문의 경제성장속도를 지배하는 經濟成長
의 原動力(engine of growth)이며, 둘째
製造業의 生產性增加率은 製造業의 成長率
에 비례하고, 셋째 經濟全體의 生產性增加
는 製造業의 고용증가에 비례하며 非製造業
에서의 고용증가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3개
의 경제성장가설을 제시하였다. 1)

1) Kaldor의 詞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Spring
   1983의 Kaldor심포지엄특집 및 Thirwall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은 이른바 Kaldor-Verdoon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하는 제2법칙이다. [그림 1]은 제조업의 생산성증가율과 성장률간의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림 1]을 보면 선진국(OECD국가)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률에 비해 생산성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증가율이 낮게 나타나 양자간 경제구조의 차이를 시사한다. <표 1>은 선진 5개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패턴을 요인별로 보다 자세하게 대비한다. 선진 5개국의 경우 1960년 이후 20년대 전반기 동안의 경제성장은 거의 생산성의 상승에 힘입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노동고용의 증가가 생산성 상승보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성장체제는 크게 대비가 된다.

그러면 Kaldor의 법칙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 구조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표 1> 주요국의 경제성장요인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경제성장률</th>
<th>임금증가률</th>
<th>생산성성장률</th>
</tr>
</thead>
<tbody>
<tr>
<td>미국(1960~73)</td>
<td>4.3</td>
<td>1.4</td>
<td>2.9</td>
</tr>
<tr>
<td>영국(1960~73)</td>
<td>3.8</td>
<td>-0.7</td>
<td>4.5</td>
</tr>
<tr>
<td>프랑스(1960~73)</td>
<td>5.9</td>
<td>0.0</td>
<td>5.9</td>
</tr>
<tr>
<td>독일(1960~73)</td>
<td>5.1</td>
<td>-1.1</td>
<td>6.2</td>
</tr>
<tr>
<td>일본(1960~73)</td>
<td>10.9</td>
<td>2.2</td>
<td>8.7</td>
</tr>
<tr>
<td>평균</td>
<td>6.0</td>
<td>0.4</td>
<td>5.6</td>
</tr>
<tr>
<td>한국(1960~89)</td>
<td>8.6</td>
<td>4.7</td>
<td>3.9</td>
</tr>
</tbody>
</table>


\[ PR = aQ + \beta \] ..........................(1)
\[ Q = aPR + b \] ..........................(2)

여기서 \( PR \)은 생산성증가율, \( Q \)는 성장률이다. (1)식은 성장률의 상승이 생산성증대를 가져오는 인과과정, 즉 Kaldor의 2법칙을 보여주며, 해수 \( a \)는 규범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2)식은 생산성의 증대가 성장률에 미치는 관계를 보여준다. (1), (2)식을 각각 \( PR \)식과 성장률(\( Q \)식)으로 부르자.

Kaldor의 방정식체계는 생산성을 내생화시키는 데 하나의 다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 창조방식에서라기보다는 그 구조내의 여러가지 경제적 메커니즘을 사상하고 있는 둘 문제시기 때문에 각국의 다양한 성장 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일각의 경제성장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비, 투자, 수입 등 주요 거시적 변수들을 동시에 결정하는 창조모형의 그 안으로 Kaldor모형을 확대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Kaldor의 두가지 성장 과정을 창출시키는 거시적 성장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양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III. Kaldor-Boyer-Thirwall 모형


1. Boyer의 모형과 「포디즘」

Boyer는 생산성증가가 소비에 주는 효과와 재고에 대한 재고를 분석함으로써 전후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경제성장은「포디즘」(Fodism)으로 특징지었다. 「포디즘」이란 2차 세계대전후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고도성장 을 가능케 하였던 농도생산-대용량생산에 의한 심화된 노동분업과 관리의 쌍방독도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노동분업의 심화는 2차 세계대전후 선진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다. 전후 자본주의제국에서는 계획과 시행, 생산과 재정, 마케팅과 자금조달 등 캐딩의 분담으로 제조업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의 적의 기술, 사회의 분업이 촉진되었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생산이라는「포드」주의적 생산위치가 산업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분업 및 특화의 심화는, A. Smith가 강조하였듯이, 규모의 경제체를 통해 대부분의 자본주의탁자에게서 생산성의 전례 없는 상승을 가져왔다.

2차 세계대전후 선진국 경제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재고 결정방식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금결정은 노동력의 소비성이 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거의 개별의, 경쟁의 조정과정으로부터 강인한 노동조합을 통해 집산화, 관리화되었다. 그 결과 임금협상에서 있어 소비가 경우에는 몇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됨으로써 재고와 물가의 조정이 일반화되었다. 보다 중요하게, 임금이 생산성의 요소로서 밀접하게 조정되고 생산성상승에 일치하는 임금상승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임금은 더 이상 시장변수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
노동조건의 이러한 타협은 노동자가 「포드주약」의적 생산방법과 기술혁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한 노동자는 생산성 증가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대량소비를 통한 충수요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충분금은 충수요와 균형을 이루며 높은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

「포드즘」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자.

\[ PR = \alpha Q + \beta \]  
\[ N = Q - PR \]  
\[ Q = \alpha C + \beta I \]  
\[ C = c(N + W - P) + d \]  
\[ I = f + gQ \]  
\[ W - P = l + mU + rPR \]

여기서 \( PR \)는 생산성증가율, \( Q \)는 실질생산량증가율, \( C \)와 \( I \)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 \( N \)은 고용변화율, \( W \)는 임금증가율, \( P \)는 가격변화율, \( W - P \)는 실질임금변화율이며, \( U \)는 실업률이고, 소분자는 상수항이나 계수를 나타낸다.

(3)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생산성식(\( PR \)식)으로, Kaldor의 2법칙을 나타낸다. 한편 \( \alpha \)는 이미 지정한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이의 크기는 외연의 혹은 내연의 삶의 균형을 구분하는 침도로 이용될 수 있다. 즉 \( \alpha \)가 0에 가까울수록 축적체제는 외연적 체제에 가깝다. Boyer & Petit에 따르면 선진국(OECD)에서 1950~77년간 \( \alpha \)의 크기는 대략 0.3~0.8 정도로 나타난다.\(^4\)

다음 생산성이 성장률(수요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에 대한 정의식 (4)와 더불어 식 (5)~(8)에 의해 표현된다. (5)식은 충수요가 소비와 투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6)식은 소비가 실질액원계설 (real wage bills)의 함수라는 가정으로부터, (7)식은 투자가 가속도파거일을 따른다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으로부터의 소비성향은 이윤으로부터의 소비성향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킨다. (8)식은 관계가 실질이나 생산성의 함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의 지정한 바와 같이 「포드즘」하에서는 임금증가율이 생산성증가율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계수의 값이 높다.

(3)~(8)식의 구조방정식들은 성장률과 생산성증가율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은 축약식이 얻어진다.

\[ Q = A \cdot PR + B, \]
\[ \text{단, } A = \frac{ac(r-1)}{1-bg-ac}, \]
\[ B = \frac{ad + bf + acl + acmU}{1 - bg - ac} \]

\[ \cdots \cdots \cdots (9) \]

\(^4\) 미국은 0.33으로 가장 낮고 스웨덴은 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0.42로 나타났다. Boyer & Petit(1981) 참조.
임금의 생산성 연동계수 \( r \geq 1 \)이며 (9)식에서 기울기 \( A \)는 양의 값을 가지며, \( r \leq 1 \)이며 음의 값을 갖는다.\(^8\) 결국 (3)식과 (9)식에 의해 유도되는 \( PR \)식과 \( Q \)식의 모양은 계수 \( \alpha \)와 \( r \) 혹은 \( A \)에 의존하며 이들 계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몇 가지의 성장계체가 가능하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여기서는 전 후 선진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포디즘'만에 분석을 제한하기로 한다.\(^9\)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포디즘'하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고 생산성증가는 관리적 임금조정을 통하여 고임금을 가져오므로 Boyer는 '포디즘'을 \( \alpha \)가 높고 \( r \geq 1 \)인 경우로 파악하였다. '포디즘'하에서 \( PR \)식과 \( Q \)식이 만드는 성장과정은 [그림 2]와 같다.

2. Thirwall의 모형과 출력의 역할

'포디즘'의 모형이 주로 폐쇄경제를 대상으로 발견되어 온 데 반해 Thirwall은 개방 경제를 상정하고 일국의 경제성장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수출을 지정한다. 즉 Boyer의 경우 생산성과 소비수요간 관계를 통한 전달과정을 강조하는 데 비해 Thirwall은 생산성과 수출수요간 전달과정을 강조한다. 수출이 경제성장의 축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Keynes의 '효과적 제어론'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Smith의 '재출출론' (vent for surplus)에 의해 잘 강조되었다. Thirwall은 소비나 투자가 모두 생산변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수출만이 생산변화와 독립적인 변수라고 본으로써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Thirwall은 생산성증가율이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내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결국의 근본적 전달과정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시하였다.\(^7\)

Boyer와 Thirwall의 전달과정을 도식을 이용해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5) 위의 1부문(제조업)모형을 확장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2부문모형을 고려하자. 이 경우 임금이 각 산업에서 동일하고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 \theta \)라 하면 (9)와 같은 성장률식이 양의 기울기를 가질 조건은 생산성 연동계수가 제조업의 고용비중보다 크면 된다. 즉 \( r > \theta \)이면 성장률은 생산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7) 보다 자세한 논의는 Thirwall(1987) 참조.
IV. 韓國經濟成長的 基本構造

Boyer의 모형은 내수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Thirwall의 모형은 수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Thirwall적 전달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자를 종합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석의 대상이 경제체제 차원이 아니라 제조업부문의 성장률과 생산성증가율간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체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 N = aQ + \beta + \gamma IOY \]  \hspace{1cm} (10)
\[ N = Q \]  \hspace{1cm} (11)
\[ Q = q + aC + bX + dMS \]  \hspace{1cm} (12)
\[ C = f + c(N + W - P) - eCM \]  \hspace{1cm} (13)
\[ X = g - h(P - E) + iYF + zCAT \]  \hspace{1cm} (14)
\[ P = j + k(W - PR) + l(PW + E) \]  \hspace{1cm} (15)
\[ W = s + nP + qU + rPR \]  \hspace{1cm} (16)

여기서 내생변수는 \( N, Q, PR, W, C, X, P \)로 7개이고, 외생변수는 \( IOY, MS, CM, YF, CAT, PW, E, U \)로 8개이다. 위의 방정식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은 <表 2>와 같다.

추정에 앞서 각 형태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Kaldor의 2法則

생산성의 정의에 관한 (11)식을 (10)식과 결합하면 앞서서와 같이 제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수요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는 Kaldor의 2법칙이 얻어진다. 또한 技術進歩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다. Kaldor의 기술전환함수에 따라
表 2) 變數説明表

<table>
<thead>
<tr>
<th>變數名</th>
<th>變數説明</th>
<th>單位</th>
</tr>
</thead>
<tbody>
<tr>
<td>N</td>
<td>제조업의 고용</td>
<td>증가율</td>
</tr>
<tr>
<td>Q</td>
<td>제조업의 산출(85년 기준)</td>
<td>증가율</td>
</tr>
<tr>
<td>PR</td>
<td>Q-N로 유도되는 정의식</td>
<td>증가율</td>
</tr>
<tr>
<td>W</td>
<td>제조업의 임금</td>
<td>증가율</td>
</tr>
<tr>
<td>C</td>
<td>최종소비지출(85년 기준)</td>
<td>증가율</td>
</tr>
<tr>
<td>X</td>
<td>수출(85년 기준)</td>
<td>증가율</td>
</tr>
<tr>
<td>P</td>
<td>GNP지표계(85=100)</td>
<td>증가율</td>
</tr>
</tbody>
</table>

외생변수

<table>
<thead>
<tr>
<th>요인</th>
<th>총수출/GNP</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MS</td>
<td>제조업산출/GNP</td>
<td>증가율</td>
</tr>
<tr>
<td>YF</td>
<td>미국과 일본의 가중계정강률</td>
<td>증가율</td>
</tr>
<tr>
<td>CM</td>
<td>소비재수입(85년 기준)</td>
<td>증가율</td>
</tr>
<tr>
<td>CAT</td>
<td>자본재수입(85년 기준)</td>
<td>증가율</td>
</tr>
<tr>
<td>E</td>
<td>대미환율</td>
<td>증가율</td>
</tr>
<tr>
<td>PW</td>
<td>수입물가</td>
<td>증가율</td>
</tr>
<tr>
<td>U</td>
<td>실업률</td>
<td>비율</td>
</tr>
</tbody>
</table>

경제전체의 投資率 (IOY)이 기술진보의 대용函數(proxy)로 사용되었다. 8) 9)

需要敘述

수요불록은 방정식 (12), (13), (14)로 구성된다. (12)식은 제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국내소비와 수출에 의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前章에서 살펴본 Boyer의 폐쇄경제모형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대신 소비와 수출수요에 의존한다. 투자물 뿐 있는 투자가 제조업의 총수요나 수출 혹은 소비에 비례하여 내생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MS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전체의 변수인 소비와 수출을 제조업의 수요와 관련시켰기 때문이다. (13)식은 국내소비수요 (C)가 소비재수입 (CM)과 代替關係에 있다 고 하는 가정을 제외할 수 없고 Boyer모형과 동일하다. 추정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임금소득증가율을 경제전체의 소비수요와 관련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소비는 經済全体의 임금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製造業의 임금소득을 경제전체의 임금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임금소득증가율은 경제전체의 임금소득증가율과 같이 움직이므로 총고에서는 가능한 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정식을 사상하고 간단히 제조업의 임금소득증가율에 소비증가율을 관련시켰다. 한편 소비재수입은 국 내소비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였고 실제 추정에 있어서 총수입에서 자본재수입을 감한 모든 수입을 소비재수입으로 간주하였.

8) 이에 관해서는 Kaldor(1957) 참조.
9) 이외에도 임금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본고의 논의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사상한다. 실제로 임금변수를 도입하였을 경우 다음과서는 분명히 설명력의 향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값도 극히 작게 나타나 임금변수를 도입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이론적으로도 이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Kaldor의 이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169
다. (14)식은 수출수요가 상대가격과 해외소득의 함수라는 일반적 가정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상대가격으로서는 국내 GNP의 폴레이터 \(P\)를 원화표시 대비환율 \(E\)로 나눈 지표를 사용하였다. 한편 해외소득 \(YF\)에 대한 지표로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양국의加重 경제성장률을 이용하였으며 자본제수입을 수출수수에 포함시킴으로써 방정식의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 가격 및 환율블록

(15)식은 가격이 단위로도에 마크업 (mark-up)을 기준으로서 결정된다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되었다. 또한 개방경제를 가정하므로 해외물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다. (16)식은 업금결정방정식을 나타내며, 여기서 업금은 물가, 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급상태를 나타내는 실업률의 함수라 가정된다.

지난 30여년 동안(1962~9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모형과 도출방식을 추정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방정식은 연립방정식체계에서 2단계회귀추정법을 이용하였다.

**推定結果**

\[
N = -0.10 + 0.90 Q - 0.04 \ln \text{IOY} \\
\text{R}^2 = 0.54, \quad DW = 1.85
\]

\[
PR = Q - N
\]

\[
Q = -0.01 + 1.03 C + 0.25 X + 0.60 MS \\
\text{R}^2 = 0.79, \quad DW = 1.92
\]

\[
C = 0.03 + 0.23(N+W-P) \\
\text{R}^2 = 0.42, \quad DW = 2.23
\]

\[
X = 0.07 - 0.44(P-E) + 0.02 YF \\
\text{R}^2 = 0.46, \quad DW = 1.34
\]

\[
P = 0.02 + 0.63(W-PR) + 0.13(PW+E) \\
\text{R}^2 = 0.60, \quad DW = 2.37
\]

\[
W = -0.19 + 0.58 P + 0.28 P_{-1} \\
\text{R}^2 = 0.56, \quad DW = 1.42
\]

(표준 오차의 수치는 \(t\) 값)

구체적인 추정과정에서는 소비와 물가함수와의 경우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시차를 고려하였다. 방정식들에 대한 결정계수는 대체로 0.4~0.8의 수준으로 추정변수들이 모두 중간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대체로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방정식 체계내에서 개별변수들의 유의도도 대체로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론적 발전이 복잡히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과 가정 변수의 결정에 있어서 생존성의 유의성이 예외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
보면 우선 기술진보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진보가 고용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가 혹은 기술진보로서 사용된 대용변수 IOY가 적절하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임금결정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와 동일시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Boyer의

12)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저임금에 기본을 두고수출증대를 통해 공업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기준의 하향조정 및 노동운동체의 제약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임금결속에 있어 노동조합의 협약 약하였고 노사간의 급급한 사용자격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순 및 숙련 전문가에 있어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87년의 6·29를 통한 폭발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이러한 체제는 더 이상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갖는가, 즉 Boyer의 용어를 빌면 ‘경쟁의’인가 아니면 ‘관리의’인가에 대한 자체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동시장구조 분석은 Bai(1985)에서도 약간 주로 Lewis적 노동시장의 전환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왔다.

13) 앞서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12) ~ (16)을 결합하여 축약된 성장률식(Q식)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 \{ac(1-k)-bkk\}(r-1)\} /((1-nk)(1-ac)) \)로 나타난다. 여기서 \( ac(1-k)(r-1) \) /((1-nk)(1-ac))는 Boyer적 전달경로에 의한 소비효과를 나타내고, \(-b\)(r-1) /((1-nk)(1-ac))은 Thirwall적 전달경로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를 대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울기의 부호는 생산성 연동계수 r과 수출과 소비의 상관에 대한 기여비율 \bkk /ac(1-k)에 의존한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특히 독일과 미국) 생산성증가율은 임금(실질)증가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사상 선진제국의 경우 임금의 결정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고정적으로 사회화된 포디즘적 성장체제의 출현에 따라 실질임금과 생산성의 연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체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80년대 중반까지 초과노동력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적 임금협상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임금과 생산성간의 제도적 연동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고 판단된다."

\[
PR = 0.10Q + (0.10 + 0.04)IOY
\]

\[
Q = -0.25PR + (0.66 + 0.02)YF + 0.12CAT - 0.21CM + 1.03MS + 0.19E + 0.43(PW + E) - 0.25U
\]

우리나라의 성장양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첫째로 주목할 것
은, (17)식에 나타났듯이 성장률 증가가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0.10으로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신국의 경우 그 효과가 대체로 0.3~0.8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노동력을 크게 향수하는 방식, 즉 외연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즉 과잉노동력을 안고 있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고용효수가 계절적으로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노동집약적·산업의 교체에 의한 성장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중반 이후의 화학화·산업화통지를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적어도 80년대 후반의 본격적·인력부족형태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18)식에서 보듯이 생산성 증가는 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성의 허황률이 낮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빠르고 증가시키는 효과가 높게 된 것으로 보인다.

14) 이러한 관계는 막가지 비슷한 모델구조화에 도대로 설명하되 설명 생산성계수가 허황이 아니라라도 그 계수의 값이 충분히 작은 값임을 가지는 한 본고의 논의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15) 생산성 1단계서 Thirwall적 전달경로를 통한 수출증가효과는 0.30단위로, Boyer적 전달경로에 의한 -0.15단위의 소비감소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16) 최근 선진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신축금(flexibility) 확장노력은 실업률의 변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정책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시도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인한 消費需要減少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드른다. 이와 같이 성장률식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성장은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확대가 아니라 輸出增大나 輸入減少 등을 통한 総需要增大에 크게 힘입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포디즘」양식하에서 외생변수로서 기술개발정책과 총수요증대 정책의 효과를 [표 4]의 그림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외생변수는 生産性式을 이동시키는 변수(예컨대 技術進歩)와 成長率式을 이동시키는 변수(예컨대 輸入減少 및 世界成長, 總合, 採取, 銀行, 總合, 總合)를 통한 輸出增大)의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양 성장양식에 있어 성장률식(Q식)을 상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외생변수의 변화는 모두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나 그 효과가 성장양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表 4의 그림 에서 $a \rightarrow c$와의 이동과 $a' \rightarrow c'$의 이동 비교). 그러나 지금 기술투자의 확대와 같이 생산 성식(PR식)을 上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라면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생산성식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성장양식하에서는 생산성의 증가와 동시에 성장률의 감소가 나타나며, 반 면「포디즘」하에서는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a \rightarrow b$와 $a' \rightarrow b'$간의 비교). 이것은 결국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투자의 확대와 같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외생적 요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출확대 전략을 추구해 온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판단된다. 반면 '포디즘'으로 특정화되는 전후의 선진국 경제에서는 기술투자의 중대와 같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나 혹은 수출의 확대와 같은 성장률증가정책이 모두 중요하며 실제로는前者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

참고로 우리의 모형에서 고려된 몇 가지 외생변수가 성장률과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표 3〉과 같다. 여기서 세계소득, 실업률, 환율, 소비재수입, 자본재수입 등의 변수는 수출을 통해 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외생변수이며, 기술투자는 생산성으로 변동시키는 외생변수이다.
V. 한국 경제의 구조의 변화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자.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 저금 결정시기의 변화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의 저금저축력도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제공된 수입이 상존하여 노동자가 임금상승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임금이 과잉공급상황에서 낮게 유지되었고 정부도 수출을 통한 공업화의 면에서 이러한 임금의 조정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87년 봉사관계의 대변동을 고려로 봉사ardi가 일반화되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크게 상승되면서 임금증가율이 생산성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동시에 임금 결정에 있어 생산성과의 관계가 다른 어느 변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생산 간의 소득분배도 노동에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결국 노동분배율이 87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분배율의 상승은 '포디즘'의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내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5]는 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GNP 대비임금 기준)의 추세를 보여준다. 80년대 말, 특히 87년부터 90년까지 실질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보다 구체적 이유는 기업양계의 반응을 이행하여 임금상승률을 노동분배율의 변화율과 생산성변화율의 합으로 분해한 <표 4>를 살펴보자. 노동 분배율은 보통 노동조합의 조정에 의존한 편으로 변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섭력의 변화가 없으면 영업상승률 = 생산성상승률, 교섭력이 강화되면 임금상승률 > 생산성상승률, 그리고 교섭력이 약화되면 임금상승률 < 생산성상승률과 같은 관계가 가정된다. <표 4>에 따르면

17) 지금 \(W\)를 임금수준, \(L\)를 고용수준, 그리고 \(Y\)를 산출로 나타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즉 \(W = \frac{W}{Y} \times \frac{Y}{L}\). 이 식을 비교하면 임금증가율 = 노동분배율의 변화율 + 생산성증가율의 관계가 성립 한다.
[그림 5] 生産性과 實質貨金變化率의 推移

(%)  
20
15
10
5
0
-5
-10
-15
63 67 71 75 79 83 87 91(년)

생산성증가율  실질임금증가율

注: 生産성증가율은 제조업의 물가변동 부가가치기준이고, 실질임금증가율은 GNP디플레이터기준 제조업의 실질임금률.

[그림 6] 輸出比重의 推移

(%)  
45
40
35
30
25
20
15
10
5
63 67 71 75 79 83 87 91(年)

注: 輸出比重은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표 4) 製造業部門의 貨金 및 生産性 推移

(단위: %)

<table>
<thead>
<tr>
<th></th>
<th>1인당 인건비증가율(1)</th>
<th>1인당 부가가치증가율(2)</th>
<th>노동분배율(3)</th>
<th>(4)=(3)/(1)</th>
</tr>
</thead>
<tbody>
<tr>
<td>81</td>
<td>19.3</td>
<td>28.2</td>
<td>-6.9</td>
<td>-35.7</td>
</tr>
<tr>
<td>82</td>
<td>14.3</td>
<td>12.2</td>
<td>1.9</td>
<td>13.2</td>
</tr>
<tr>
<td>83</td>
<td>12.4</td>
<td>13.4</td>
<td>-0.8</td>
<td>-6.5</td>
</tr>
<tr>
<td>84</td>
<td>12.1</td>
<td>9.5</td>
<td>2.3</td>
<td>19</td>
</tr>
<tr>
<td>85</td>
<td>7.5</td>
<td>9.3</td>
<td>-1.6</td>
<td>-21.3</td>
</tr>
<tr>
<td>86</td>
<td>9.6</td>
<td>13.4</td>
<td>-3.3</td>
<td>-34.4</td>
</tr>
<tr>
<td>87</td>
<td>16.3</td>
<td>17.7</td>
<td>0.6</td>
<td>3.7</td>
</tr>
<tr>
<td>88</td>
<td>25.9</td>
<td>21.1</td>
<td>4.0</td>
<td>15.4</td>
</tr>
<tr>
<td>89</td>
<td>24.9</td>
<td>19.4</td>
<td>4.7</td>
<td>18.9</td>
</tr>
<tr>
<td>90</td>
<td>19.0</td>
<td>18.6</td>
<td>2.2</td>
<td>11.6</td>
</tr>
<tr>
<td>91</td>
<td>18.9</td>
<td>16.9</td>
<td>1.9</td>
<td>10.1</td>
</tr>
</tbody>
</table>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 표 5) 輸出企業과 内需企業의 收益率 比較

(단위: %)

<table>
<thead>
<tr>
<th></th>
<th>수출기업</th>
<th>내수기업</th>
<th>수익률의 차</th>
</tr>
</thead>
<tbody>
<tr>
<td></td>
<td>(1)</td>
<td>(2)</td>
<td>(1')</td>
</tr>
<tr>
<td>81</td>
<td>1.09</td>
<td>0.17</td>
<td>-0.66</td>
</tr>
<tr>
<td>82</td>
<td>0.92</td>
<td>0.37</td>
<td>0.84</td>
</tr>
<tr>
<td>83</td>
<td>2.85</td>
<td>1.67</td>
<td>2.60</td>
</tr>
<tr>
<td>84</td>
<td>3.48</td>
<td>1.43</td>
<td>2.32</td>
</tr>
<tr>
<td>85</td>
<td>2.80</td>
<td>1.80</td>
<td>2.29</td>
</tr>
<tr>
<td>86</td>
<td>4.19</td>
<td>2.29</td>
<td>3.21</td>
</tr>
<tr>
<td>87</td>
<td>3.80</td>
<td>2.04</td>
<td>3.41</td>
</tr>
<tr>
<td>88</td>
<td>4.12</td>
<td>1.53</td>
<td>3.99</td>
</tr>
<tr>
<td>89</td>
<td>1.26</td>
<td>0.84</td>
<td>3.09</td>
</tr>
<tr>
<td>90</td>
<td>1.48</td>
<td>0.62</td>
<td>2.63</td>
</tr>
<tr>
<td>91</td>
<td>1.47</td>
<td>0.95</td>
<td>1.84</td>
</tr>
</tbody>
</table>

註: (1), (1'): 매출액경상이익률
(2), (2'): 매출액순이익률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7년 이후는 그 이전에 비해 노동조합 교섭력의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88년 이후 임금증가율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분배율에 있어서 증가가 있었다. 그 결과 88년 이후 총임금증가율은 약 10~19% 정도가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표 4의 (4) 설명 참조).

둘째로, 출력이 성장에 미치는 역할의 감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표 6]에서 보듯이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87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동시에 내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전에는 수출과 같은 증가추세를 보였던 투자 증가율이 수출보다는 오히려 소비증가율과 밀접히 관계되기 시작하였다. 수출과 소비간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출력과 내需간의 수익률비교에서도 드러난다.

输出企業과 내需企業간 수익률추세를 보면 1987~88년을 고려로 수출기업의 수익률이 이전에는 대략 내수기업의 수익률을 상회하였으나 이후에는 거꾸로 내수기업의 수익률이 수출기업의 수익률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87년 이후의 높은 금리 및 고정비용이 고정비용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의 국제 конкур레이션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말한다. 반면 국내 산업의 경우 임금노동자비용의 증대와 더불어 노동자소득비중의 증대는 점점 국내소비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결과 국내

산업은 수요확대효과에 의한 이익증가로 어느 정도 임금비용의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내수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 结論

87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기간과 및 출력별의 경제의 증가라는 사회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선진국에서 나타난 「포도즙」적 성장성의 위기는 이러한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영국의 몸이 있는 「포도즙」적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의 식수 과도후 몇몇 국가(일본, 독일)를 제외한 선진국 경제가 높은 성장과의 대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포도즙」적 성장형태 자체가 오늘날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다음과의 두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포도즙」적 내화생산방식에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대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던 때 기인한다. 규모의 자가전 확대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때문에 따라서는 적정 생산이 크고 생산방식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유로, 출력과 내需가 독립적일 수
해당하는 큰 무서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여대 소이, 『고경의 巨視經濟效果에 대한 實證

分析과 政策的 含意』, 國民經濟制度研究


南亮進, 『日本的 經濟發展』, 鄭英一(譯),


坂田幹男, 『韓國資本主義的動揺と再編』, 『經


Amsden, A. H.,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Aglietta, M., Régulation et crises du cap-

italisme, Calmann-Lévy, 1982.

Bai, M. K.,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s in Labor Market: the Case of Korea, Institute of De-


Boyer, R.,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La découverte, 1986.

———, “Long Run Growth Revisted:

A Neo-Kaldorian Model”, mimeo,

1987.

———, “Formalizing Growth Regimes”,

G. Dosi, et al.(eds.), Technical Cha-

178


Coriat, B., Penser à l’envers, La découverte, 1991. [花田昌宜(譯), 逆戦の思考, 藤原書店, 1992]


빈 면
補正: 傳貫의 經濟的 效果와 改善方案

朴 元 巖

金 寬 永

저자가 지난날(제15권 제1호)에 기고한 논문 「傳貫의 經濟的 效果와 改善方案」 중 식(10)의 所有住宅需要式은

\[ H = \alpha \beta^t \left[ k \beta^t c(t_1) + (1 - k) \beta^t / c(t_2) \right] \]

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고자 한다.

이와 함께 第Ⅳ章의 住居占有形態決定을 위한 平生週期模型은 傳貫의 설계임차규모 와 전세보증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1) 이를 반영하여 修正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5)의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傳貫貨借規模와 傳貫金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세금은 전세임차규모에 상응하는 傳貫住宅価格의 1/2로 보았다. 또한 주택서비스의 消費로부터 오는 效用을 주거률유형태별로 세분화하였다. \(\alpha_1, \alpha_2, \alpha_3\)를 각각 월세임차, 전세임차, 주택소유에 따른 效用의 消費效用에 대한 加重値라고 하고, \(k\)를 소유할 주택의 가격대비 전세금비율이라고 할 때 식(5)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
\begin{align*}
\max \sum_{t=1}^{n} \beta^{-t} \{\log c(t) + \alpha_1 \log h(t)\} \\
+ \sum_{t=1}^{n} \beta^{-t} \{\log c(t) + 2\lambda_1 kH\} \\
+ \sum_{t=1}^{n} \beta^{-t} \{\log c(t) + \alpha_3 \log \lambda_2 H\} \\
+ \sum_{t=1}^{n} \beta^{-t} \{\log c(t) + \alpha_1 \log h(t)\}
\end{align*}
\]

..............................................(5)

(6) ～ (9)식의 제약조건은 前과 同一하며 식(10)의 一階條件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1) 이 점을 지적해 주신 홍익대학교 세미나 참가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 c(t+1) = \beta (1+r) c(t) \]
\[ h(t) = (\alpha_1 / r) c(t) \]
\[ H = (\alpha_2 \sum_{t=1}^{n} \beta^t + \alpha_3 \sum_{t=1}^{n} \beta^t) / [k\beta^t / c(t)] \]
\[ + (1-k) \beta^t / c(t_2) - \beta^t / c(t_3) \]

\[ \cdots \cdots \cdots \cdots \cdots \cdots (10) \]

이 경우 우리나라 주거점유의 표준적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표 6〉의 표준모수값도 수정되며 〈표 7〉과 〈표 8〉의 표준시뮬레이션의 표준면 및 확대재고도 수치된다. 그러나 논문의 결론은 주택서비스 효용적의 구체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즉 전통적 프로그램에 따른 강제적말재고는 크지 않으며 전통적 화학적 중간단계의 주거점유가 없어지게 되면 소규모의 주택을 앞당겨 구입하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말재고가 제고되고 주거복지도 항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표준모수값

<table>
<thead>
<tr>
<th>( \alpha_1 )</th>
<th>( \alpha_2 )</th>
<th>( \alpha_3 )</th>
<th>( \beta )</th>
<th>( k )</th>
<th>( \lambda_1 )</th>
<th>( \lambda_2 )</th>
<th>( x(7) )</th>
<th>( g^{\circ} )</th>
<th>( r^{\circ} )</th>
</tr>
</thead>
<tbody>
<tr>
<td>1.10</td>
<td>1.25</td>
<td>1.85</td>
<td>0.65</td>
<td>0.25</td>
<td>1.05</td>
<td>6.00</td>
<td>11.0</td>
<td>0.65</td>
<td>1.00</td>
</tr>
</tbody>
</table>

자료: 1) 1인당 실질소득 성장률 년 6.5% 가정.
2) 실질산출률 년 9% 가정.

〈표 7〉 표준시뮬레이션의 표준면 및 확대재고 (첫번째 연령계급세대, 21~28세)

<table>
<thead>
<tr>
<th></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r>
</thead>
<tbody>
<tr>
<td>평생재고면</td>
<td>0.160</td>
<td>0.345</td>
<td>0.645</td>
<td>0.988</td>
<td>0.993</td>
<td>0.489</td>
<td>0</td>
</tr>
<tr>
<td>평생재고면제</td>
<td>0.188</td>
<td>0.244</td>
<td>0.318</td>
<td>0.413</td>
<td>0.537</td>
<td>0.698</td>
<td>0.907</td>
</tr>
<tr>
<td>임대행정체제</td>
<td>月費</td>
<td>債費</td>
<td>債費</td>
<td>自家</td>
<td>自家</td>
<td>自家</td>
<td>月費</td>
</tr>
<tr>
<td>月費 및 자택규모</td>
<td>0.207</td>
<td>0.554</td>
<td>0.0</td>
<td>1.108</td>
<td>0.0</td>
<td>0.998</td>
<td></td>
</tr>
<tr>
<td>金融資産, 期間末</td>
<td>0.149</td>
<td>0.398</td>
<td>0.293</td>
<td>1.160</td>
<td>2.777</td>
<td>6.453</td>
<td>11.0</td>
</tr>
</tbody>
</table>

〈표 8〉 전통적별 시뮬레이션 확대재고

<table>
<thead>
<tr>
<th>(( t_1, t_2, t_3 ))</th>
<th>( k=0.4 )</th>
<th>( k=0.35 )</th>
<th>( k=0.25 )</th>
<th>( k=0.1 )</th>
<th>( k=0.05 )</th>
<th>債費無止</th>
</tr>
</thead>
<tbody>
<tr>
<td>貯蓄率(%)</td>
<td>(1,2.5)</td>
<td>(1,3.6)</td>
<td>(1,3.6)</td>
<td>(1,3.6)</td>
<td>(2,3.6)</td>
<td></td>
</tr>
<tr>
<td>現在 21~28歳 世代의</td>
<td>30.0</td>
<td>28.5</td>
<td>28.5</td>
<td>28.5</td>
<td>26.8</td>
<td>29.2</td>
</tr>
<tr>
<td>買入住宅規模</td>
<td>0.7</td>
<td>0.94</td>
<td>1.11</td>
<td>1.53</td>
<td>1.31</td>
<td>0.69</td>
</tr>
<tr>
<td>住宅資産 /所得比率</td>
<td>9.2</td>
<td>10.4</td>
<td>10.2</td>
<td>9.8</td>
<td>8.4</td>
<td>7.8</td>
</tr>
<tr>
<td>金融資産 /所得比率</td>
<td>12.7</td>
<td>12.6</td>
<td>13.3</td>
<td>14.9</td>
<td>12.7</td>
<td>15.0</td>
</tr>
<tr>
<td>住宅資産 /金融資産</td>
<td>0.73</td>
<td>0.82</td>
<td>0.77</td>
<td>0.66</td>
<td>0.73</td>
<td>0.52</td>
</tr>
</tbody>
</table>

182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제목</th>
<th>저자</th>
<th>출판처</th>
<th>간행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한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영향</td>
<td>김광식</td>
<td>문인재</td>
<td>5新/122쪽</td>
</tr>
<tr>
<td>2</td>
<td>핵전력의 계획화 - 대량의 전기 공급</td>
<td>이하동 옥</td>
<td>양인재</td>
<td>5新/158쪽</td>
</tr>
<tr>
<td>3</td>
<td>한국의 산업의 성장 (1918~1971)</td>
<td>박성용 옥</td>
<td>문인재</td>
<td>5新/250쪽</td>
</tr>
<tr>
<td>4</td>
<td>한국의 경제의 쟁정 및 행태</td>
<td>김광식</td>
<td>문인재</td>
<td>5新/146쪽</td>
</tr>
<tr>
<td>5</td>
<td>한국의 산업의 성장 (1918~1971)</td>
<td>박성용 옥</td>
<td>문인재</td>
<td>5新/250쪽</td>
</tr>
<tr>
<td>6</td>
<td>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td>
<td>홍은호</td>
<td>문인재</td>
<td>A 5新/254쪽</td>
</tr>
<tr>
<td>7</td>
<td>SOCIAL SECURITY IN KOREA</td>
<td>정시훈</td>
<td>문인재</td>
<td>A 5新/198쪽</td>
</tr>
<tr>
<td>8</td>
<td>PUBLIC ENTERPRISE AND BUSINESS IN KOREA</td>
<td>이호주</td>
<td>문인재</td>
<td>A 5新/294쪽</td>
</tr>
<tr>
<td>9</td>
<td>한국의 외환·무역의 원인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336쪽</td>
</tr>
<tr>
<td>10</td>
<td>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td>
<td>홍은호</td>
<td>문인재</td>
<td>A 5新/236쪽</td>
</tr>
<tr>
<td>11</td>
<td>노동공급과 실태 계량화</td>
<td>김현곤</td>
<td>문인재</td>
<td>A 5新/202쪽</td>
</tr>
<tr>
<td>12</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08쪽</td>
</tr>
<tr>
<td>13</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492쪽</td>
</tr>
<tr>
<td>14</td>
<td>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td>
<td>김정호</td>
<td>문인재</td>
<td>A 5新/342쪽</td>
</tr>
<tr>
<td>15</td>
<td>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td>
<td>김정호</td>
<td>문인재</td>
<td>A 5新/342쪽</td>
</tr>
<tr>
<td>16</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17</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18</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19</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20</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21</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22</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23</td>
<td>한국의 전력요원의 성장 및 영향</td>
<td>손영희</td>
<td>문인재</td>
<td>A 5新/532쪽</td>
</tr>
<tr>
<td>제목</td>
<td>저자</td>
<td>출판</td>
<td>페이지</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PRIMARY HEALTH CARE IN KOREA</td>
<td>延河清 著</td>
<td>A5新/214쪽</td>
<td>48</td>
<td></td>
</tr>
<tr>
<td>韓國 經済・社会의 近代化</td>
<td>金滿堤 外</td>
<td>A5新/530쪽</td>
<td>47</td>
<td></td>
</tr>
<tr>
<td>رقم65</td>
<td>李天杓 著</td>
<td>半洋裝/5,000원</td>
<td>48</td>
<td></td>
</tr>
<tr>
<td>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td>
<td>朱銀中 著</td>
<td>A5新/432쪽</td>
<td>49</td>
<td></td>
</tr>
<tr>
<td>國民経済와 福祉年金制度</td>
<td>延河清 共著</td>
<td>A5新/428쪽</td>
<td>50</td>
<td></td>
</tr>
<tr>
<td>韓國의 経済開發과 人口政策</td>
<td>R. 레페토 外</td>
<td>A5新/328쪽</td>
<td>52</td>
<td></td>
</tr>
<tr>
<td>韓國의 金融發展：1945~80</td>
<td>D.C. 時 共著</td>
<td>A5新/334쪽</td>
<td>53</td>
<td></td>
</tr>
<tr>
<td>韓國의 賃金構造</td>
<td>朴政求 共著</td>
<td>A5新/440쪽</td>
<td>54</td>
<td></td>
</tr>
<tr>
<td>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td>
<td>金光錫 共著</td>
<td>A5新/238쪽</td>
<td>55</td>
<td></td>
</tr>
<tr>
<td>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td>
<td>金重雄 共著</td>
<td>A5新/264쪽</td>
<td>56</td>
<td></td>
</tr>
<tr>
<td>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td>
<td>李啓植 著</td>
<td>A5新/280쪽</td>
<td>58</td>
<td></td>
</tr>
<tr>
<td>韓国企業管理政策</td>
<td>宋大熙 著</td>
<td>A5新/310쪽</td>
<td>61</td>
<td></td>
</tr>
<tr>
<td>韓國的 历史的 照明</td>
<td>具本湖 編</td>
<td>A5新/368쪽</td>
<td>62</td>
<td></td>
</tr>
<tr>
<td>分配不均等의 実態와 主要政策課題</td>
<td>權模源 外</td>
<td>A5新/462쪽</td>
<td>63</td>
<td></td>
</tr>
<tr>
<td>韓國 財閥部門의 経済分析</td>
<td>丁炳植 共著</td>
<td>A5新/324쪽</td>
<td>64</td>
<td></td>
</tr>
<tr>
<td>市場去來의 規制와 競争政策</td>
<td>申光湜 著</td>
<td>A5新/426쪽</td>
<td>65</td>
<td></td>
</tr>
<tr>
<td>企業結合－経済の 效果와 規制</td>
<td>李奎億 共著</td>
<td>A5新/506쪽</td>
<td>66</td>
<td></td>
</tr>
</tbody>
</table>
製造業의 總要素生産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半洋裝 / A5新 / 282쪽 / 定價 7,400원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半洋裝 / A5新 / 240쪽 / 定價 6,000원

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半洋裝 / A5新 / 234쪽 / 定價 6,000원

韓國의 流通產業
半洋裝 / B5 / 196쪽 / 定價 5,200원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半洋裝 / A5新 / 198쪽 / 定價 5,000원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半洋裝 / A5新 / 322쪽 / 定價 7,600원

企業結合－經濟的 效果과 規制
半洋裝 / A5新 / 508쪽 / 定價 11,000원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半洋裝 / A5新 / 330쪽 / 定價 8,000원

KDI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遞함.
（但，自體資料 및 配布限資料는 제외）

※ 會費 70,000원

※ 加入方法
※ 約定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拊入하거나,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010983-31-0514919)에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交) 305)